

화 재 진 압 에 서

사 고 수 습 까 지

7 개 월 간 의 기 록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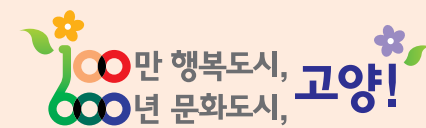
가슴으로 기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 · · 시민행복은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안전 중심의 시정 계획
10대 행복프로젝트를 발판으로
고양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00만 행복도시를 가꿔갑니다.

**100만 행복도시,
100만 안전도시!**



A full moon is visible in the upper right quadrant of the image, surrounded by soft, white clouds. A vibrant rainbow arches across the lower half of the frame. Two birds are seen in flight: one in the upper left and another in the center, both silhouetted against the lighter sky.

안전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도시,

고양

비 개인 후 무지개 위에 떠 있는 달빛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모비 中)

비 개인 후
무지개 위에 떠있는 달빛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2014. 5. 26.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지난해 5월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2분만에 소방인력이 긴급 출동하고 고양시·소방서·경찰·민간단체·자원봉사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인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급속히 퍼지는 화마와 시커먼 연기에 스러져 가는 시민의 생명을 전부 구하지 못하고 결국 9명의 사망자와 1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고양시 초유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 각 병원에 별도 전담반을 파견하고 원인자 회사들과 유가족 간 원만한 보상협의를 중재하며 최대한의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사’, ‘사고 책임자의 처벌’ 원칙을 세우고, 분명하고도 강력한 사고수습 의사를 일산경찰서에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고 고양시에서도 지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이후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물론, 예방, 홍보, 교육, 점검, 현장대응, 사고수습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를 새롭게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등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재난이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시련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훈련, 예방, 교육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본 백서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 우리시,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의 책임에 대하여 다같이 반성하며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입니다.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시간은 2014년 5월 26일 아침에 멈춰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채 세상을 떠난 중국 청년, 어린 남매를 두고 이제 막 취업하여 새로운 희망에 차 있던 젊은 엄마 등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더 없이 소중한 우리사회의 일원이었기에 참으로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상에서 편히 쉬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부상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 어서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지게차를 동원하여 인명을 구조했던 분, 자원봉사로 소방관을 도와 주셨던 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해주셨던 분, 고생하는 소방관을 격려해주신 분, 심리상담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함께 걱정한 시민들... 모두가 의인(義人)이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고양시민들의 따뜻한 온기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

최성

01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고양종합터미널

- ▷ 2014년 5월 26일, 화재 발생 _____ 016
- ▷ 아비규환 속 초동대응 _____ 022
- ▷ 화마와의 전쟁 _____ 030

02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 ▷ 왜 이토록 큰 대형 참사로 번졌나? _____ 038
- ▷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_____ 052
- ▷ 수사와 재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_____ 068

03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 ▷ 합당하고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하여 _____ 078
- ▷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업 _____ 098
- ▷ 반성, 그리고 다짐 _____ 104

04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 ▷ 고양시의 재난재해 대응 변화 _____ 112
-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복지 정착
- | 재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 제도 개선 및 유기적 조직 변화
- 화재사고 이후 재난재해 대응 사례
- ▷ 소방서 재난 대응 변화(일산소방서) _____ 136

05

아픈 시련이 남긴 앞으로의 과제

- ▷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골든타임 사수 _____ 144
- ▷ 지방자치단체 중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_____ 147

세월호와 고양터미널 화재 그 님은꼴과 다른점 _____ 150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조언 _____ 159

부록 _____ 181

고양종합터미널 일자별 화재사고 개요

2014. 05.

5월 26일

- 09:02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
- 09:15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09:29 화재진압 완료
- 10:30 임시 터미널 운영
- 16:30 사고수습대책회의 개최
- 21:30 사고수습 2차 대책회의 개최

5월 27일

- 09:10 부시장님과 유가족 면담
- 10:15 유가족 지원대책 회의
- 10:30 국과수, 검찰 합동으로 정밀감식 실시
- 14:00 화재사고 관련 업체 면담
- 15:00 동국대병원에 합동분향소 확보

5월 28일

- 07:00 부검을 위하여 시신 7구 국과수 이동
- 09:30 사망자 신○○(백병원) 시신 국과수 이동
- 10:30 불이학교 학생 40명 심리치료상담
- 11:00 병원 5개소에 치료비 등 지급보증 공문 발송
- 11:10 한국시설안전공단 고양종합터미널 정밀점검 실시
- 15:00 유가족 합동 브리핑



5월 29일

- 05:30 사망자 김○○(동국대병원) 발인
- 06:05 고양터미널 임시매표소 운영, 정상운행 시작
- 10:30 사망자 정○○(동국대병원) 발인
- 11:40 사망자 김○○(명지병원) 발인
- 11:40 사망자 6명 장례비용 합의
- 15:30 소방방재청 고양종합터미널 안전관리실태 점검

5월 30일

- 05:00 사망자 이○○(현대아산병원) 발인
- 09:40 사망자 김○○(동국대병원) 발인
- 10:30 터미널 임시 승차장 천막 3개 설치
- 12:00 사망자 신○○(동국대병원) 발인
- 14:00 중상자 김○○ 자녀 가정 방문 및 심리치료
- 15:00 사고수습지원반체제로 전환
- 18:00 부시장님 중상자 병원 방문

5월 31일

- 07:00 사망자 신○○(파주병원) 발인
- 09:20 부상자 김○○(한강성심병원) 보호자에 직원 파견
- 18:00 고양시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상황근무부서 조정

06.

6월 1일

- 04:40 사망자 이○○(동국대병원) 발인
- 17:30 경상 1명 추가 발생

6월 2일

- 10:10 사망자 김○○ 유가족 의사자(시민상) 상신 요청
- 18:00 소방방재청장에게 보상협의체 구성 특별지원요청 서한문 발송
- 18:00 사고수습지원반원 18명 교육

6월 3일

- 15:00 사고수습 보상협의체 구성 관련 회의
- 16:00 부상자 김○○(일산병원) 퇴원

6월 5일

- 17:00 국과수 감식 종료(발화지점은 계속 감식)

6월 10일

- 11:10 맥쿼리, 한국터미널운영 관계자 시청방문 면담
- 18:00 유가족 및 중상자 가족 면담에 따른 요구사항 전달

6월 12일

- 13:00 원인자 측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6월 18일

- 유은혜 국회의원, 피해자 측 : 원인자 측 면담추선 요청

6월 19일

- 고양종합터미널 임시 출입 재개
- 복구작업 가능 업체 현장 설명회

6월 27일

- 고양종합터미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완료



07. 10.

- 보상협의 최종 타결
- 피해자 합동위원회 추모비 건립 요구

09. 16.

- 사고 원인 관련자 7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10. 04.

- 뇌사 상태로 치료 중이던 김○○(백병원) 사망

2015. 01. 30.

- 희생자 추모비 건립



01

화재 발생,
초동대응 및 화재 진압

5월 어느 날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고양종합터미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화마가 고양시를 덮쳤다.

시민을 시외로 연결해주던 고양시의 관문 고양종합터미널에

사상 초유의 대형 화재라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예고 없는 돌발상황에 모두가 황망했던 그날.



2014년 5월 26일, 화재 발생

평소와 다른 없던 고양종합터미널.

개장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졌고

고양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거듭되는 안전사고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고양종합터미널

- 2014년 5월 26일, 화재 발생
- 아비규환 속 초동대응
- 화마와의 전쟁





※고양종합터미널 건축물 현황

-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 대지면적 : 27,029.3㎡
- 연 면 적 : 146,071.39㎡
- 건축규모 : 지하 5층 / 지상 7층
- 주 용 도 :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사용승인 : 2012. 03. 21

고양시의 관문이자
문화생활의 장, 고양종합터미널

2012년 설립된 고양종합터미널은

고양종합터미널은 고양시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지하5층 지상7층에 연면적 146,071.39㎡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운수시설이다. 지하 2, 3층에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고 메가박스 영화관, 롯데이몰렛, 전문식당가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밀집해 시외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이다.



■ 고양종합터미널 소유자 현황

회사명	주소	비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34-9)	—
한국터미널운영 유한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고양종합터미널 4층	—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2	—
고양시청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창업지원센터(4층 사무실)환승주차장

시민 모두 가슴 졸인 30분 긴박했던 화재사고 현장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개황

- 일 시 : 2014. 05. 26.(월)
- 최초발화 : 08:50 ~ 09:00 정도로 추정
- 장 소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 원 인 : 지하 1층 CJ푸드빌 공사현장에서 용접불티 원인 추정 화재 발생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터미널과 쇼핑몰 등에는 600~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1층은 푸드코트 설치를 위한 가스배관 공사가 한창이었고 80여명의 작업자가 있었다. 지하 2층 홈플러스는 개장 초기로 개점을 준비하는 소수의 인원이 있었고, 지상 1층 터미널 하차장에도 소수의 이용객이 있었다. 그러나 지상 2층은 승차장으로 매표소와 대합실이 있어 300여명 가량의 이용객이 있었고, 지상 5~7층 메가박스 영화관은 50여명이 영화를 관람 중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진술 중 8시 50분이 넘어서면서 지하 1층 작업장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대피했다는 지하 작업자의 목격담, 9시 2분 연기가 2층으로 치솟아 올라왔다는 버스터미널 승객의 진술, 9시 4분 30초에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백석)가 매우 많은 양의 농연이 분출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재는 최초 119 신고 시간보다 수분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건물 내 상황

지하 1층	푸드코트 설치를 위한 가스배관 연결작업 공사 등 (작업자 80여명 정도)
지하 2층	홈플러스 개장 초기로 20여명 정도의 소수인원만 있었음
지상 1층	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이용객이 소수였음
지상 2층	버스터미널 승차장으로 매표소와 대합실이 있어 이용객이 다수 (300여명 추정)
지상 5층 ~ 7층	메가박스 영화관 (50여명 영화관람 중)

화재 당시 2층 버스 대합실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전 9시쯤 갑자기 1층에서 '퍽'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과 유독 가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또, 현장 안내방송이나 '뛰어, 대피해라'는 고함을 들은 시민들은 재빨리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했다. 한편, 화재 소식이 전해진 후 3호선 지하철은 터미널 인근 백석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가 이날 오전 10시 24분부터 정상 운행됐다.

신고자에 의하면 터미널 지하 1층에서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119에 신고했으며, 추후 조사된 바, 고양종합터미널 관계자가 터미널 내 지하 1층 CJ푸드빌 공사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밝혀졌다. 이는 고양시 초유의 대형 화재사고였다. 이에, 고양시는 사건 당일부터 긴급히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시간대별 상황





아비규환 속 초동대응

화재신고 접수 후 2분만에 소방인원이 긴급 출동,
총 285명의 인원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일산소방서장이 현장지휘소와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현장을 총 지휘하며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우리시는 유관 기관과 더불어 현장 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한편,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고양종합터미널

- 2014년 5월 26일, 화재 발생
- 아비규환 속 초동대응
- 화마와의 전쟁





한 명이라도 더... 골든타임의 중요성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피해의 규모를 좌우한다

성공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빠르고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과 더불어 지휘권자 및 재난 전문가의 노련한 지휘와 지원이 필요하다.

본 터미널 화재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소방 당국의 화재 진압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서를 비롯한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총 동원되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고양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힘을 더해 지원하였으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신고 접수 후 2분, 소방서 긴급 출동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진화 작업 착수

9시 2분경,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와 함께 백석대가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이어 일산, 고양소방서는 물론 인근 수도권 및 서울 등 총 285명의 소방인원과 헬기 2대를 포함한 95대의 소방차가 동원된 엄청난 화재사고였다.

대응 소방력 및 소방장비

- 총 인원 : 445명 (소방 285, 행정 30, 경찰 130)
- 소방 인원 : 285명 (일산 84, 고양 25, 파주 16, 김포 8, 의정부 9, 양주 8, 부천 13, 서울소방 56, 중구단 11, 북부본부 27, 본부 28)
- 장 비 : 95대 (일산 34, 고양 11, 파주 7, 김포 4, 의정부 3, 양주 3, 부천 5, 서울 12, 중구단 2, 북부본부 7, 본부 7/ 헬기 2대 포함)



차량 세부현황

일산	차량	33	지휘차, 장항구급, 장항1펌프, 장항화학, 배연차, 생활안전, 장항탱크, 장항2펌프, 화물차, 행정차2대, 구조공작, 구조구급, 일산펌프, 송포펌프, 백석펌프, 백석탱크, 백석구급, 주엽펌프, 주엽탱크, 중산펌프, 중산탱크, 중산구급, 고봉펌프, 고봉탱크, 고봉구급, 진단버스, 조사차, 장항고가, 장항굴절, 순찰차, 구조화학, 구조장비운반
	인원	84	
고양	차량	11	원당펌프, 능곡펌프, 능곡탱크, 행신탱크, 신도탱크, 원당구급, 능곡구급, 구조공작, 진단버스, 화물차, 행신구급
	인원	25	
파주	차량	7	교하펌프, 금촌탱크, 탄현배연차, 구조공작, 법원구급, 교하구급, 광탄탱크
	인원	13	
김포	차량	4	고촌구급, 중앙구급, 중앙배연, 구조공작
	인원	8	
의정부	차량	3	중앙펌프, 구조대, 중앙탱크
	인원	9	
양 주	차량	3	백석펌프, 백석탱크, 생활안전
	인원	8	
부 천	차량	5	구조대, 중앙구급, 신상구급, 중앙배연, 광역조사
	인원	13	
서 울	차량	12	특수구조대, 은평구조대 2대, 진관펌프, 진관탱크, 역촌펌프, 역촌탱크, 성산펌프, 상암탱크, 개화펌프, 마포구조대 2대
	인원	59	
광 명	차량	1	구조공작
	인원	5	
중앙구조단	차량	2	중앙구조단 2대
	인원	11	
북부본부	차량	7	특수대응단(구조공작2, 펌프2, 탱크2), 지휘버스
	인원	27	
본 부	차량	5(헬기2)	구조공작, 생화학차, 헬기 2, 지휘버스, 조사차, 기타차량 1
	인원	28	

소방서 긴급 대응활동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는 곧바로 소방서장의 지시 하에 화재 현장을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현장지휘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고양시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을 통솔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소방서 현장 긴급대응	
09 : 02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09 : 03	유관기관 통보(경찰, 시구청,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한전 등)
09 : 04	백석대 현장도착
09 : 06	시장 화재현장 인명대피 확인 지시/ 내근직원 비상발령
09 : 07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지시(소방서장)
09 : 12	일산소방서장 현장지휘
09 : 17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설치(현장지휘소)
09 : 29	화재 완전
09 : 45	광역2호 발령
09 : 50	의료진 도착 응급의료소 운영(명지병원 DMAT팀)
09 : 52	북부소방본부장 현장 도착
10 : 00	자원대기소 운영(구청, 보건소, 한전, 전기, 가스공사 등)
12 : 35	2차 정밀검색 실시
15 : 00	3차 정밀검색 실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운영

일산소방서는 화재 사고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4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위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별표 8,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제12조(지휘체계),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 하였다. 9시 2분 출동하자마자 유관기관에 현장 상황을 통보하고 7분부터 통제단을 가동 하였다.





현장지휘소 운영

소방서장이 현장지휘소(지휘소, 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 설치를 지시했다. 소방서장은 현장을 지휘하되 전 직원에게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인명 대피 유도를 최우선으로 지시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상황전파 및 동원지원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무정차 통과조치 및 병원별 전담요원(연락관)을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사상자를 관리하며 정확한 현장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현장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였다.



응급의료소 운영

선착대와 지휘본부 구급반 요원이 환자 분류를 실시했다. 현장에 9시 20분경 도착한 고양시 3개 보건소에서 응급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을 시행했다. 10시경 경기북부권역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의료지원팀)가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65개소에서 105개소 확대 예정 (재난거점병원 운영 중)

응급의료 활동

사상자 중 경상자와 중상자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상자에 현장 CPR을 실시하였다. 또한, 임시 영안소 텐트를 운영하여 구급대원 및 응급의학과 의사가 현장 중증도를 분류하고 가용구급차는 최대한으로 동원(민간구급차 7대)하여 사상자를 이송했다.



기타 유관기관 활동

일산경찰서에서는 원활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경찰 2차 통제선을 설치하고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이동을 위해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 및 관리하였다. 또한, 피해자 후송병원을 파악하고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보건소에서는 일산동·서구, 덕양구 보건소 응급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의료소에 의료인력을 대기시키고 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을 시행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에서는 현장지휘소에 전기를 설치하고 건물 주변 가스누설을 측정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

보건소별 응급의료지원팀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구급차의 경우 소방서 119구급차량 뒤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의료 인력은 119 구급대원 천막에서 대기하다가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완료 후 철수 명령을 듣고 13시경 철수하였다. 보건소는 응급의료반을 설치하고 시·도 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대응 구역별로 응급의료 자원을 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 분산 이송을 통제하며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상황 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일산서구보건소

2014.5.26. 09:20 일산소방서에서 연락받고 간호사 1, 행정요원 1, 구급차기사 1 총 3명 출동

일산동구보건소

2014.5.26. 9:40(인터넷으로 확인) 의사 1, 간호사 2, 행정요원 1, 구급차기사 1 총 5명 출동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로부터 화재사고 소식을 듣고 10시경 간호사 1, 구급차기사 1 총 2명 출동
※ 당시 시청에서 대자동 봉안당 설치 반대 시위로 인한 의료지원 중이었음





화마와의 전쟁

검은 연기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할 일산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소방대원들은
순차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27분간, 화마와의 전쟁은
비교적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마는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시커멓게 그을린 고양종합터미널
사고 현장에는 슬픔과 오염만이 가득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고양종합터미널

- 2014년 5월 26일, 화재 발생
- 아비규환 속 초동대응
- 화마와의 전쟁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전술

사고 현장인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철사가 연계된 교통혼잡 대상이어서 소방차량은 터미널은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선발대로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건물 지하 1층 중심부로 진입해 불길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화염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하 1층 발화지점을 향해 뚫고 들어갔다. 그 결과 뒤편에 야적된 수백 통의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119신고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 불길은 거셀 대로 거졌고,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도 높은 열기에 역부족이었다. 후발대로 도착한 인근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합류하여 타들어 가던 불꽃을 출동 27분만인 9시 29분에 완전 진압할 수 있었다.



●차량배치 현황

사고 현장이 교통 혼잡 지역임을 감안하여 터미널을 둘러싸고 전 차량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소방전술을 펼쳤다.



- ①백석P ②백석T
- ①지취차 ②장항P ③장항구급 ④장항화화 ⑤장항T ⑥배연차 ⑦주업P ⑧주업T ⑨송포P ⑩구조공작 ⑪고양구조 ⑫능곡P
- ①중산P ②고봉P ③인력수송버스 ④화물차 ⑤김포구조 ⑥파주구조 ⑦북부특수대응단 ⑧북부본부지휘버스 ⑨중앙119구조단

화재진압과 함께 부상자 구조가 시작됐다

소방대원들은 각종 화장실의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건물의 모든 부분을 총 3회에 걸쳐 검색하고 2회 부분 검색을 하며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 하였다.

구조 활동 결과, 건물 내부에 있던 인원 총 342명을 구조하였다. 300여명은 대피하도록 유도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은 42명의 경우는 소방 대원이 직접 구조하는 등 많은 인원을 대피시키는 데에 성공했지만, 사망자 및 사망 추정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소방대원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9명의 사망자 발생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지상 2층 터미널 매표소 공간이 유리벽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어 이 지점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활동 당시 이 공간에서만 40여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끝내 사망 9명, 중상 4명, 경상 11명, 총 124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구조 생존자 김00 감사글

시아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지하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인명구조에 많은 시민이 구조의 손길을 받았으며 특히 김00 학생의 경우 건강을 회복한 후 감사의 편지를 직접 적어 보내기도 하였다.

To 소방대원님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건 때 홀로쓰러진 영구
메스컬레이터 복근에서 구조된 1학년 여학생입니다
도대체 물어 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때 화상전문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히 얼굴은 거의 안 다쳤고,
다리에만 심한 화상을 입어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다리도 그렇게 막 나요? 이런 건 아니라
내일이 2차수술이네요 병원에서 엄마가 저를
구조한 소방대원 성함과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쓰러질
때만해도 이렇게 죽는구나 싶지만 했는데
일어나보니 크게 다친 곳도 없이 살아있는게
기적 같아요 아저씨가 빨리 와주신 덕분이네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존경해요
우리나라도 이서 선진국처럼 근무환경이나 장비에
투자를 많이해야 할텐데.. 제게 도와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죽하죽 살아있다는 게
뭔지 느끼며 살아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From 김00





미준기획
771
-1225

02

| 사고 수습과
수사 · 재판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을 위로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한 시라도 빨리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조사와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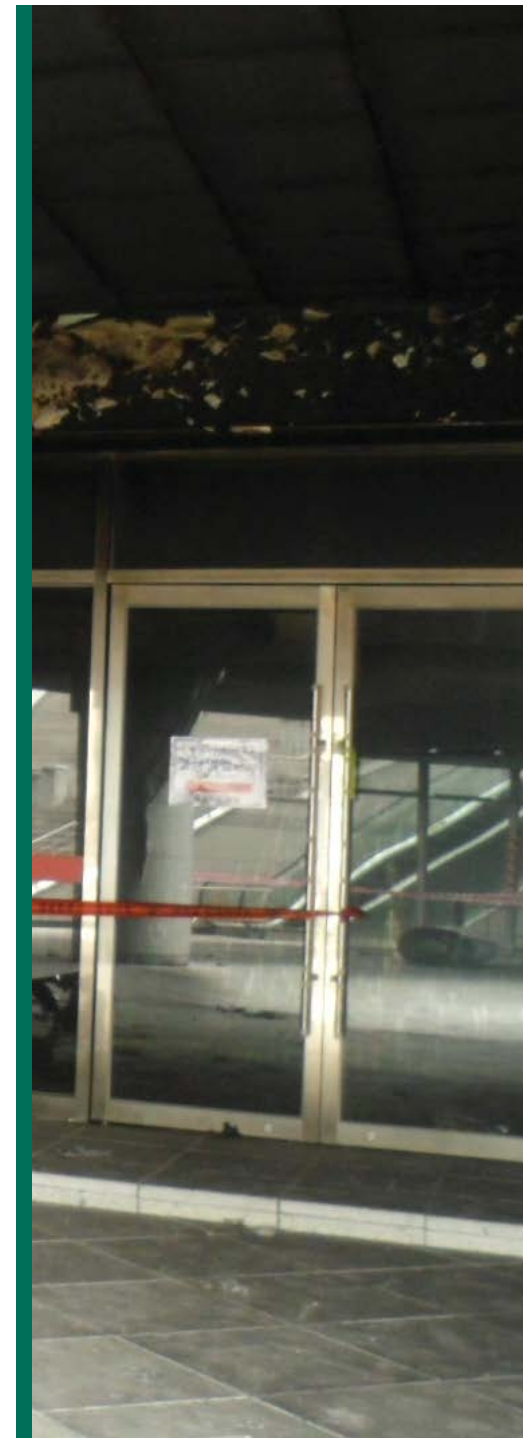
왜 이토록 큰 대형 참사로 번졌나?

용접 중 작은 불씨 하나가 화마가 됐다.
27분이라는 비교적 신속한 화재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추산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작은 틈새로
고양시 초유의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 왜 이토록 큰 대형 참사로 번졌나?
-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 수사와 재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발화점은 지하 1층 공사 현장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 2014. 5. 26 (월) 09:02, 도착 09:04 (2분), 완진 09:29 (27분)
- 장 소 : 고양종합터미널 지하1층 공사장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 거 리 : 일산소방서 3.5km, 백석119안전센터 0.7km
- 기 상 : 기온 16.9℃, 습도 87%, 풍향 남서풍, 풍속 4.4㎞
- 인명피해 : 124명 (사망 9, 부상115), 700명 대피유도
- 재산피해 : 14,460,399천원 (부동산 13,813,940천원 / 동산 646,459천원)
- 화재원인 : 지하 1층 CJ푸드빌 푸드코트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새어 나온 가스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대규모 화재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단일한 안전의식과 무리한 공사 진행에 있었다

당시 고양종합터미널은 대수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허가 및 착공신고가 처리되어 있었으나, 화재는 가스배관공사 작업 중 일어난 사고로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분이며 대수선 허가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수선 진행사항

- 위 치 : 지하 1층
- 건 축 주 : 한국증권금융(주)
- 설 계 자 : 엠아이디 건축사사무소 (최○○)
- 감 리 자 : (주)영설계엔지니어링 (황○○ 외 1)
- 시 공 자 : 에스아이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 하○○)
- 도 급 액 : 88,000,000원
- 총 면 적 : 9,371.09㎡
- 내 용 : 내부 칸막이 변경을 위한 방화구획 변경(방화스크린 변경)
- 허 가 일 : 2014. 04. 22
- 착 공 일 : 2014. 05. 08

발화 지점은 지하 1층

발화 지점은 지하 1층으로 CJ푸드빌 내부 칸막이 변경을 위한 방화스크린 변경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건축법상 지하 1층이나 주 출입구가 지상에서 내려다 보이며 지하철역(백석역) 에스컬레이터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건물 내 각층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 당시 약 80여명의 작업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장 부위(바닥면으로부터 7m정도)에 푸드코트의 각 점포로 분기하기 위한 도시가스 주배관(50mm)을 연결하는 용접 · 전기배선 등의 작업 중이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된 지하 1층 공사장 에스컬레이터의 미관 보호를 위해 3면을 샌드위치패널(가연성 스티로폼 내장)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화스크린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용접 중 작은 불티가 화마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푸드코트에 도시가스 주배관(50mm)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에 가스배관에서 불꽃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자 (장○○, 일용직 근로자)가 소화기를 가지러 내려왔다.

그러나,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환기덕트 보온재(우레탄)에 불이 옮겨 붙은 채 10m이상 착화되어 급격히 연소하는 상황이었고, 높은 천장면이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비상상황임을 인지한 인근 용접 작업자들(장○○, 성○○, 조○○)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나왔고, 가스 중간밸브를 찾지 못해 외부에 있는 주밸브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은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로 지상층에 대한 화재 전파 등 초동 조치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스 누출의 원인은 가스 중간밸브 위쪽에서 제연경계벽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발로 밟아 개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서류 제출 미비로 대수선 착공신고와 수리통보가 늦어졌음에도 2014년 7월 1일 지하 1층 푸드코트 영업 개시일을 맞추기 위하여 허가 이전에 공사를 개시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가스공사 및 소방공사 등 각종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를 야기시켰고, 이것이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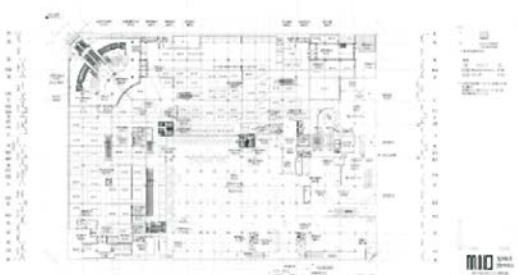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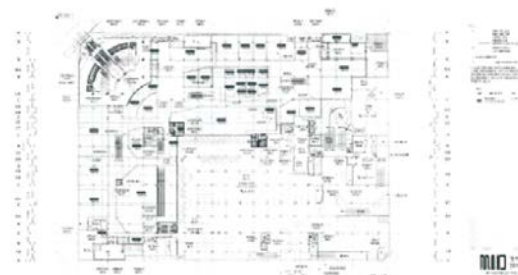


가스가 분출되어 점화된 배관 (중간밸브가 열려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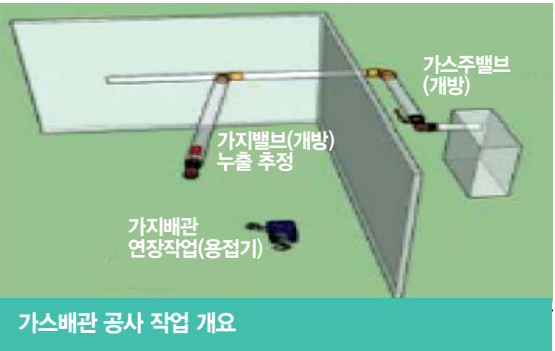
희생자가 많았던 지상 2층 상황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58초만에 확산

지상 2층은 버스 매표소와 대합실이 있는 곳으로 다수의 승객들이 이용 중이어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지하 1층에서 발화된 불은 천장 우레탄에 옮겨 붙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산염 등이 포함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지하 및 지상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굴뚝효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상 2층 대합실까지 불과 58초만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배관공사를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1층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하고, 방화구획 변경공사 범위 확인 없이 지하 1층 대부분의 전원을 차단하여 불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또,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두는 실수를 범하여 더 빨리 진압될 수 있었던 화재를 대형 참사로 키운 것이다. 사망자와 중상자 대부분이 구조된 장소는 매표소 출입구 앞과 화장실이었다. 매표소는 작은 창구만 있는 구획공간이어서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합실보다 늦게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화장실 내부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발견되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중이라 대합실 상황을 늦게 인지하여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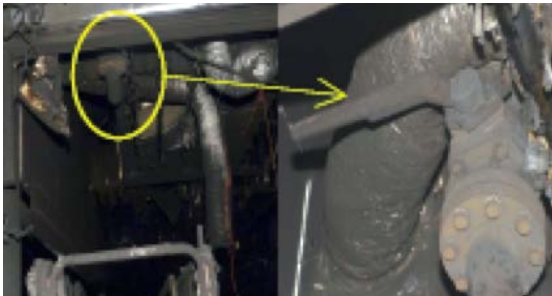
대수선 도면 변경 전	대수선 도면 변경 후
	

화재현장 사진





전동리프트에 위치한 전기용접기 사진



보조자 장○○이 가스를 차단한 지하층 중간밸브



1층 에스컬레이터 방화셔터 미작동



2층 롯데쇼핑 방화스크린 장애물 설치



3층 에스컬레이터 방화셔터 미작동



B1층 스프링클러 알람벨브 잠금



1층 스프링클러 작동



2~3층 스프링클러 작동

상상을 뛰어넘는 대형사고, 124명의 인명피해

늦어진 대피방송,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 늘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터미널 직원 및 이용객 등 수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발화지점인 지하 1층 사고 현장은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 초기 진화작업이 아예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두는 바람에 화재경보나 대피방송도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상 2층 화장실이나 매표소 등에 있던 피해자들의 대피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고양종합터미널의 대규모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만 되었어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 화재사건은 소홀한 안전의식이 빚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소방당국에서 집계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9명을 비롯하여 중상 및 경상자가 총 124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는 약 144억원에 달했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추후에 합동감식 종료 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소방방재청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피해는 약 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인명피해 : 총 1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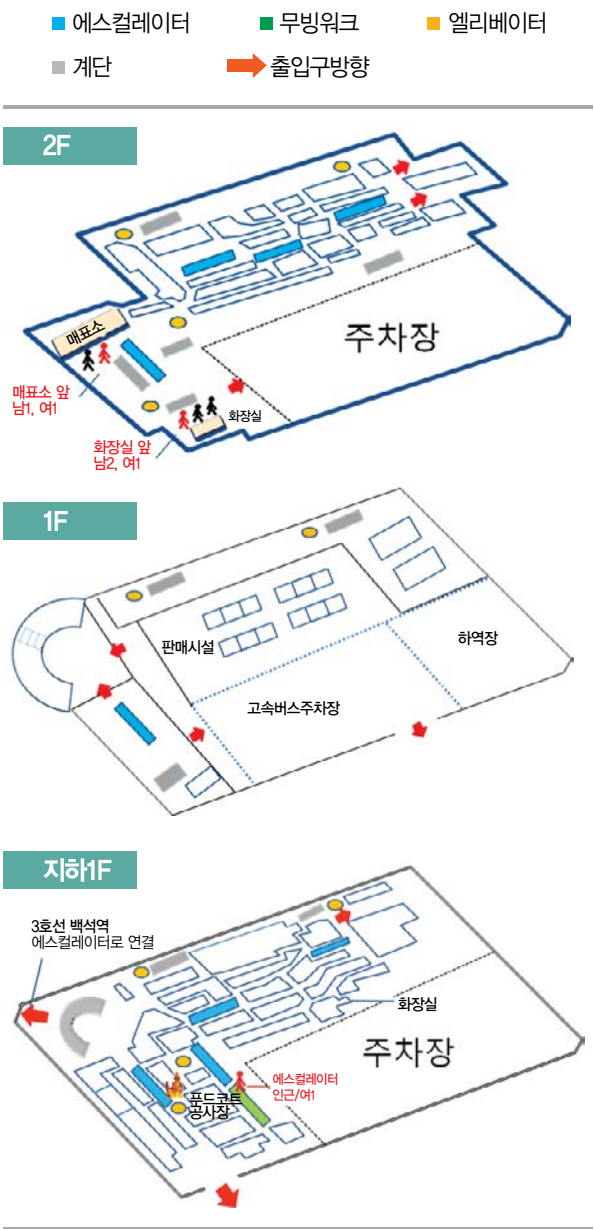
구 분	계	일산 병원	백 병원	명지 병원	동국대 병원	한강성심 병원	파주 병원	현대아산 병원	기타 병원
계	124	85	12	9	9	2	2	1	4
사망자	9	—	1	1	1	—	1	1	—
중상자	4	2	—	—	—	2	—	—	—
경상자	111	83	11	8	4	—	1	—	4

※기타 병원 : 광주광역시 씨티병원(입원) 1, 부산 제일의원 1, 전주한방병원 1, 속초 보광병원 1

건축물 현황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5층 / 지상7층, 연면적 146,071㎡, 운수판매시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현장 평면도



7F	메가박스 백석 판매시설 (미입주)	1,193㎡
6F	메가박스 백석 판매시설 (미입주)	3,775㎡
5F	메가박스 백석 이벤트공간	5,936㎡
4F	창업보육센터 및 기숙사 판매시설(미입주)	13,845㎡
3F	판매시설(미입주)	13,404㎡
2F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16,529㎡
1F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16,304㎡
지하 1F	시외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미입주)	22,526㎡
지하 2F	홈플러스	20,867㎡
지하 3F	홈플러스 주차장	9,353㎡
지하 4F	백석역 환승주차장	9,007㎡
지하 5F	기계실 / 전기실	3,317㎡

시간대별 조치사항

09 : 02	신고접수 및 출동
09 : 04	현장도착
09 : 06	전직원 비상발령
09 : 12	일산소방서장 현장 지휘
09 : 17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09 : 29	화재 완전
09 : 45	광역2호 발령
09 : 52	북부분부장 현장 지휘
12 : 35	2차 정밀검색 실시
15 : 00	3차 정밀검색 실시

사망자 발생장소(추정)

발생장소	인명 구조	사망 (9명)	중상 (4명)
지상2 (매표소, 화장실)	9명	8명(男4, 女4)	3명
지하 1층	2명	1명(女)	1명

※ 최초 화재현장 사망자 6명 (추가 사망자 3명은 병원치료 중 사망)

2층에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사유

● 지하1층에서 발생한 농연
당시 지하1층에서 대수선 공사 중 화재로 발생한 농연이 에스컬레이터 통로 및 계단을 통해 상층부로 급격히 확산 되어 질식한 것으로 추정

고양종합터미널 소방시설 실태

일산소방서는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터미널의 소방시설 현황을 발표하였다.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는 지하 1층에서 사용 시도하였으나 작동하지 못하였고, 옥내소화전의 경우 지하 1층은 호스를 전개하였으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상 2층도 호스가 전개된 것은 발견하였으나 밸브를 개방시키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한편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의 소방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28일 동국대병원 에서 열린 유가족 대상 설명회에서 밝힌 바 있다.

지하 1층 발화지점 스프링클러, 지하 1층 방화셔터 전부와 지상층 방화셔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전 민간업체에 위탁한 소방시설 점검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고양 종합터미널이 일산소방서에 보고한 '3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자료에는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자체점검을 위탁 받은 민간업체는 '화재감지기 미설치 3곳' 등 4건만 지적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은 연 1회 이상인 정밀점검을 자체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론 소방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 점검한다. 하지만 관내 건물이 수천 개에 이르므로 반기에 한 번씩 샘플을 정해 점검한다.

화재 당시 고양종합터미널 소방시설 현황

- 소 화 설 비
분말 527, 이산화탄소 42, 옥내/옥외소화전 214/11, 스프링클러헤드 23,915, 준비작동식감지기 3,169, 청정소화약제설비감지기 54
- 경 보 설 비
자동화재탐지설비 553, 비상방송 2,003
- 피 난 설 비
유도등 (통로/피난구) 42/105, 유도표지 18, 공기호흡기 18, 휴대용비상조명등 146, 비상조명등 6,709
- 소화활동 설비
비상콘센트 103, 제연급기/ 배출담퍼 70/56, 무선통신보조설비 17

고양베스트터미널						
대상	고양 베스트터미널	위 치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동 1242)		전화번호	031-936-7738
대표자	이○○	소방안전 관리자	1급 / 직위 : 주임 / 성명 : 연○○ / 자격종류 : 소방전기기사			
건물구조	S.R.C조 슬라브지붕 5/7층 1동 연면적 146,071㎡				용 도	운수, 판매
보 험	회 사	현대해상	기 간	2013.04.02.~2014.04.03	금 액	1267억 원
본서와의 거리	3 km	센터와의 거리	0.5 km		인 근 공설소화전	백석 31호 50m 백석 36호 50m

건물개요

동별	층별	면적(㎡)	용도	소방시설	위험물 허가사항	LPG, LNG취급
1동	B3-5	31,678㎡	주차장 기계설	소화기분말 527, 이산화탄소 42, 옥내소화전 214, 옥외소화전 11, 스프링클러헤드 23915, 준비작동식감지기 3169, 청정소화약제설비감지기 54,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553, 비상방송설비 003, 공기호흡기 18, 유도등 1171, 휴대용비상조명등 146, 비상조명등 6709, 비상콘센트 103, 전실제연설비급기담퍼 70, 배출담퍼 56, 무선통신보조설비 17	•경유 3,300ℓ X 1비상 발전기용 •경유 3,300LX 1저장용 (비상발전)	지하 식당가
	B2	20,867㎡	판매시설			
	B1	22526㎡	편익시설 주차장			
	지상1,2	32833㎡	운수, 판매			
	지상3,4	27249㎡	주차장, 판매			
	지상5-7	10,904㎡	문화집회판매			

출동로 및 주변도로 여건	전면 중앙로(왕복8차선), 측면 왕복 8차선, 측후면 왕복 4차선으로 대상물 접근 및 활동 여건이 좋음
화재위험 요인	식당 및 보일러 가동을 위한 화기취급, 건물내부 다수의 가연물(침구류, 플라스틱류 등)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
인명피해 요인	지하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많음, 다수의 인원 동시 대피시 혼잡, 혼란 발생
연소확대 우려 여부	주변 건물과 인접해 있지 않아 연소확대 우려는 적음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백석역지하와 대형마트 연계로 인한 인명대피 유도에 어려움이 예상됨, 대형마트 내 구조물로 인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

고양종합터미널 안전관리 제대로 이루어졌나

고양종합터미널은 2012년 3월 사용승인 이후부터 전체 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을 고양시 각 부서 및 안전총괄부서, 건물관리자의 자체 점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먼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터미널에 상주하는 총괄관리자(관리소장)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난 3월 10일, '상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실태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정에 따라 홀플러스 및 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설명절 및 추석명절 대비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소방·건축이 일원화된 합동점검반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소방방재청의 「고층 건축물 등 합동 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른 점검에서는 고양터미널을 관할 하는 일산소방서와 우리시 건축부서 상호간 실제 점검을 위한 연락이 있었는지 진위여부가 엇갈리고 있어 진행중인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

다중이용시설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결과	관련법	비고
계		40	지적건수 : 92건 (조치완료 : 92, 조치중 : 0)		
시 기 별	설명절 안전점검	2014.01.13-01.17	13	지적건수 : 32건 (조치완료 : 32, 조치중 : 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30조
	추석절 안전점검	2013.08.29-09.05	12	지적건수 : 24건 (조치완료 : 24, 조치중 : 0)	2013년 결과
	설명절 안전점검	2013.01.30-02.06	15	지적건수 : 36건 (조치완료 : 36, 조치중 : 0)	2013년 결과

고양종합터미널 안전점검 현황

고양종합터미널 현황	
위 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백석동)
대지면적	27,029㎡
연 면 적	146,071.39㎡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7층
주 용 도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사용승인	2012.03.21.

안전점검 현황

I. 지하연계시설물 관리

근 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방법	동 법 규정에 의한 재난대응 및 자원체계 등 실태 점검
점검시기	년 2회(상, 하반기)
최근 안전점검 결과	2014.03.10. 상반기 재난대응 및 자원체계구축 실태 점검

안전점검 현황

II.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30조	
점검방법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명절(설, 추석)전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 해소와 안전성 확보	
점검시기	명절 전	
최근 안전점검 결과	점검일정	2014.01.13~01.17.(5일간)
	점검시설	고양터미널 등 13개 시설
	점검결과	지적건수 32건, 조치완료 32건

초고층 및 복합지하연계건축물 안전점검

안전점검 일정(분기별 1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이행실태 확인계획			
점검일	2014.03.10.	경기도 재난안전과 제출일	2014.03.2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행실태 현장 확인계획			
점검일	2013.03.06.	경기도 재난안전과 제출일	2013.03.11.
테러경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등 긴급 안전점검			
점검일	2013.04.15.	경기도 재난안전과 제출일	2013.04.1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이행실태 점검			
점검일	2013.11.05.	경기도 재난안전과 제출일	2013.11.0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확인 점검			
점검일	2012.06.21.(경기도 재난안전과 실시)	사용승인일	2012.03.21.

점검내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수립
● 종합 안전점검 계획 수립	● 피난안전구역 설치
●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 초기대응대 구성 운영 등
● 재난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기타 안전점검 실시	
설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	2014.04.14.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부서 안전점검 실시 통보	2014.05.30.까지 결과 제출(대중교통과(화정터미널, 백석터미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부서 시설물 안전점검 강조 알림	부시장님 지시사항 전달

※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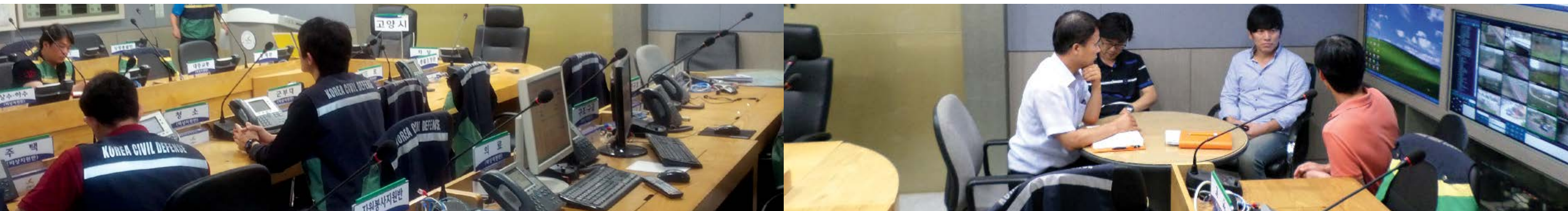
가족을 잃고 비탄에 젖은 유가족들은 물론
잊지 못할 아픔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을 시민들,
불타버린 채 제 기능을 상실한 터미널...
모두의 가슴에 남은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이물도록 사고 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 왜 이토록 큰 대형 참사로 번졌나?
-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 수사와 재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책본부를 통한 피해 파악부터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까지

우리는 초유의 사회재난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직원을 급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심점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사망자와 유가족, 중·경상자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45일만에 피해보상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화재사고 수습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하고 사고 수습 시작

고양시 초기 대응 기록

5월 26일

09 : 15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지휘통제소 구성·운영

09 : 20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10 : 30

고양터미널시외버스를 화정터미널로 이동 운영

11 : 30

관련부서에 상황실근무 지시

13 : 00

재난상황실 근무 실시(실무반 가동)

16 : 30

긴급대책회의

17 : 00

일산소방서로부터 인명피해 명단 확보

5월 27일

09 : 10

유가족 시청 방문

10 : 15

유가족 지원대책 회의

15 : 00

동국대병원에 합동분향소 설치

중국인 가족 비자 신속취득을 위한

외교부 협의 발급 완료

화재신고 접수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현장 구조작업 지원 및 임시 터미널 운영 시작

9시 2분경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서 출동과 더불어 고양시 재난관리팀에서는 관련부서 및 경기도, 소방방재청에 유선 및 상황전파메신저를 활용하여 재난 상황을 알리고 현장에 즉시 안전총괄과 및 일산동구청 직원을 급파했다. 9시 15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권한을 대행하던 최봉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교통안전국장, 재난관리팀장, 안전도시팀장, 주택관리팀장, 대중교통팀장, 공보담당관, 덕양보건소 등 8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후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지휘통제소¹를 설치하고 시민 긴급대피와 소방서 구조작업 지원을 시작했다.²

현장지휘통제소는 일산소방서 화재지휘본부 안에 임시로 설치 운영하며 초기상황이라 별도의 반편성은 없었고 국별로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행정지원과에서 현장의 경비지원경찰관 및 소방관에 도시락 300개를 지원하였으나 보호자 안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는 상황이었다. 9시 29분, 화재 진압이 완료된 후 10시 30분부터 대중교통과에서 터미널 임시 운영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 고양터미널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시외버스 10개 노선을 화정터미널로 신속히 이동시켜 운행토록 하였다. 고양터미널과 화정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별도전담반을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 돌입 병원별 직원이 24시간 상주근무하며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자체적으로 분야별 별도전담반을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26일 오후 5시경부터는 일산소방서로부터 인명피해 명단을 확보하여 당일 밤부터 병원별로 직원 2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유가족을 지원, 사고 6일째 희생자가 모두 발인하는 날까지 공무원 총 235명이 현장근무를 이어가며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병원별 직원은 장례식장에 4급 총괄, 사망자별 5급 반장, 6~7급 반원을 편성하여 지원했고, 중·경상자의 경우 병원별 6급 반장, 7급 이하 반원이 편성 근무하며 부상자 및 보호자를 지원했다.

¹「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망 3명 이상일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² 재난대책본부는 상황판단회의 소집 없이 안전총괄과장이 재난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구성하였다.

부서별 사후수습 대책

- 목적 : 소관 업무 부서별로 신속한 지원 및 화재사고 후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원만한 사고수습 추진

1. 안전총괄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설치			
기간	2014. 5. 26 ~ 상황종료시까지	사고수습본부장	고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재난상황실 근무인원 보강		화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부 이상유무 안전점검 실시	
2명 근무 → 3명 근무(24시간, 상황종료시까지)		도 재난안전과 및 안전총괄과 합동점검	
2. 행정지원과			
화재 사상자 병원 연락 근무자 지정			
근무자 임무	유가족 및 부상자 의견 수렴 및 상황보고		일자별 근무자 명단 별첨
3. 지역경제과			
대규모 점포 정밀안전점검 실시		가스, 전기, 승강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로

사고 수습체계를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습활동 돌입

5월 30일부터는 신속한 사고수습 지원대책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사고수습 및 협의체 구성·지원을 위하여 노력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총괄상황지원반, 환자지원반, 시설정상지원반, 협의체지원반, 보상지원반의 총 5개 반으로 구성됐다.

교통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안전총괄과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총괄상황지원반을 필두로 각 담당 역할에 따른 4개의 하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우선, 총괄상황지원반은 반별 상황관리, 총괄 진행사항 보고, 환자별 관리카드 정리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며 안전총괄과 내 상황반운영조를 편성하여 사건 종결 시까지 운영키로 하였다.

환자지원반은 3개 보건소에서 운영하였다. 총괄을 맡은 덕양보건소는 한강성심병원과 명지병원을 관할하였고 동구보건소는 일산병원과 동국대병원을, 서구보건소는 경기의료원과 백병원을 관할하였다.

입원자를 포함한 중상자는 오전중 1일 1회 면회를 원칙으로 중환자실 환자에 대해서는 자료와 지원사항에 대한 일관된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담당자중 적절한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통원 환자나 퇴원 환자 등 경상자는 주간 전화로 체크하여 관리하며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1개월간 유지·운영토록 하였다. 추가 사망자 발생 시에는 기존 매뉴얼에 따라 안내하였다.

시설정상지원반은 지역경제과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토록 하였는데 각 관련부서 역할에 부합하도록 상가운영 지원 및 점검시설, 운영정상화를 위한 협의 및 시설안전 체크를 시행케 했다. 협의체구성반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며 사건 관련 업체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중재역할 및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소방방제청)의 관련 업체 협의체 구성에 협조 요청을 담당하였다.

보상지원반은 소통담당관이 총괄을 맡아 보상협의 관련 지원사항을 총괄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피해자 보상금 협의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였다.

■ 사고수습대책지원반 구성

구 분	담당부서	역 할	연락처	
총괄상황지원반 협의체 구성반	안전총괄과	● 반별 상황관리 ● 운영조 편성 ● 협의체 구성 ● 피해보상 조정	정)안전총괄과장(☎2980) 부)안전도시팀장(☎3011) 담당주무관(☎3012)	
환자지원반	보 건 소	● 부상자심리치료 ● 병원관리	덕양	정)의약관리팀장(☎4019) 부)담당주무관(☎4023)
			동구	정)의약관리팀장(☎4095) 부)담당주무관(☎4099)
			서구	정)의약관리팀장(☎4165) 부)담당주무관(☎4166)
시설정상 지원반	지역경제과	● 상가 정상운영지원	정)중소상공인팀장(☎3550) 부)담당주무관(☎3551)	
	대중교통과	● 터미널 운영지원	정)대중교통팀장(☎2952) 부)담당주무관(☎2954)	
보상지원반	소통담당관	● 보상협의 지원총괄	정)시민소통팀장(☎2151) 부)담당주무관(☎2152)	
	행정지원과	● 법률 자문	정)법무팀장(☎2188) 부)담당주무관(☎2190)	
기타지원반	공보담당관	● 언론보도	정)언론홍보팀장(☎2081) 부)담당주무관(☎2085)	

※ 일산경찰서 담당 : 이○○정보관 / 일산소방서 담당 : 현장대응2팀장

※ 사고수습대책본부 (대표전화 : 8075-2119, 팩스 : 8075-4930)

사고수습지원반 교육 실시

6월 2일에는 고양시 재난상황실에서 사고수습지원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과 전화 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모르는 사항은 메모하였다가 해당 부서로 문의 후 안내할 것, 불편한 전화라도 연행을 조심하여 응대하고 입원자에게 매일 전화 또는 면담하여 상태 확인 및 의견을 청취토록 할 것을 당부하여 더 이상 유가족 등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총괄상황지원반은 사고수습지원반에서 소방방재청, 경기도, 부시장에 총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산 경찰서 및 일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담당하며 유가족 추진상황을 문자로 발송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보상지원반은 각 병원별 CJ푸드빌에서 지급보증한 내용을 고양시로 공문을 통해 별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보증병원 발송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지원반의 경우 매일 10시에 중·경상자 등 입원자의 현재상태를 파악하여 상황 보고하면 보건소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취합하여 최종 보고토록 하였다.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터미널 임시 운영

사고수습지원반을 구성하고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터미널 정상화를 추진하며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사고 당일부터 28일까지는 화정터미널을 임시로 지정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29일부터는 고양터미널에 임시매표소를 운영, 29개 전 노선에 대해 일 182회 정상운행을 재개시켰다.



임시터미널 지정운영(화정터미널)	2014. 5. 26 ~ 5. 28
고양종합터미널~화정터미널 셔틀버스 운영	2014. 5. 26 ~ 5. 28
고양종합터미널 임시매표소 및 승하차시설 운영	2014. 5. 29 ~

고양종합터미널 정상화 세부 일정

원상복구 일정	
6월 16일	가설전기작업 완료
6월 18일	구조물 안전진단 확인서 시청 제출 및 지하층 및 터미널동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임시 허가증 수령
6월 19일	고양종합터미널 임시 출입 가능 / 복구작업 가능 업체 현장 설명회
6월 26일	구조물 안전 진단 완료 및 보고서 시청 제출
6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완료
6월 28일	청소 및 철거를 포함한 원상 복구 작업 가능

구분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30일
가설공사											
건축구조 등 안전진단											
임시통행증 발부											
임주사 현장 복구(화재구역 제외)											
공용 및 화재구역 복구공사업체 현실											
공용 및 화재구역 복구공사업체 선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발표											
공용 및 화재구역 복구공사 개시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참고 사항
● 화재구역(출입통제) 고양시청 검찰 허○○ 검사의 요청으로 국과수 감식 완료 전까지 지하 1층 및 터미널동 1~2층은 현장보존 되어야 함
● 6월 19일부터 임시 출입이 가능할 예정이니 각 해당사 손해사정인분들과 일정 조율하여 현장 피해조사 진행할 것을 추천함
● 사고충인 지하 1층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야지만 터미널 전체에 대한 영업 정상화 가능함 (사고층 복구작업은 4~5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측됨)

총력을 기울인 인명 피해 수습

진료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각 병원에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자 파악

화재 당일 9시 20분,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일산동구보건소장, 행정요원 2명, 간호사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는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과장-국장-부시장에게 매일 전송 및 대면 보고하고
경기도 및 소방방재청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피해자 상황 파악을 위해 5월 29일 덕양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애초에 사고
당일부터 각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현장 직원을 통하여 환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고양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환자의 상황을 제공하였다. 이후 각 병원 근무자에게 행동 매뉴얼
및 피해자 인적사항을 배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각 병원근무자가 관리카드를 재난종합상황실로 일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매일 수정·보관하여 환자상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 병원 담당제 시행 종료 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카드를 회수하여
보완 정리 및 보관하였다.

불이학교 학생·교사 40명 등 피해자 및 가족 심리치료 상담

해당 사고로 심적 충격이 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정신과 치료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시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시행 사실을 각 병원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관계 공무원에 전달하였다.
이후 대상자를 파악하여 의뢰 시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정신과 치료 혹은 외부 심리치료기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불이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에 대해서는 주 1회 학교를 방문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미술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였고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는 적절한 대응 지침을 전달하며 필요시 개별 상담을 시행했다. 중상자 김○○³ 자녀 2명, 김○○ 등 9명에게는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 및 가족 거주지로 방문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 환자의 경우 퇴원 후 정신과 상담 치료가 연계
되도록 한마음 정신병원 상담을 지원했다.

³ 당시 중상으로 입원해 있다가 2014.10.6 사망

심리안정서비스 제공 원칙

- 1:1 전문인력 지정(개인의 급성 스트레스 상황 등 개인별 맞춤형 개입)
-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유선 관리
- 서비스 욕구 파악 및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 치료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 고양시외 거주자의 경우 경기도재난심리지원센터 및 타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상자 상담 의뢰

■ 심리치료 세부 내용

학교 및 기관 심리치료 지원 계획				
대상	1주	2주	4주	3개월
학생 (아동·청소년)	•트라우마, 스트레스 교육 및 관리방법 •불안, 우울 선별	•사고 후 스트레스 반응 추가점검 •예술을 통한 심리안정 개별상담 지원	•개별상담 지원	•개별상담
교사 및 직원	•교사 지원 •교사 교육 •교사 집단상담	•교사지원 •개별상담지원 및 스트레스 관리	•교사지원 •개별상담지원 및 스트레스 관리	•교사 지원
보호자 등	•학부모 지침 전달	•학부모 교육	•개별상담 지원	•개별상담

■ 김○○ 등 가족 심리 지원

대상자	상담자	상담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비고
김○○ (여, 40)	자녀 2명	1차	5.29(목)	병원 방문	개별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	주1회 방문상담, 지속 관리
		2차	5.30(금)	방문	개별 심리상담 실시	
	친모	1차	6. 2(월)	전화	심리상태 파악 및 정서적 지지	주1회 방문상담, 지속 관리
		2차	6. 3(화)	방문	심리상담 및 기본건강관리 등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3차	6. 9(월)	전화	개별 심리상담 실시	
김○○ (여, 16)	김○○, 부모 등 3명	1차	5.30(금)	전화	심리상태 파악 및 정서적 지지	지속 관리
		2차	6. 2(월)	병원 방문	개별 심리상담 실시	
백○○ (남, 37)	배우자, 부모 등 3명	1차	5.30(금)	전화	심리상태 파악 및 정서적 지지	지속 관리, 전문기관 의뢰 (6.11)
		2차	6. 2(월)	병원 방문	개별 심리상담 실시	

■ 전문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보증 공문

5.30.(금) ~ 31.(토)은 사전투표, 6.4.(수)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



수신자 한마음신경정신과병원장(원무과장) 귀하

제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보증 안내(3차)

1. 항상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금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가슴 아픈 고통을
격고 있어 귀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사망자 유가족분이 귀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여 이와 관련한
치료비(신경정신과)에 대한 부담금은 고양시와 CJ푸드빌(주)이 향후 병원비 정산과 관련
가족측이 부담하지 않도록 협의된바,

4. 우리시에서 병원비를 우선지급보증하오니 유가족 및 보호자 가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사고수습대책지원본부(031-8075-2119) 또는
CJ 푸드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양시장인

주탁관리팀장	주탁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과-21194 (2014.05.31.) 접수 ()	
우 경기도 고양시	/ http://
전화 {031} /전송 {031}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하고 유가족 대기공간 마련

5월 27일 오전 9시 10분, 부시장과 유가족의 면담이 있었다. 면담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신○○ 외 유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고양시는 유가족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이어 10시 15분 다시 부시장 주재로 유가족 지원대책 회의가 소집됐다. 14시에는 화재사고 관련 업체 면담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27일 3시경 동국대 일산병원에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유가족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했다. 분향소의 경우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호실별로는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부검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검찰 지휘에 따르도록 유가족을 설득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에 따라 업체와 유족간 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시가 맡기로 하였다.

유가족 요구사항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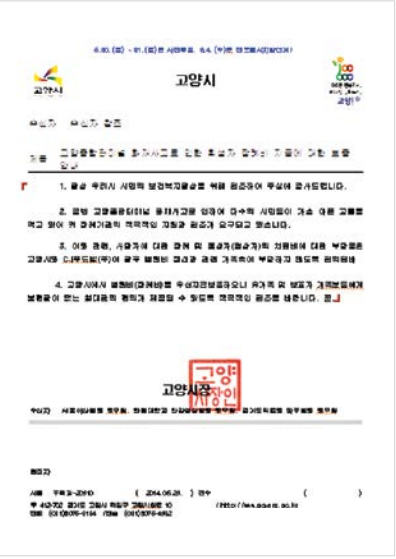
- **면담일시** : 2014. 5. 27(화) 09:10~10:13
- **참 석 자** : 유가족 대표 신○○ 외 20여 명 / 부시장 외 관계 공무원 12명
- ※ 면담 후 관련부서 대책회의 : 10:15~11:20

제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전담부서
합동분향소 설치	• 합동분향소 개념이 아닌 합동장례식 장소를 말함 ①동국대병원 장례식장 ②일산병원 장례식장 (차순위 지정)	①사망자 6인 안치공간 및 유가족 대기장소 마련 : 특실3, 일반실10	덕양·동구 보건소
부검 반대	• 일부 가족이 부검반대를 요구하였으나 다수가 부검에 응하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검찰지휘에 따름	교통안전국
보상요구	• 유족측에서 고양시 직접 보상 요구	• CJ푸드, 건물주와 유가족 간 보상중재	도시주택국
사고사실 확인서 발급	• 고양시에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확인 요구건	①확인서 발급 불가 ②검경 수사결과에 따름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장례 지원	• 합동장례식 비용 지원 : 장례 비용 1가족당 3천만원 소요 예상 (화장 및 묘지안치비 제외) • 합동 또는 개별장례비용 지원	—	시민복지국
	• 장례인력 지원 : 직원 4명×7개소=28명	—	행정지원국
중국인 가족 비자 신속 발급 지원	• 사망자 김○의 중국거주 약혼녀 비자 외교부 협의 후 발급 완료	—	행정지원국

CJ푸드빌 측 지급보증 협의 이끌어 장례 지원

또한, 강력하게 가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내어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을 협의, CJ푸드빌 측과 지급보증 협의를 진행하고 각서를 받았다. 병원비 지급보증 공문은 CJ푸드빌 측에서 27일에 일산병원 외 7개 병원에 발송하고 고양시에서 28일에 발송했다.

장례비는 1가족당 2,500만원으로 사망자 8인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발인을 완료했다. 기타 병실사용은 2인실까지, 보호자 부대비용은 보호자 1인당 급식비, 숙박비, 교통비 및 주차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핸드폰 분실 시 구입 비용을 모두 CJ푸드빌에서 협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장례비 지급 보증에 대한 공문>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사망자 장례발인 일정

사망자	발인병원	발인일시	비 고
김○○	동국대병원	05.29. 05:30 발인완료	춘천안식원 안장
정○○	동국대병원	05.29. 10:30 발인완료	안산하늘공원 안장
김○○	명지병원	05.29. 11:40 발인완료	벽제하늘문 납골당 안장
이○○	현대아산병원	05.30. 05:00 발인완료	강릉 완산리 납골당 안장
김○	동국대병원	05.30. 09:40 발인완료	중국인, 성석동 국제공원묘지 안장
신○○	동국대병원	05.30. 12:00 발인완료	파주 서현공원 안장
신○○	파주병원	05.31. 07:00 발인완료	파주 낙원공원묘지 안장
이○○	동국대병원	06.01. 04:40 발인완료	전북 고창 선영 안장
김○○	일산백병원	10.06. 11:00 발인완료	하늘문(벽제동) 납골당

외국인 비자 발급 등 피해자 가족을 위한 최선의 위로와 협조

5월 28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하여 고양종합터미널 정밀점검을 완료하는 한편, 동국대병원 회의실에서 고양시·일산경찰서·일산소방서 3개 기관 합동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29일에는 유가족과 장례비 합의 완료 후 최봉순 부시장이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한강성심병원, 현대아산병원, 일산병원, 백병원을 방문하여 유가족 및 중환자를 위로하였다.

중국국적 중상자 이○○의 가족이 한국 방문 시 필요한 여권 및 비자를 마이스산업육성과국제협력팀에서 주한 중화대사관 및 연길시 외사교무판공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요금 부담과 발권 지원은 CJ푸드빌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중국국적 사망자 김○의 어머니가 업체에서 지불한 장례비(매장비용: 장례비에는 매장비용은 포함되지 않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제공원묘지에 안장하고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특별위로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시장이 알선하였다.

또한 27일에는 김○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약혼녀가 입국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앙수습대책본부에 건의 → 외교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 북경 한국영사관을 통하는 수순을 밟아 2일만에 비자발급을 완료하여 29일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또한 터미널근무 직원을 제외한 사망자 6가족에게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시에서 알선하였다.

중상자 중국동포 이○○ 지원사례

이○○은 화재사고 이후 언어장애와 거동 불편 등으로 보상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타 중상자 대비 보상 제시액이 적어 시 차원의 중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고양시는 피해자가 중국동포라는 사유로 보상협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리적인 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산병원 치료내역서, 후유장애 진료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고문변호사, 의사를 수차 면담하는 것은 물론 이○○과 CJ푸드빌을 각각 15회에 걸쳐 면담·협의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제시액보다 3.7배에 달하는 보상금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이○○ 피해 보상 처리경위

2014. 8. 13.	일산병원 담당의사 면담
2014. 8. 18.	화재사고 전 이범용 직장 대표(조○○) 면담
2014. 8. 22.	CJ 관계자 및 변호사 면담(3회)
2014. 11. 4.	관계자 최종 연석회의 개최 ※참석자 : 고양시(안전총괄과), 고문변호사 및 CJ측 인사부장, 변호사, 손해사정인
2014. 11.10.	최종협의 결과 통보(안전총괄과 → 이○○)
2014. 11.12.	이○○ 가족 감사인사 전달



유가족 의사자 상신 요청

그밖에, 사망자 중 김○○은 전 창릉동 12통장으로서 유가족인 남편(김○○)이 시민상 상신을 건의해 왔다. 사망자는 터미널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사고 당일 9시 2분경 45초간 119에 화재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로서 그 시간이면 화마의 현장을 충분히 빠져 나와 생존이 가능할 수 있었을 터였다. 그러므로, 의로운 죽음에 대해 의사자 또는 시민상을 수여하여 고인의 명예를 지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일산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조회한 결과 김○○ 신고 전 8건의 신고기록이 있어 최초 신고자는 아니며 통화기록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가족이 소방서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녹취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족에게 전화로 안내하였고 남편이 소방서 방문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으로 추후 시민상 상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화재 당시 다수의 신고로 인해 사망자의 목소리 판별이 불가하여 의사자(시민상) 지정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은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수사와 재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양시는 이번 화재사고에 대해

‘공정한 수사’, ‘사고 책임자의 처벌’ 원칙을 세우고

시에서 직접 일산경찰서에 전화통화를 하여

분명하고도 강력한 사고수습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사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필요시

고양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 왜 이토록 큰 대형 참사로 번졌나?
-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 수사와 재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히





피해자 위해 관례를 넘어 협조한 일산경찰서

화재사고 수사경과

- 2014.5.26. 화재 발생 및 수사대책본부
- 2014.5.27. 현장 정밀감식, 변사체 검시 및 부검
- 2014.5.28. 노동청 및 경찰서 면담, 피해자지원 대책회의
- 2014.5.30. 관련업체 및 관련자 휴대전화, 노트북 등
- 2014.6.05. 고양종합터미널 현장 검증
- 2014.6.25. 화재 전문수사위원 자문회의 개최
- 2014.7.24. 고양종합터미널 실황조사
- 2014.8.14. 증거보전 실시
- 2014.8.21. 피의자 7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 2014.9.16. 피의자 7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본 화재 사건을 맡은 일산경찰서와 고양지청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

일산경찰서는 화재에 책임이 있는 발주업체, 공사업체, 자산관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모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했다.

5월 28일에 있었던 1차 브리핑에 이어 피해자합동위원회는 주 1회 수사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경찰서 측에 요구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일체 대내외에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족합동위원회 측의 간곡한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고양시에서는 6월 9일 일산경찰서에 중간 브리핑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띄우고 6월 11일까지 회신 토록 하였다.

또한 6월 9일 오후 2시경 고양시에서는 일산경찰서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화재사고 관련 중간 브리핑을 요청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공정한 수사', '사고 책임자의 처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일산경찰서는 피해자합동위원회에서 최소의 인원이 방문하면(2명 정도) 형사과장이 수사진행 사항을 구두로 설명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경찰 수사진행

수사본부는 용접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방화시설의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5월 26일에서 30일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일부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로 불을 내거나 방염막 사용,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자 교육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불이 난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관련자와 방화시설 책임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 후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합동 감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감식을 통해 불이 난 원인과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고양지청 수사결과

화재사고 관련자 7명 구속, 18명 불구속 기소 고양시청 공무원 1명 직무유기로 기소

고양지청 수사경과	
2014.5.26.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발생 및 수사대책본부 가동
2014.5.27.	화재현장 감식, 변사체 검시 및 부검 지휘
2014.5.28.	노동청 및 경찰서 면담, 피해자지원 대책회의
2014.5.30.	관련업체 및 관련자 휴대전화, 노트북 등 압수수색
2014.6.05.	고양종합터미널 현장 검증
2014.6.25.	화재 전문수사위원 자문회의 개최
2014.7.24.	고양종합터미널 실황조사 지휘
2014.8.14.	증거보전 실시
2014.8.21.	피의자 7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2014.9.16.	피의자 7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피의자 공무원 A○○ 분리결정
2014.9.17. ~ 10.17.	고양시청 공무원, 일산소방서 소방관 등 참고인 20명 조사 및 일산소방서 합동점검 관련 자료 일체 확보
2014.11.06.	피고인 A○○ 불구속 구공판

수사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며 원인 및 책임 규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수사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현장 감식·실황조사에 참여, 직접 변사체 검시 및 부검 지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현장 상황보전 및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다.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 등 다수의 유사사례 및 판결을 분석하고 화재수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수사대책본부 소속 검사 전원이 참석하여 사안의 개요 및 주요 쟁점, 관련자 구속의 필요성 등을 프리젠테이션하여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7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장 작업자 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철저한 검찰 수사 실시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실제 현장작업자 및 공사에 직접 관여한 하수급업체만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검찰은 고양종합터미널의 소유관계, 임대차관계, 관리관계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관계 및 실제 공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에 과실이 있는 작업자들 외에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하고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수급업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공사를 발주·지시한 발주업체, 공사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해태하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자산관리업체 및 시설관리업체 관계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규명하였다.

공사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관한 입법 개선안 건의

발주자가 대규모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사 관련 지시 등이 없었다면 형사죄책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시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상 원도급업체 외에 중간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도급사업주'에 원도급업체 외 중간 하도급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고양시청 공무원 직무유기로 기소

고양지청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대책본부 소속 검사들이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공판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무원의 소방·건축 안전점검 소홀여부 등 감독기관의 업무부실 여부에 대하여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고양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점을 계속 수사하여 고양시 1과에서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최초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2.1.부터 2014.5.26.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일산소방서 관내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합동점검 담당자로서 약 1년 6개월 간 14회에 걸쳐 합동점검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혐의로 고양시청 1과 공무원 피의자 A○○(50세, 7급)를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함과 아울러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로 고양시청 前·現 1과장 2명, 팀장 3명, 담당자 1명 등 1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가 개선되도록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경기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일선 담당공무원 실질적 점검의 초석 마련

“고층 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른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하고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도 결국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공문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형사재판 진행 및 결과

화재사고 관련자 8명에 대해 혐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화재참사와 관련해 2015년 1월 30일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을 제외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단독은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씨와 방재주임 연모씨, 화재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씨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씨와 배관작업자 장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씨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J푸드빌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직무소홀(유기) 공무원에 대한 재판과 징계 절차 진행 중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을 시달 받고도 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상태로 기소된 고양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공소장 접수 후 현재까지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건축법상으로는 고양종합터미널의 안전점검을 건축 부서에서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 점검을 요청하면 대상 시설물 선정과 일정에 대한 협의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동 점검과 관련하여 덕양구 관할 소방서에서는 건축부서에 점검 전날 또는 당일 전화로 요청하여 대상 시설물의 점검을 완료 하였다. 그러나 고양종합터미널을 관할 하는 일산소방서에서는 합동점검을 전화로 요청하였지만 건축부서에서 참석하지 않아 이후 자체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상호 엇갈리고 있어 법원에서는 직무유기 성립조건인 고의성 등 그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통보된 고양시 공무원 6명도 관련규정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가 진행 되고 있으나 그 또한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고양지청 수사 내용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작업자,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하수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수급업체,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무리한 공사를 발주하고 지시한 발주업체, 공사의 안전성 검토 및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자산관리업체 및 시설관리업체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낫은 또 하나의 인재임
-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경찰, 소방서,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발생 및 확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공사발주자와 중간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 의견도 건의 하였음
- 2014.9.16 용접작업자, 하도급업체, 시설관리업체 담당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및 관련업체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2014.11.6 합동점검 담당자로 합동점검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1명을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하고,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함

※ 화재사건 수사결과 부록3 참조(보도자료 원본)

03

협약기구 구성 및
피해보상 과정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사고를 겪은 충격과 가족을 잃은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픔이 깊은 만큼 정신적 상처까지 위로하고자 하는

가족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고양시는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 보상 협상을 진행하였다.



합당하고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하여

장례절차와 병원 치료 시 지원업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및 가족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자문 지원은 물론
보상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적극적인 중재자적 역할에 임하였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 및 유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빠른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 합당하고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하여
-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업
- 반성, 그리고 다짐



원인자, 피해자 간 신속한 협의기구 구성

정에 T/F팀을 구성하여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양측 협의기구 구성을 독려하며 체계적인 보상작업 착수

원인자 측, 피해자 측 공히 구성원 위임에 의한 대표창구 구성이 지연되어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인자 측은 우선 CJ푸드빌을 창구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은 조속히 구성할 것을 설득하였다.

시 자체적으로는 피해자합동위원회 측과의 단일 창구를 위한 정예T/F팀을 구성하여 상시 연락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모든 협의를 일괄적으로 담당·진행하였다.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하여 유가족이 연락 시 안전도시팀장의 직통연락체계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자합동위원회 지원 정예T/F팀

- 단 장 : 교통안전국 국장 (☎ 8075-2025)
- 부 단 장 : 안전총괄과장 (☎ 8075-2980)
- 간 사 : 현안대책팀장 (☎ 8075-2071) / 안전도시팀장 (☎ 8075-3011)

피해자합동위원회 상설 회의공간 및 변호사 자문 지원

피해자합동위원회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 회의공간을 지정하였다. 우선, 고양시청 본관 4층 재난종합 상황실(☎ 8075-2119, FAX 8075-4930)을 주 상황실로 하고 본관 2층 영상회의실을 상설회의실로 지정하여 피해자합동위원회측에서 사전 연락 시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보험처리, 민사소송, 협상에 의한 방식 등 피해자 측의 보상요구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 측 변호사 또는 고양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조속히 정하도록 설득했다.

보상 규모 또한 원인자 측과 피해자 측 간에 적정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보상 규모를 요구할 경우 원인자 측과 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에서 중재기로 하였다.

피해자합동위원회 명단				
구분	대표자	피해자	피해자와의관계	비고
유가족	서○○	이○○	조카	—
	김○○	김○○	배우자	유가족 대표
	이○○	이○○	동생	—
	김○○	김○○	동생	—
	김○○	김○	어머니	—
	정○○	정○○	언니	—
	신○○	신○○	자녀(딸)	—
	이○○	신○○	자녀(아들)	—
부상자 피해자 가족	김○○	김○○	아버지	부상자 대표
	송○○	박○○	배우자	—
	김○○	김○○	언니	2014.10.04 사망
	최○○	정○○	어머니	—
	조○○	이○○	회사관계자	—

입원환자 지원에 대해서는 치료비, 간접비용, 후유장애 등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CJ푸드빌에서 전담직원을 지정·관리토록 촉구하였다. 고양시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행·재정적 무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의견 수렴과 불만사항을 관리하며 재정 부분은 원인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중재 역할에 한정을 두기로 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 변호사 현황			
명칭	소재지	연락처	비고
법무법인 TLBS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61, 12층 (중곡동)	(대표)02-498-1177 (팩스)02-498-9584	전화상담 가능
법무법인 덕양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701호 (화정동)	(대표)031-966-6164 (팩스)031-979-6688	전화상담 가능
법무법인 목성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303호 (장항동)	(대표)031-904-3811 (팩스)031-904-3812	전화상담 가능
법무법인 산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3, 4층 (서초동)	(대표)02-595-0001 (팩스)02-595-0440	전화상담 가능
이건태 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대표)02-593-0123 (팩스)02-593-3322	전화상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층	(대표)031-903-5132	전화상담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일산동구 장백로 209 • 오전 10시~12시: 변호사 상담 • 오후 14시~16시: 법무사 상담	—	방문상담만 가능

협업체 구성을 위한 고양시의 노력

- ① 05. 30 :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관련 업체가 협업체에 참여되도록 지원 요청
- ② 유은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협조 요청
- ③ 고양시 보건소 직원과 CJ푸드빌 측 직원명단 공유
- ④ 관련업체 담당자 연락처 및 그간 추진내용을 CJ푸드빌에 정리 요청
- ⑤ 06. 03 : 협업체 구성을 위한 업체 회의 개최
- ⑥ 06. 05 : 협업체 구성을 위한 촉구 공문 발송
- ⑦ 06. 18 : 유은혜 국회의원이 피해자 측·원인자 측 면담 주선을 시에 요청

보상협업체 조기 구성을 위해 중앙차원의 지원 요청

고양시는 유은혜 국회의원 보좌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관련 업체가 협업체에 참여되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관련 업체가 보상협약에 미흡하게 대처 시 국회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다시 6월 3일에 소방방재청장에게 특별지원요청 서한문 및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업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양시 3개 보건소별 담당 직원과 병원에 주재한 CJ푸드빌 측 직원의 명단을 상호 공유하도록 하고, CJ푸드빌로 하여금 관련 6개 업체 실무담당자의 전화 번호를 요청하였다. 또한, 협업체 구성을 위한 CJ푸드빌의 관련 업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방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최봉순입니다.

지난 달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고수습에 임하여 왔으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6월 1일까지 발인을 완료하고 입원자 12명을 포함한 부상자 치료에도 의요기관과 협조 아래 피해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가족들의 장례절차가 끝나감에 따라 피해자측의 보상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에 관한 요구와 불만의 강도는 협의가 늦어질 수록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고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회사 측에서 속히 협의에 응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기업이고, 본사가 서울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불임 사고관련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사고수습과 관련한 협의에 응하여 조기에 사태가 수습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오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데도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청장님의 건강하심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14년 6월 일

고양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최 봉 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낸 특별지원요청 서한문〉

건물주, 관리업체의 비협조로 1차 협업체 협상 결렬

6월 3일에는 본격적인 협업체 구성을 위한 7개 업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일산동구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총괄과, 안전도시팀장 등 고양시 관련자 5명과 CJ푸드빌, 맥쿼리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 명인ENG, 동양공무 등 관련 업체 11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CJ푸드빌 측에서 시공사(동양공무, 명인ENG)는 통제 아래 협업체 구성이 가능하나, 건물도 책임이 있는 만큼 건물주와 관리업체도 대표 구성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맥쿼리자산운용(건물주)은 동참 의향을 밝혔으나,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와 삼구INC(건물관리업체)는 거부 의사를 밝혀 협업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CJ푸드빌 측은 다음날부터 각 회사와 개별접촉 예정으로 고양시에서도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와 삼구INC에 동참을 독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상협업체 구성을 위한 고양시·관련 업체 1차 회의

- 일 시 : 2014. 6. 3. PM 15 : 00 ~ PM 16 : 45
- 장 소 : 일산동구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고양시 부시장 외 4인/ CJ푸드빌 외 6개 업체
- 회의결과 : 대수선공사시공사(동양공무, 명인ENG)는 발주처인 CJ푸드빌의 통제 아래 협업체 구성이 가능하나 건물주(맥쿼리자산운용)나 건물관리업체(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의 소극적 대응으로 협업체 협상 결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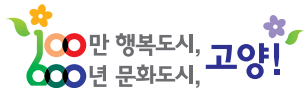
책임 전가 업체에 대한 설득과 노력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은 시공관련 3사를 대표하여 보상 주간사를 자청하고 있으나 건물 관련 4개사는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다. 이에 고양시는 우선 CJ푸드빌에서 보상협의, 입원환자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기타 4개사(한국증권금융, 맥쿼리자산운용,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에 대해 보상협업체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건물관리관계사로 하여금 시에서 협업체에 참가하게 하는 강제 수단은 없으나 소극적인 4개사가 보상협업체가 되어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관에 요청하는 등 설득과 노력을 기울였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다중이용업소)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이후 6월 5일,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와 삼구INC에 협업체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건물관련 3개 업체(맥쿼리자산운용,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 중 6월 9일까지 협업체 대표 결정 통보가 없는 때에는 고양시에서 맥쿼리자산운용을 건물관리 부분의 협업체 대표로 지정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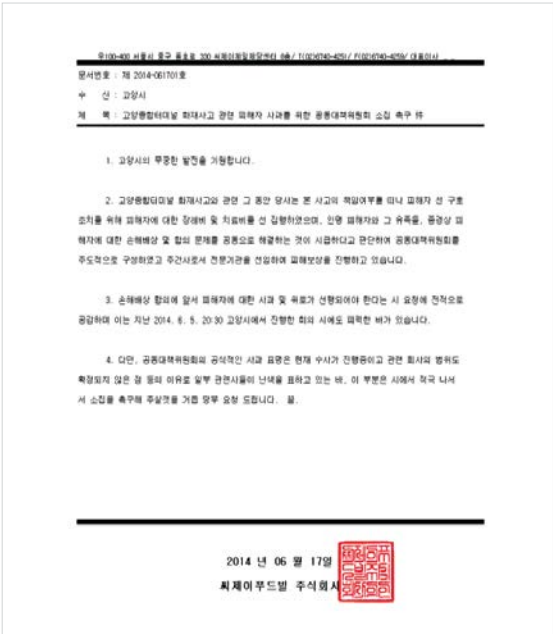
3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화재사고 관련업체 현황					
업체명	역할	대표자	대표전화/휴대전화	실무담당자	비고
한국증권금융	건물명역자 (임대자)	박○○	02-3770-8800	정○○(차장) 02-3770-8800	—
맥쿼리자산운용	건물자산 운용사	백○○	02-3705-8565	신○○(부장) 02-3705-8565	실제 건물소유권자인 자산운용사로서협의체 구성 대상업체임
쿠시먼&웨이크 필드코리아	건물자산관리	황○○	02-3708-3850	이○○(이사) 02-318-8322	맥쿼리로부터 건물자산 관리 위탁자로서 협의체 구성 대상업체임
삼구INC	건물시설/ 안전관리	구○○	02-828-3939	김○○(소장) 02-828-3939	쿠시먼으로부터 건물 시설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로 구성 대상업체임
동양공무	설비시공	김○○	02-2601-6501	김○○(이사) 02-2601-6501	푸드코트 시공 원청사
명인ENG	가스도급업체	이○○	032-673-8220	이○○(대표) 032-673-8220	푸드코트 시공 하청사
CJ푸드빌	공사발주업체	정○○	02-6740-4300 (대표직통)	서○○(이사) 1577-0700	푸드코트 공사발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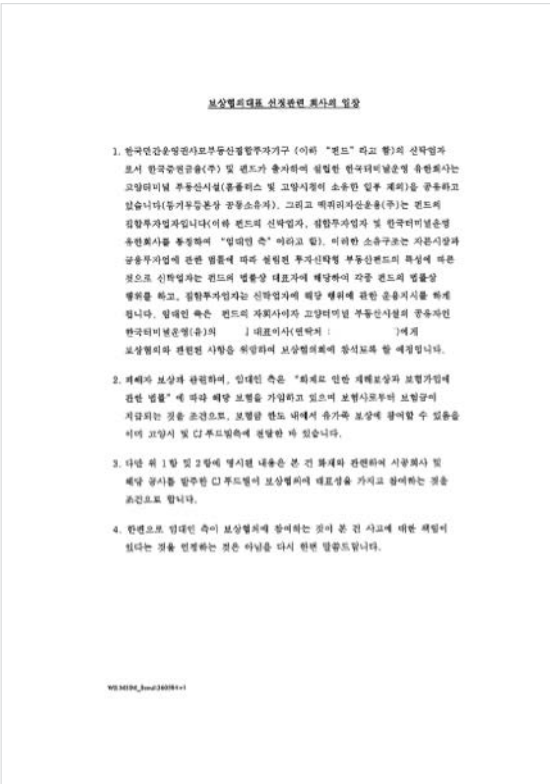
〈CJ푸드빌의 치료비 지급보증 공문〉



〈고양시에 공동대책위원회 소집 촉구를 요청하는 CJ푸드빌 공문〉



〈보상협의 대표 선정요청에 대한 맥쿼리의 회신 1〉



〈보상협의 대표 선정요청에 대한 맥쿼리의 회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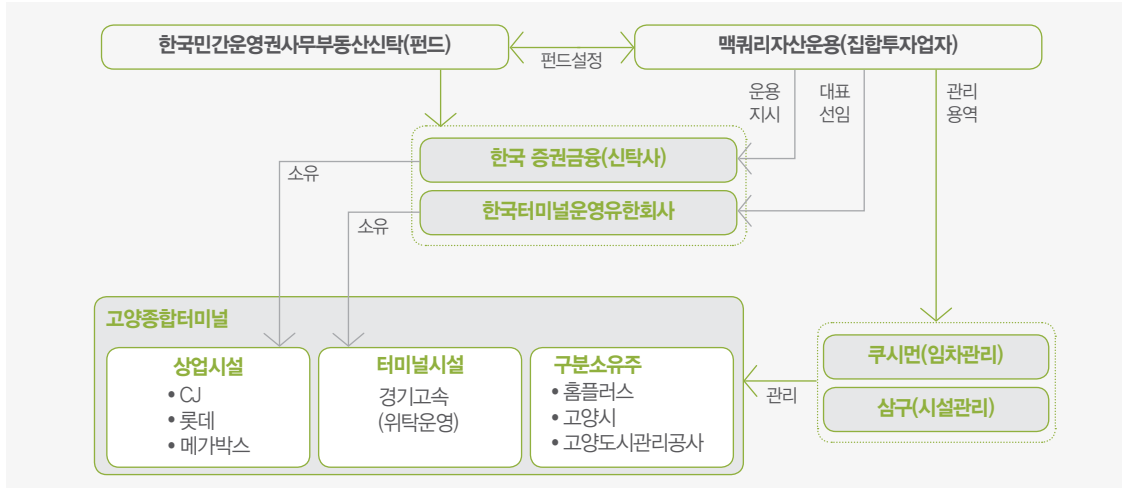
CJ푸드빌을 필두로 원인자 측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완료

같은 날, CJ푸드빌 서○○ 이사와 직원이 시청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CJ푸드빌 측에서는 신속한 보상 진행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유가족 또는 보호자와 보상업무가 협의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손해사정인이 보상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6개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주기를 요청하였다.

CJ푸드빌에서 관련 업체의 위임장을 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6월 9일에는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신○○ 부장 외 1명이 시청을 방문하여 가진 면담에서 가입한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건물관리 관련 4개사의 역할 차트 설명자료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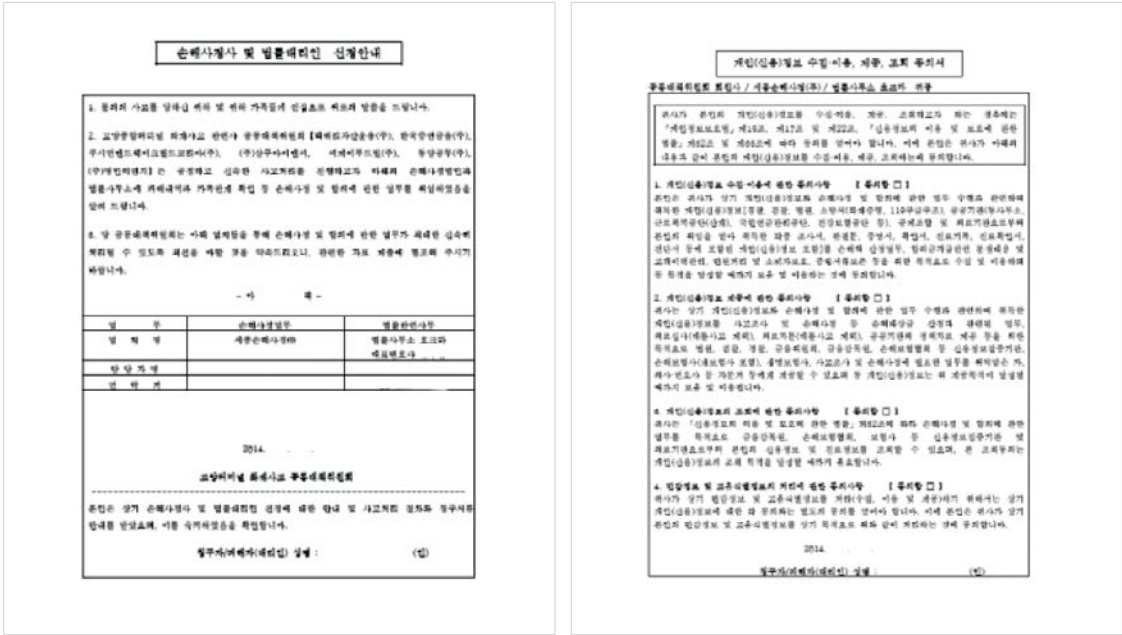
■ 고양종합터미널 소유·관리 구조



13일, 원인자 측에서 손해사정사 및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고 해당 내용을 피해자합동위원회 7명에게 이메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17일 CJ푸드빌을 대표 주간사로 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 원인자 공동대책위원회의 손해사정사 선정 안내문

- 손해사정사 : 세종손해사정(주) • 법률대리인 : 법률사무소 호크마(대표 변호사 김○○, ☎ 02-532-6804)



사고합동위원회 중재로 피해보상의 기본 틀 마련

피해자합동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 면담

- 일 시 : 2014. 6. 25. PM 21 : 30 ~ PM 23 : 40
- 장 소 : 시민컨퍼런스룸
- 참석자
 - 피해자 측 : 김○○ 대표 외 6명
 - 원인자 측 : CJ푸드빌 대표 정○○ 외 6명
 - 국 회 : 유은혜, 김기식 국회의원
 - 고 양 시 : 시장 외 10명

유은혜 의원 면담에서 보상협의 원칙에 양측 합의

유은혜 국회의원이 6월 18일 피해자 측·원인자 측 면담 주선을 시에 요청한 바에 따라 공동면담이 25일 시민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피해자 측 김서영 대표 외 6명, 원인자 측 CJ푸드빌 대표 외 6명, 그리고 유은혜, 김기식 국회의원과 고양시장 외 고양시 직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인자 측은 사과 의견을 표명하고 피해보상 계획 및 그에 따른 기준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인자 측은 사회통념상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보상액은 원인자 측에서 선지급하고 법적인 책임지분은 향후 원인자 측에서 내부 논의 처리한다.
- ③ 피해자 측 서○○, 원인자 측 CJ푸드빌 서○○ 이사를 연락처로 정하고 양쪽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상협상에 임하며, 고양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및 고문변호사가 중재자 입장으로 참여한다.
- ④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방법을 강구한다.
- ⑤ 합의사항을 조문화 한다.

합리적인 보상금 합의 방법 찾기

유가족의 대위변제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6월 8일 면담에서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나선 피해자 측은 고양시에서 책임지고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를 요구했다. 서해 웨리오 침몰사고,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등 국내 여러 곳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해당 사례는 직·간접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과 사회적으로 책임이 따른 경우였다. 또한, 시에서 대위변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추후 구상권 청구 시 시에서 지급한 배상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절차 상 보상의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보상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시에서 대위변제를 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시의회 의결·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했다. 무엇보다도 CJ푸드빌 등 원인자 측이 배상 담보능력이 있고 보상협의를 임할 의사가 있는 만큼 직접 보상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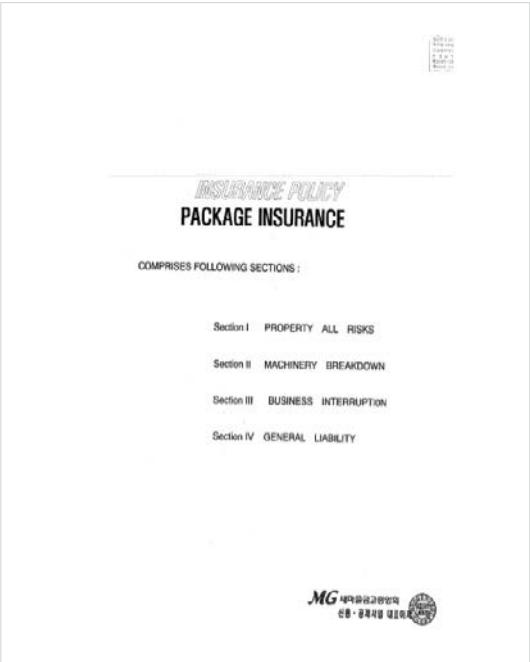
화재사고 보상방법 장·단점 비교·분석		
구분	당사자간 직접배상	행정기관의 대위변제
개요	▶ 화재사고 원인자가 보상협의를 구성하여 피해자 측과 직접협상 ▶ 보상금 담보능력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총 870억원)으로 배상능력 확보	▶ 시 차원의 피해자 선보상, 후가해측에 구상권 청구 ▶ 통상적으로 가해측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신속한 사고수습을 통한 사회안정의 목적이 있음
처리 절차	▶ 협의체 구성→손해사정 기준 마련→보상협의→합의서 작성→보상금 지급 (약 30일 이내 배상금 지급 가능)	▶ 배상조례제정→피해자배상신청→손해배상금사정(특임사정사)→배상심의위의결→피해자배상결정통지→합의서작성→손해배상금지급→구상권청구, 약 3~4개월 소요 예정
장점	▶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보상협의 및 배상금 지급이 가능(기업 이미지상 신속 결정, 보상폭 유연) ▶ 보상협의 및 배상금 지급 절차 간단 ▶ 가해측 보상담보능력에 따라 피해자 배상금액조정이 유연함	▶ 신속한 사고수습을 통한 사회안정에 기여 ▶ 보상협의창구의 단일화와 안정적 보상 가능
단점	▶ 가해자측에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실질적 보상 협의가 불가 → CJ등의 보상담보능력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충족됨 ▶ 가해측이 다수이거나 사고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협의 창구 확보가 어려움 → CJ푸드빌을 주축으로 보상협의체 구성 진행 중임 ▶ 보상협의 시 피해가족측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 고양시에서 피해가족 요청 시 법률상담·자문지원및 기타 중재 가능	▶ 조례제정 및 예산 요구 시 대위변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당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시의회 설득 가능 ▶ 시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도비 특별지원이 요구되나, 화성씨랜드 사례를보면 가능성 희박 * 근거미약으로 도로사업 명목하에 도비만 14억 지원됨 ▶ 당사자간 직접배상에 비해 절차 복잡으로 신속한 보상처리가 어려움 ▶ 구상권 청구로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상당금액 결손처리됨 ▶ 공무원이 법규내 처리 시 운신폭 좁고 상당 기간 소요
비고	—	▶ 화성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 및 인천호프집화재사고 시 적용되었으나, 가해측 모두 배상능력 결여로 행정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뤄짐 ▶ 나머지는 국가·지자체가 당사자임

원인자 측 보험가입 내역

6월 9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관련 보험가입현황 제출' 공문(문서번호 : 고양시 안전총괄과-10685)을 원인자 측 7개사에 발송했다. 그리고, 사전조사에 의해 건물주인 맥쿼리자산운용이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재산종합공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보험사와 통화한 결과, 보험금은 “법적 보상액+배상책임한도(10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다는 회신을 받았다. 쿠시먼 & 웨이크필드코리아의 경우 변호사와 상의 후 6월 12일 공문과 함께 제출, 기타 5개사는 보험 가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주 가입 보험	
보 험 명	재산종합공제 (보험사 : MG새마을금고중앙회)
증권번호	96010907-9063-6
가 입 자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 (맥쿼리자산운용 사모펀드)
총가입금액	870억원, 배상책임한도(1사고당) 10억원
법적 보상액 기준	• 사망자 1인당 8천만원, 부상자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천 5백만원 • 후유장애 : 정도에 따라 1인당 최고 8천만원
근거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 보험사 담당자 : 공제관리부 김 ○ ○ 과장(☎02-2145-9353) / 통화일자: 14. 6. 9 10:26



〈맥쿼리 화재보험증권〉



〈쿠시먼 화재보험증권〉



〈맥쿼리 신탁을 맡은 한국증권금융의 명단 참석 회신 공문〉



〈새마을금고 보험 사고접수증〉

피해자 측에 등기부 등본 송부

고양종합터미널 소유권 구분등기는 총 757건으로 소유자는 한국금융증권(주), 홈플러스, 고양시로 되어 있다.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피해자합동위원회」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 은 총 4,000여쪽에 달하여 유가족 대표 신○○에게 E-mail로 송부되었다.

시군구명	법정동	지번	호 명칭	소유자	비 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2	영화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지상 5~7층
			창업지원센터	고양시	지상 4층
			여객자동차터미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지상 1~2층
			쇼핑센터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지하 1층
			대형마트 및 주차장	홈플러스 주식회사	지하 2~3층
			환승주차장	고양시	지하 4층

피해자 가족 회의

6월 28일 피해자 가족 회의가 소집됐다. 피해자 측은 고양시에 협상중재를 위한 회의장 및 피해자 가족 2차 회의장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을 제공했다. 또, 중상 입원자와 관련하여 중국교포 이○○에 대한 식비, 교통비, 급여자금 및 중상자 김○○에 대한 가사도우미 요청 등이 추가로 거론되었다.

피해자 가족 1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14. 6. 28. 14 : 00 ~ 17 : 00
- 장 소 :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
- 참석자 : 피해자 가족 15명
- 내 용 : ① 협상중재 회의장 제공 요청
- 6. 29(일) 15:00,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
- 참석자 : 피해자합동위원회, 원인자측 협상대표, 고양시 대표
- ② 피해자 가족 2차 회의장소 제공 요청
- 6. 29(일) 18:00,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
- 참석자 : 피해자 가족 25여명
- ③ 중상 입원자 관련 요청
- 중국교포 이○○: 식비, 교통비, 급여자금 요청
- 중 상 자 김○○: 가사도우미 요청

보상금 산정원칙

적절한 사고 보상금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국내 대규모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판결을 분석하였다.

■ 국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사례 보상금 분석

손해배상(법적 보상금) 범위 : ①치료비+②장례비+③개호비(후유장애 치료)+④일실이익+⑤위자료

- ① 사고 발생부터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의료행위(응급조치, 후송진찰, 입원, 투약, 수술, 처치, 통원, 전원, 퇴원, 간호, 치아보철 등과 기타 의료장비 등도 포함). 여기서 “항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치료를 요구한 경우
- ② 사망직후 사체의 이송에서부터 매장, 또는 화장할 때까지의 소요된 주식접대비, 제례비용, 묘지구입 및 사용료, 묘지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
- ③ 피해자가 증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비용
- ④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등의 치료기간 동안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의 상실액(휴업손해)과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의 상실액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이는 국가배상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에 따라 일실수입액 산정과 관련한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복리식 할인방법인 라이프니츠 방식과 단리식 할인방법인 호프만 방식으로 가동연한은 대체적으로 60세로 한정하여 협의 결정
- 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민법 제751조 적용)

국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사례							
구 분	사고일시 (사망/부상)	보 상					비고 (보상일 합의일)
		보상주체	보상금전체	장례비	위자료	특별위로금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14.02.17 (10/124)	-코오롱 -부산외대	인명 60억 추정 (비공개)	-	-	-	합의일 14.02.20
부산 시크 노래방 화재	12.05.05 (9/18)	-건물주 -영업주	인명 11억 추정	670만원	-	-	피해보상 소송 중
이천 코리아 냉동 물류창고 화재	08.01.07 (40/10)	-(주)코리아냉동	인명 44억	-	사망 5천만원	-	합의일 08.01.14
창녕 화왕산 역새태우기 화재	09.02.09 (7/81)	-창녕군	인명 138억	2천4백만원	-	사망 2억7천만원	-
상주시민운 동장 공연 압사사고	05.10.03 (11/162)	-상주시 -MBC -국제문화진흥협회 -강한경호	인명 84억	700만원	-	사망 2억2천 1백만원	합의일 07.10
대구지하철 화재	95.04.28 (192/133)	-방화범(김대환)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시	인명 1,150억 (물적 45억)	700만원	사망 7천만원	사망 2억2천 1백만원	합의일 03.6.25
인천호프집 화재	99.10.30 (57/80)	-호프집업주 -건물주, 관리인	인명 151억	-	-	사망 8천만원	보상일 00.1.30
화성씨랜드 화재	99.06.30 (23/6)	-씨랜드 -소망유치원	인명 56억	400만원	사망 4천만원	사망 8천만원	-
삼풍백화점 붕괴	95.06.29 (502/937)	-삼풍백화점(주) -삼풍건설사업	인명 3,400억 (물적 600억)	400만원	사망 4천만원	사망 1억7천만원	-
대구도시가스 폭발 사고	03.02.18 (102/202)	-표준개발(주) -태백종합건설	인명 457억 (물적 43억)	400만원	-	사망 1억7천만원	-
성수대교 붕괴	94.10.21 (32/17)	-동아건설(주) -서울시	인명 71억 (물적 788억)	400만원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합의일 94.11.19
서해훼리호 침몰	93.10.10 (292/0)	-서해훼리(주) -한국해운조합 -국가(행만청)	인명 300억	200만원	-	-	-

■ 화재사고 보상 계산방법 비교

구 분	호프만식				라이프니쯔식					
정의	▶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출				▶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					
계산방법	▶ 총수입 = 일할 수 있었을 연수 × (연평균근로소득 - 생활비 · 세금 등) · 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 (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연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함					
특징	▶ 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는 방식 -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라이프니쯔계산법 보다 큼				▶ 보험사가 채택하는 방식 -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호프만계산법 보다 작음					
호프만 지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9.098	32	29.9804	33	30.8595	34	31.7354	35	32.6081
	36	33.4777	37	34.3441	38	35.2074	39	36.0676	40	36.9248
	41	37.7789	42	38.6299	43	39.478	44	40.3231	45	41.1652
	46	42.0043	47	42.8406	48	43.6739	49	44.5043	50	45.3319
	51	46.1567	52	46.9786	53	47.7977	54	48.614	55	49.4276
	56	50.2384	57	51.0465	58	51.8519	59	52.6545	60	53.4545
	61	54.2519	62	55.0466	63	55.8387	64	56.6281	65	57.415
	66	58.1993	67	58.9811	68	59.7603	69	60.537	70	61.3112
	71	62.0829	72	62.8521	73	63.6189	74	64.3832	75	65.1451
	76	65.9046	77	66.6617	78	67.4164	79	68.1688	80	68.9188
	81	69.6665	82	70.4118	83	71.1548	84	71.8956	85	72.634
	86	73.3702	87	74.1042	88	74.8359	89	75.5654	90	76.2926
	91	77.0177	92	77.7406	93	78.4613	94	79.1799	95	79.8963
	96	80.6106	97	81.3228	98	82.0328	99	82.7408	100	83.4467
	101	84.1505	102	84.8522	103	85.5519	104	86.2496	105	86.9453
	106	87.6389	107	88.3306	108	89.0202	109	89.7079	110	90.3936
	111	91.0774	112	91.7592	113	92.4391	114	93.117	115	93.7931
	116	94.4673	117	95.1395	118	95.8099	119	96.4784	120	97.1451
	121	97.8099	122	98.4729	123	99.1341	124	99.7934	125	100.4509
	126	101.1067	127	101.7606	128	102.4128	129	103.0632	130	103.7119
	131	104.3588	132	105.0039	133	105.6473	134	106.2891	135	106.9291
	136	107.5674	137	108.204	138	108.8389	139	109.4721	140	110.1037
	141	110.7336	142	111.3619	143	111.9885	144	112.6135	145	113.2369
	146	113.8587	147	114.4788	148	115.0974	149	115.7143	150	116.3297
	151	116.9435	152	117.5558	153	118.1665	154	118.7756	155	119.3832

3차에 걸쳐 타결된 보상 협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시의 중재 아래 3차에 걸쳐 피해자 가족과 원인자가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금 합의가 곧 이루어졌다.

1차 공동협상대표단회의

6월 29일, 피해자 측-원인자 측-중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상대표단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서는 우선, 공개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원하는 피해자 측에 원인자 측 7개사가 논의하여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합의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측이 [기초금액 산정+위로금=총액]을 지급하려고 하니,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피해자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기초금액은 각 개인의 피해에 따라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한 사항이니 위로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원인자 측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로금에 대하여 먼저 내부적으로 논의 후 다음 회의 때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타, CJ푸드빌이 원인자 측 대표 주간사로 위임받은 문서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어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공동협상대표단회의

- **일 시** : 2014. 6. 29. 15:00~16:00
- **장 소** :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
- **참석자** : ① 피해자 측 - 김○○, 서○○, 신○○, 김○○, 오○○(변호사)
② 원인자 측 - CJ푸드빌 서○○ 이사, 박○○ 부장, 맥쿼리자산운용 박○○ 전무, 김○○(변호사)
③ 중 재 자 -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 **결 과** : ① 공개사과 방법 논의
②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합의건
③ 원인자 측 주간사 위임문서 제출 요구

2차 공동협상대표단회의

이어 7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2차 협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인자측은 사망자에 대해서 ○○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측은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인자측에서 내부 검토 후 3차 협상에서 답변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차 보상협상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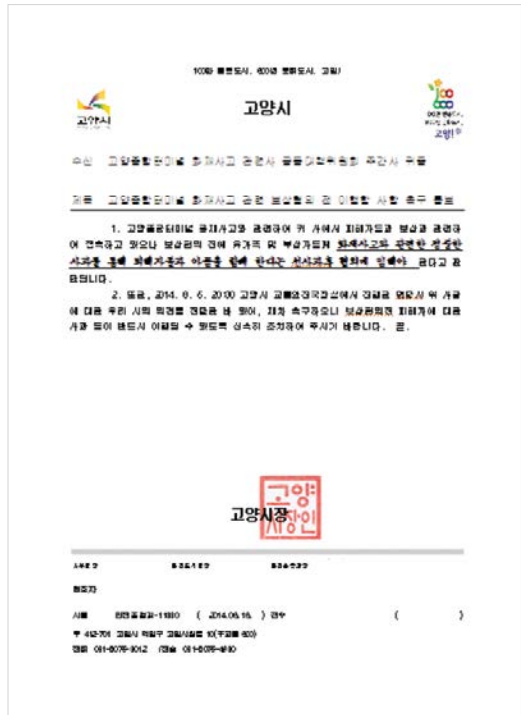
- **일 시** : 2014. 7. 4(금) 21 : 30 ~
- **장 소** : 상하수도사업소 3층 회의실
- **참석자** : ① 피해자 측 : 김○○, 김○○, 신○○, 서○○, 오○○(변호사)
② 원인자 측 : 공동대책위원회 주간사 CJ푸드빌 서○○, 김○○(변호사)
③ 고 양 시 : 안전총괄과장 외 1인
- **결 과** : ① 사망자 위로금-원인자 : ○○원 제시 / 피해자○○원 요구
② 중상자 위로금-원인자 : 치료비용(후유장애, 성형비 포함) 산정금액의 10~30% 지급이 관례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위로금을 중상자 가족이 제시하면 내부검토 하겠음

중상자에 대해서는 후유장애와 성형비를 포함한 치료비 산정금액의 10~3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가족이 제시할 경우 내부검토 할 뜻을 전했다. 피해자 가족 김○○의 경우, 딸의 간호를 위하여 직장을 포기한 배우자 급여분까지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뜻을 전달해 주었다.

3차 공동협상대표단회의, 최종 타결

7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3차 협상이 열렸고, 이날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우선, 사망자 위로금은 ○○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상자 위로금은 중증 화상환자는 사망자 위로금의 최고 90%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의식불명 뇌사자인 김○○의 경우 사망자 기준으로 보상한다. 중국교포 이○○은 ○○만원 또는 후유장애 등급에 의한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되 협상 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차원의 소송 등 본인의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대표단에 불참한 중상자 정용선은 원인자 측 대표가 직접 협상, 후유장애 등급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치료비+후유장애+일일이익+위로금)에 대해서는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원인자 측 김주섭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 공개사과 언론사는 연합뉴스 자막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 측 전체 가족에 대한 현장사과는 원인자의 임원 급이 정해지는 날짜에 사과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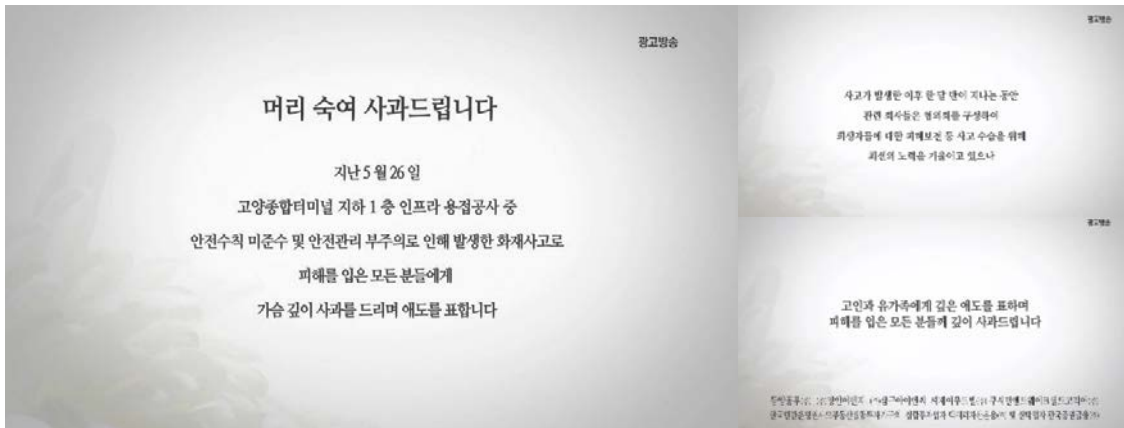
〈원인자측에 사과를 촉구하는 고양시 공문〉

이후, 세부사항은 양측 변호사가 협의하여 12명(유가족 8, 정○○을 제외한 중상자 4) 각각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러한 보상협의 내용은 다음날인 11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표단이 타 가족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진행하여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그리고, 이날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전까지 대외비로 유지해 줄 것을 원인자 측에서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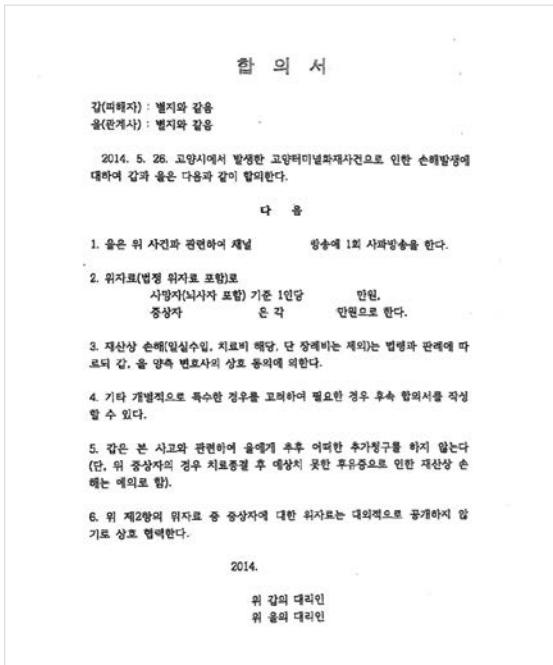
또한 고양시는 우선 원인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 및 보호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양시는 원인자 측인 7개 관련사 공동대책위원회에 보상 협의 전 화재사고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통해 아픔을 함께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6월 16일 안전총괄과에서 관련사 공동대책위원회 주간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J푸드빌 측은 고양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회사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일부 관련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시에서 나서서 소집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6월 17일에 보내왔다.

3차 보상협상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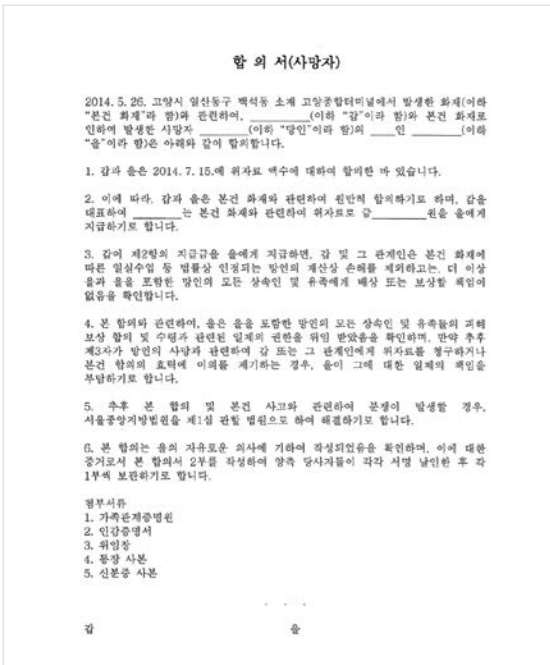
- 일 시 : 2014. 7. 10(목) 21 : 30 ~ 23 : 30
- 장 소 : 상하수도사업소 3층 회의실
- 참석자 : ① 피해자 측 : 김○○, 김○○, 신○○, 서○○, 오○○(변호사)
② 원인자 측 : CJ푸드빌 서○○, 박○○ 부장, 맥쿼리 박○○ 전무, 김○○(변호사)
③ 고 양 시 :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보좌관
- 결 과 : ① 사망자 위로금 -○○원
② 중상자 위로금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③ 공개사과 방법은 연합뉴스 자막으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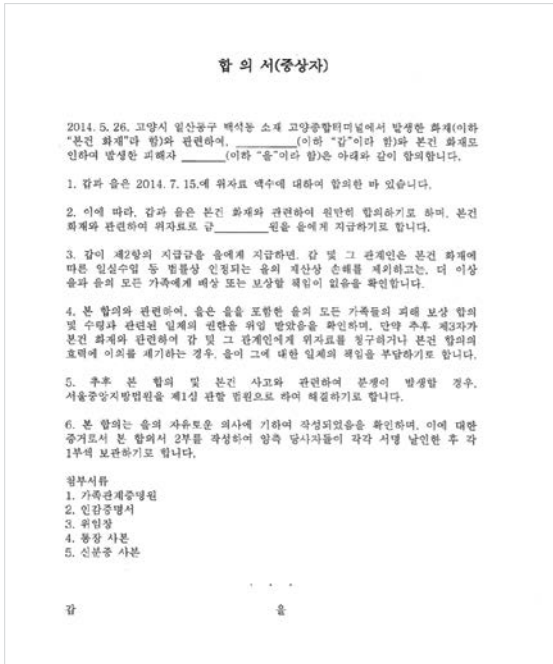
〈케이블 뉴스 채널을 통한 공개 사과〉 공개 사과문은 7월 18일 오후 8시 뉴스Y에 자막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뉴스Y는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종합뉴스 방송사이다.



〈합의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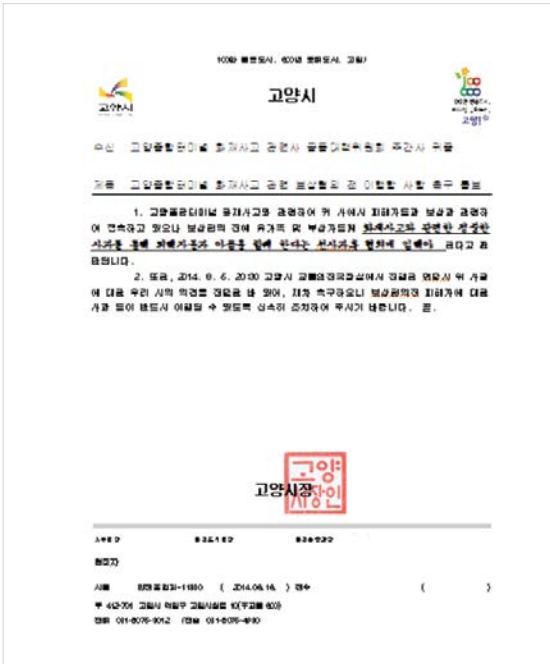


〈합의서 2〉



〈합의서 3〉

※ 합의금액 등은 양 합의주체 요청에 의해 제외 했음



〈관련사 보상 협의 전 사과 이행 촉구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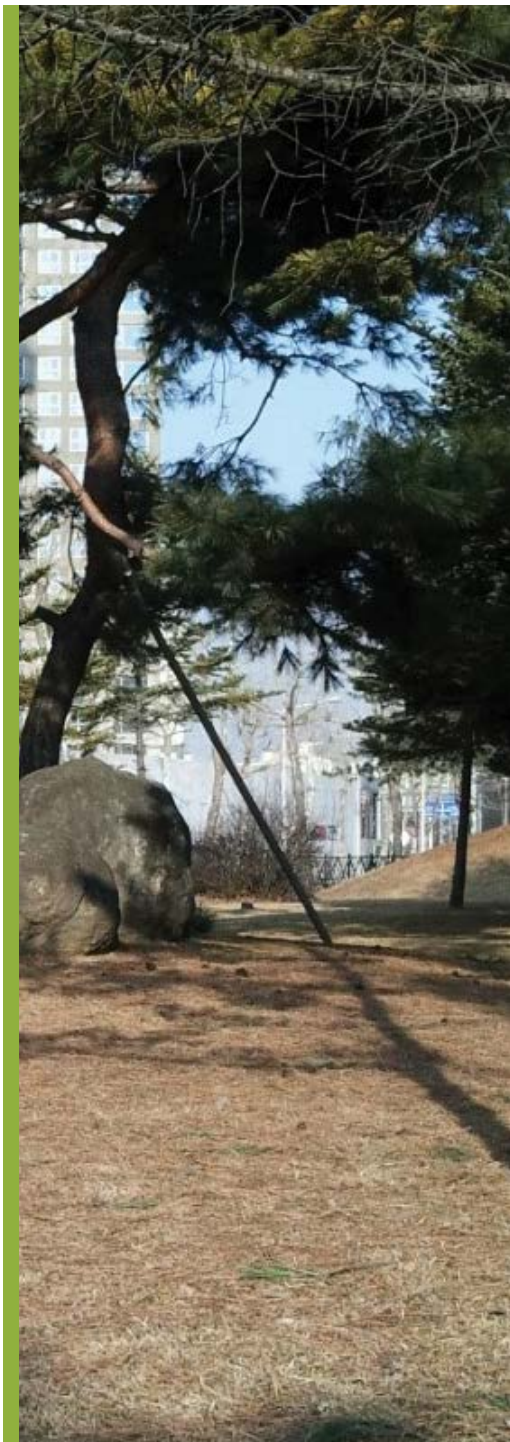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업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일만은 아니었다.
평소 이용하던 장소에서 하루 아침에 화마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소식을 접하며 고양시민
모두는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희생된 화재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백석근린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 합당하고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하여
-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업
- 반성, 그리고 다짐





그날의 아픔, 잊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 희생자 추모비 건립하자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화재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터미널 인근 백석근린 공원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건립 과정에서 유족과 일부 주민·상인들이 부지를 놓고 대립하였으나, 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

- 위 치 : 터미널 인근 백석근린공원 녹지 공간
- 일 정 : 08.17. 설치장소 확인
08.27. 디자인 초안 작성(별첨)
09.20. 까지 디자인 초안 내부 및 유가족 협의
12.26. 까지 공원점용허가
12.26. 까지 설치공사계약
2015.1.30. 추모비 건립 완료

유가족들의 희생자 추모비 건립 제안

화재사고 이후 관내 초등학교에서 성금을 받은 가족들이 추모비 건립에 써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 대표 김○○은 추모비 건립에 따른 절차 이행과 추가 재원을 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은 다중이용 시설로서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했고 사유시설로서 맥쿼리 등 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했다.

또, '추모비'란 수 백 년, 수 천 년간 보존되어야 하는데 향후 건물 철거 시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시비예산 투입 역시 시의회 의결 등 시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협의해야 할 당사자와 기관이 많아 시일을 두고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건립 위치 및 시안 등 추모비 제작 착수

8월 16일, 추모비 건립 위치 확인을 위해 피해자 가족 김○○ 외 2인과 안전도시팀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위치는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측면(중앙로변)에 위치한 녹지 공간으로 유가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추모비의 형태 및 크기·재원은 유가족 측에서 시에 일임하였다.

■ 추모비 초안 시안



■ 유가족 측에서 요청한 위치



건물 소유주의 반대와 보존 가능성

11월 23일, 유가족 대표회의가 소집됐다. 안전도시팀장 외 2인과 유가족 대표 김○○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건립 진행사항과 건립에 따른 동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건립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가족과 함께 추모비 제작안을 협의하고 유가족이 동의한 디자인 안에 대해 선관위 의견을 조화한 후 추모비 가능 여부를 유가족에게 회신한다.

먼저 유가족이 요청한 추모비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인 맥쿼리에 동의를 구했는데 1층 건물부지 녹지 공간이나 5층 옥상공원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터미널 건물 자체가 사모펀드 형태의 다수 실소유자로 동서서 징구가 불가하고 입점자 설득이 어렵다는 사유였다. 결국, 화재사고 피해자와 원인자간 당초 합의안에 없었던 새로운 추모비 건립은 추가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따라서, 터미널 부지 내 추모비 설치에 대해 소유자 및 입점자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유가족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양시의 대안

유가족 대표는 1층 녹지공간 또는 옥상공원의 설치를 계속 추진하되 대안으로 백석역 7번 출구 도로부지(인도) 상에 추모비 건립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추모비는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지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보행공간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백석역 사거리에 면하고 있고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관광안내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시민편의시설을 철거하고 특정인을 위한 추모비를 설치할 경우 보행 방해 및 어린이 안전사고,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일반 시민들과 버스터미널 입점자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이었다. 이에, 실무부서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추모비의 설치 목적, 장기적 보존이 가능 여부, 유가족 및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의 백석근린공원 내 녹지공간에 추모비를 설치할 것을 유가족과 협의하였다. 이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 관리과에서 공원점용허가를 내고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움과 희망의 달무리개, 백석근린공원에 뜨다

2015년 2월 15일, 고양시장은 유가족 대표와 함께 추모비를 찾아 헌화 하며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로 했다. 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굳건히 대처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 추모비 설치 위치





반성, 그리고 다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고양시 사상 초유의
재난사고였다. 신고 접수 후 긴급히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며 백만 시민의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 합당하고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하여
-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사업
- 반성, 그리고 다짐



종합 컨트롤 타워의 운영 미흡으로 다소 혼란스러웠던 초동대처

이번 화재사고는 고양시에서 발생한 초유의 대형 사회재난이었다. 때문에 사고수습과정에서 관련부서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흡한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이 늦어지고 내부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재난 상황 접수 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은 업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어 불가항력적으로 고양시 재난대책본부장의 부재로 이어져 각종 결정의 지연으로 유가족 및 부상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또, 병원별 직원의 파견이 늦어 중·경상자 확인이 지연되면서 부상자 가족들이 여러 병원으로 직접 환자를 찾아 다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심지어 사망자의 넋을 위로할 합동장례식장(합동분향소)조차 유가족 측에서 설치를 요구한 이후에야 설치하는 등 수동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고 원인자 측인 7개 업체의 서로간 책임 전가와 소극적 대응, 고양종합터미널 관련부서의 소극적 대응 등 종합 컨트롤 타워의 운영 미흡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원성을 듣는 이유가 되었다.

초동대처 미흡한 점

- ① 병원별 직원 파견이 늦어 중·경상자 확인 지연
- ②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의 의견 전달 늦어짐→ 합동장례식장 또는 합동분향소 설치 등
- ③ 원인자측의 소극적인 대응 및 책임 전가
- ④ 고양종합터미널 관련부서의 소극적인 대응

원인자의 책임전가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수습상황

수습상황에서도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들

수습상황에서도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원인자 측에서 수습방안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았는데 당초 약속된 1, 2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해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사용을 허락하게 하였다.

피해자 민원 접수 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과 원인자 측간 상호 소통 창구 개설이 지연되어 피해자 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는 분야별 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 요구사항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인자 측 7개 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와 미루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병원 측의 비협조로 사상자 현황 파악이 늦어졌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상자 진료 현황 제출을 거부하거나 병원 관리부서의 소극적 대응이 주된 이유였다. 피해자 측 대표 및 변호사 선임이 지연되어 면담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수습상황 문제점

- 원인자 측 7개 업체의 신속한 수습방안 기준 마련 지연
→ 당초 1,2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불가를 항의하자 사용 허락 등
- 피해자 민원 접수 시 재난종합상황실 ↔ 원인자 측 소통창구 개설 지연으로 요구사항 즉시 미해결
→ 분야별 담당자 미지정으로 요구사항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림
- 원인자 측 7개 업체 책임전가 또는 미루기 → 전향적으로 피해자 요구사항 수용 촉구함
- 병원 측의 비협조로 사상자 현황 파악이 늦어짐
→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상자 진료 현황 제출 거부 / 병원 관리부서의 소극적 대응
- 피해자 측 대표선임 지연 및 변호사 선임 지연으로 면담이 늦어짐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재난상황 근본 대처 필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 개선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사망 3명, 부상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현장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사고의 특성상 현장은 소방서에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소방서장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여 진두지휘하며, 화재진압 시에는 경찰이 현장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화재진압은 수분에서 수시간만에 완료되며 화재진압이 완료되면 소방서는 복귀한다. 결국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상황이 끝난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은 현장 상황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재난 시 긴급 구호를 위한 지원예산 규정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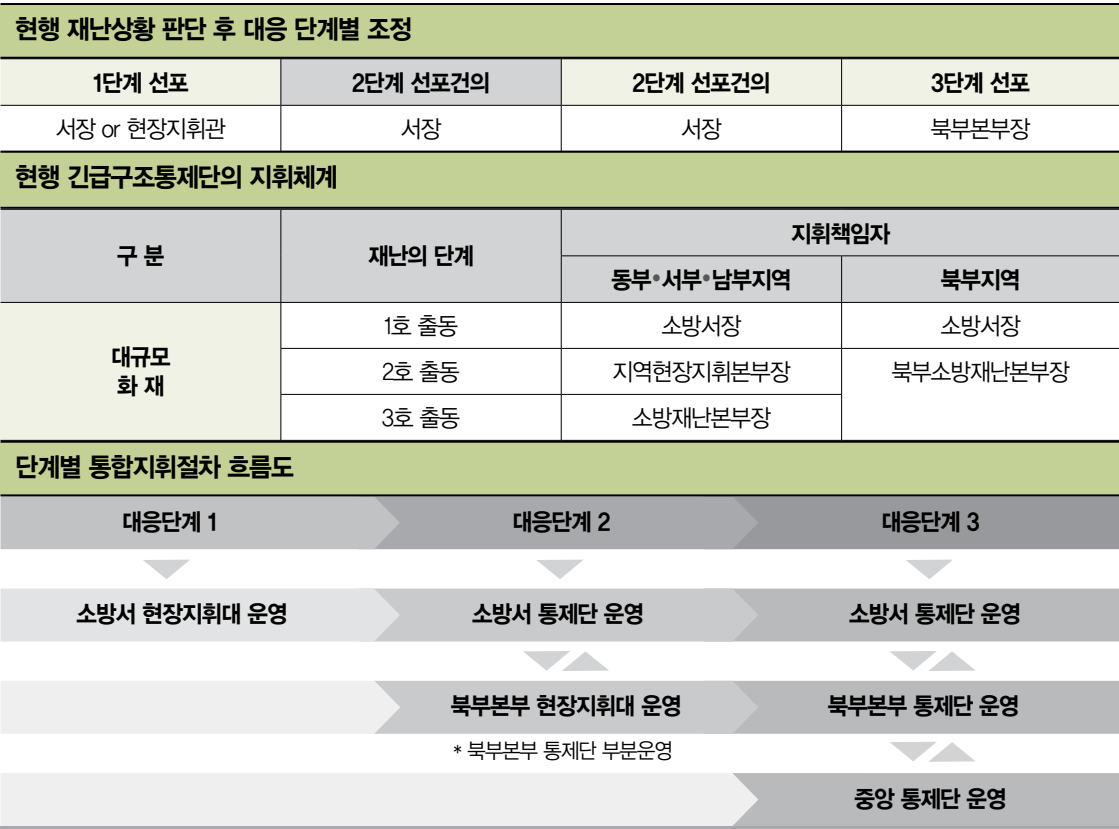
가해자가 없는 자연재난에 비해 인적재난은 국가, 개인, 법인 등의 가해자가 반드시 존재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개인 과실의 인적재난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인적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만이라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를 할 수 있으나 세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효율적 소방전술과 신속한 화재진압... 그러나 남겨진 숙제

재난 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상황에 따라 재난 판단과 대응 단계를 조정하여야 하나 현행기준상 단계별 책임지휘자가 달라 신속한 대응단계 상황 등 가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후에도 임무별로 통신수단이 부족하여 긴박한 현장 상황의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현장지휘소와 원활한 통신을 위한 요원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동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04

재난
관리 대응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과 변화로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에 강한 안전 대한민국

백만이 행복한 고양을 만들어 간다



고양시의 재난재해 대응 변화

안전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고양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시민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조직 변화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을 지켜가고 있다.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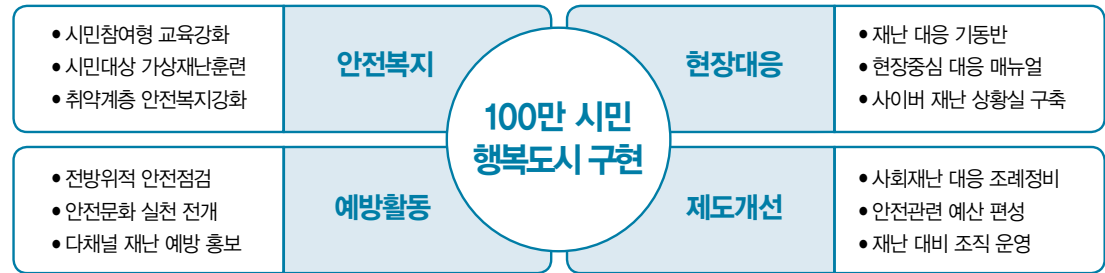
- 고양시의 재난재해 대응 변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복지 정착
 - | 재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 제도 개선 및 유기적 조직 변화
- 소방서 재난 대응 변화(일산소방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대응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양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방, 안전복지, 제도개선, 현장대응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복지 정착

안전은 행정기관 일방의 의무나 책임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재난 안전복지 정책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워
고양만의 백만 안전복지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시민참여 안전체험 강화

거듭되는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100만 시민 안전문화교육을 적극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시민안전교육장)에 가상 재난 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한정된 공간이나 올해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30,000명 이상의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 재해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안전교육장에는 지진체험관, 화재대피체험관, 화생방체험관, 고층대피체험관, 심폐소생술 등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요령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안전교육장까지 오시기 어려운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약 40,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 교육은 자격 있는 강사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시민안전체험장(심폐소생술 실습)



시민안전체험장(소화기 사용 체험)



시민안전체험장(완강기 체험)



시민안전체험장(방독면 사용법 체험)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재해 대비 실제훈련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고양시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실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을지훈련과 병행하여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의 방화 및 생화학 테러에 대한 실제 상황 연출하여 초기 대응활동 및 상황 전파,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지하철 화재 및 탈선복구 훈련을 직장민방위대와 고양 소방서 참여 하에 실시하였다.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실제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공동주택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지하 대피소에서 심폐 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피부에 와 닿는 현장체험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도상훈련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상 재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안전의식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각종 재난사고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을 실천을 통해 느끼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훈련



공동주택 화재 대피훈련



풍수해 대비 주민훈련



화생방 대비 훈련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고양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주변 가족 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육청 및 경찰과 협력하여 예방교육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운영 중에 있다.

유해식품 아웃!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광범위하게 시민안전은 단순히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의 개념을 넘어 시민이 누리며 생활하는 일상의 개념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시는 학교 주변의 유해식품 근절에서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을 비롯한 안전한 먹거리 대책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정책 등 시민의 식생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재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재난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시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제일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난 안전 행정의 신뢰성 회복

고양시는 시민의 안전을 전방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단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안전점검 대상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생활하는 시설물로 고양시 내 총 17,008개소를 선정하여 이중 2,120개소를 특정관리대상로 지정, 매년 4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붕괴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서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시설물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그 동안 공무원들 선에서 형식적으로 끝나던 안전점검에서 내실 있고 정확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자체점검시설물 14,888개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계자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1차 관리자로서 건물 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알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고양시 시설물 17,008개소를 전수 점검하는 사례는 금번이 처음으로, 매년 점검을 통하여 안전 위해요소가 일소될 전망이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지는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73조의9에서 정하는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시행·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접수 받아 심의하고 현장점검은 물론 축제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점검 및 현장대응에 임하고 있다.

올 들어 해맞이 행사, 대보름 행사 등 지역별로 치뤄지는 행사에 있어 안전심의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은 물론 시민안전에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화재, 해빙기 붕괴 등에 대하여 시기에 맞는 점검에 임하고 있다. 안전의 취약지구인 주거용 빌딩하우스 총 555개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홍보 개도를 추진하여 겨울철 빌딩하우스 내 화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급경사지, 축대, 관내 공사장 전체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다. 안전점검은 점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시정 및 보완대책 등을 통보 받아 사후까지 관리하는 지속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우리시 대응전략 또한 많은 변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양시에 서는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인식과 안전불감증 일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로드맵 49만장 7종을 제작하여 고양시 39만 세대에 배포하고, 포스터를 교육기관 151개소, 행정기관(산하기관) 80개소, 유관기관 40개소, 대중교통이용시설 29개소 등 총 300개소에 배포하여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안전에 대한 대처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풍수해 홍보, 대설 시 주의사항, 시민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 체크리스트 등의 홍보물 또한 별도 제작하여 시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① 포스터(496X636)
- ② 종합긴급재난 신고전화(210X130)
- ③ 5대 재난신고 전화번호(120X150)
- ④ 학교대상 재난신고 전화번호(120X150)
- ⑤ 가정용 전단(210X297)
- ⑥ 포스터(496X636)
- ⑦ 포스터(496X636)

01 ▶ 화재·가스 1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양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고 양 시 긴급 재난실보는 119	▶ 뜻깊은 자살예방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한다.
---	--	--

긴급 재난시 시민 대처 요령

화재(119) •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진압한다. • 원천 수거로 고차 입출 및 보존한 채로 대피한다. • 산소호흡기 개인, 감광안경(악외), 환기관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성폭력(1366) •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이미치는 다른 사람(의사) 내음통을 강요하고 울며 “정신과 의사”라고 외치거나 달아난다. • 성폭력 전문상담소의 의논한다. 지하철사고 • 안전문열쇠로 사고 내용을 알리고 승용으로 문열 닫히게 대피한다. • 열차 진행 방향의 전로를 따라 다음 역으로 대피한다. 지진 • 최대한 동물을 보호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피한다.	 가스사고(1544~4500) • 가스 냄새를 맡아 가스를 누출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 가스가 누출되면 전기선 스위치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실외로 환기시킨다. 학교폭력(117) •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 선생님, 전문상담원에 도움을 청한다. • 주위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에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승강기 • 정전, 고장 등으로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히 기다린다.  구조물 붕괴 • 건물, 옥상 등 구조물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 대피하고 119나 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한다.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고양시 재난안전관리본부 http://policy.goyang.go.kr		
---	---	---

• 안전신고 119 •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31-8075-2119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02

100만 원 보상
8000 원 긴급구조

고양시

꽃피는 마을에서
사랑받고, 건강

긴급 재난시 전화번호

고양시

 화재·구급· 응급환자 신고 119	 범죄 신고 112	 성폭력 신고 1366	 학교폭력 신고 117	 전기안전상담 1588-7500	 가스사고 신고 1544-4500	 전기고장 신고 123	 환경오염 신고 128
 사이버범죄 118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교통정보안내 1333	 인간관계상담 1331	 알기제로 131	 관공정보안내 1330	 미야카기센터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82	 110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http://safety.goyang.go.kr>





내 주변 대피소 위치확인

119, 112, 1366, 117, 1588, 1544, 123, 128, 118, 1399, 1333, 1331, 131, 1330, 182, 110



• 안전신고 119 •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31-8075-2119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05

고양시

전통 자선포는 119

강원도
자치단체장 협의회

긴급 재난시 시민 대처 요령

화재(119)

- 1. 화재 신고와 소화기 사용
- 2. 비상구 숙고로 2층 화재 피난
- 3.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가스사고(544-6500)

- 1. 가스 냄새나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대피한다.
- 2. 가스 누출을 발견하면 전기·가스 스위치를 차단한다.
- 3. 가스 누출을 발견하면 이웃에게 알린다.

심혈관계(1365)

- 1.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쓴다.
- 2. 비만이나 고혈압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한다.
- 3.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을 인지한다.

학교폭력(117)

- 1.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2와 학교, 경찰, 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한다.
- 2.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2에 신고한다.
- 3. 학교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지하철사고

- 1. 지하철 사고 발생 시 내 몸을 안전하게 숙고로 몸을 대피시킨다.
- 2.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승강기

- 1. 승강기, 계단 등에서는 승강기에서 내릴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 2. 승강기에서 갑자기 멈추면 즉시 신고한다.

지진

- 1. 지진 발생 시 몸을 보호하고 침착하게 대피한다.
- 2.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구급차 통과

- 1. 횡단, 횡단 우회차로 통과 금지
- 2. 횡단 우회차로 통과 금지
- 3. 횡단 우회차로 통과 금지

QR코드

- 1. QR코드 스캔
- 2. QR코드 스캔
- 3. QR코드 스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확인하세요.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www.goyang.go.kr

고양시 재난안전센터
www.goyang.go.kr

• 안전선진 0119 •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31-8075-2119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illegible]

07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

고 양 시

인간 화석산고는 119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

우리집 안전점검 리스트

문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가정	소화기를 '가정 화재 안전' 지침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지? 화재 안전 요령을 가족들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 불이 났을 때 소나기나 물을 뿌리는 건가요? 1인 1주택에 화재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화재 예방을 하고 있는지?	
	주거지역에 '불이 났을 때' 할 일을 미리 배워두었는지 확인하는지? 가정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소화관 2호를 화재 안전 요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가정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불이 났을 때 화재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불이 났을 때 화재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가정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가정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학교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역 화재 안전 요령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생활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 안전신문고: www.safepople.co.kr
-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신고 119** ■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31-8075-2119

고양시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고양시 emergency
management center
goyang@emergency.goyang.go.kr

올해부터 기존에 재난관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홍보차량으로 개조하여 시민 대상 안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동 차량의 270cm 규모의 LED 전광판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11종의 동영상의 연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여 역광장, 행사장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상영하며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덕양구청 입구(제397차 민방공대피훈련)



어울림누리 앞(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발대식)



고양 행주산성누리길(고양 힐링누리길 가족사향 걷기 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천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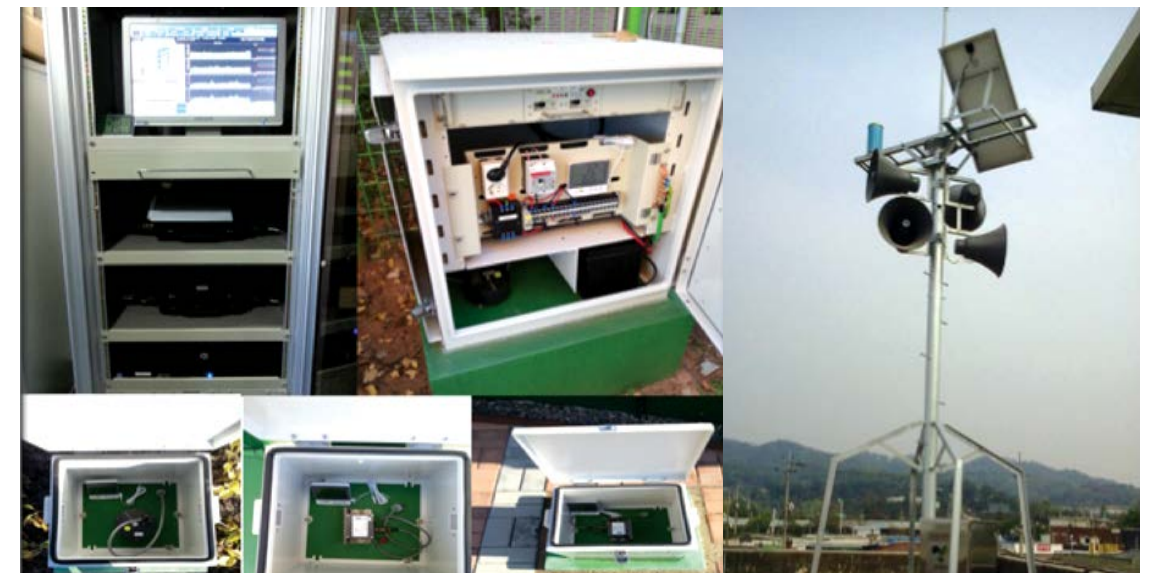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기별 안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펼치면서 지나치기 쉬운 안전의식을 일깨워 시민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캠페인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역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의용소방대회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벤트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이라는 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봄철에는 황사, 산불 등 시기별로 안전취약 분야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자연재난 관련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투자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 바람, 지진 등과 관련된 기상재난이 빈번하며,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현상,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연재난을 위한 준비는 많은 시간과 예산,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기에 지난 2014년부터 지진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 등으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또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동안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139백만원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 예상지역에 경보방송시설 확충을 위해 10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재난대비에 힘쓰고 있다.

또, 재난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 120백만원을 들여 효자동, 관산동에 노후화된 강우량기를 교체하여 재난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창릉천, 공릉천 등 침수우려지역에는 2015년 음성경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및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선제적 예방사업 실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 및 지역을 미리 지정관리하여 자연재난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하천은 종래의 치수 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하여 하천환경기능과 하천 스스로 본래 갖고 있던 자연특성을 최대한 유지 복원하는 자연친화적 방향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다목적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제적예방사업			
대화 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740-1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8,600백만원(도비8,580, 시비20,020) • 사업량 : 배수펌프장 1식(5,000㎥/min ⇒ 8,340㎥/min) • 사업기간 : 2012. 3. ~ 2015. 11.			
신평 제 2 배수펌프장 증설			
• 사업명 : 신평 제 2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4년) • 총사업비 : 431억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사업내용			
구 분	기존 신평배수펌프장	증설 신평제2펌프장	비 고
펌 프 용 량	총 17대 (입축펌프 870HP×441㎥/분)	총 5대 (고압펌프 1,400HP×660㎥/분)	—
토 출 량	7,500㎥/min	3,300㎥/min	—
계 획 빈 도	10년	30년	—
설 치 년 도	1995년	—	—
시 행 청	경기도	고양시	—
능골천 정비공사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73번지 일원(원신동사무소 앞) • 사업량 : 소하천 개수 L=1,215m B=5 ~ 14m • 사업기간 : 2005. 2. ~ 2015. 12. • 총사업비 : 6,200백만원(실시설계비 120, 보상비 2,802, 시설비 3,278)			
박재궁천 정비공사			
• 위 치 : 덕양구 주교동 산42-1 ~주교동 807 • 사업량 : L=2,658m, B=4~16m(하천개수 2,658m, 교량5개소, 배수암거7개소, 배수통관6개소등) • 사업기간 : 2006. 1. ~ 2017. 12.(현재 보상실시) • 총사업비 : 13,460백만원(실시설계비 180, 보상비 8,800, 시설비 4,480)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고양종합터미널 사고 현장과 같은 재난 현장의 아비규환에서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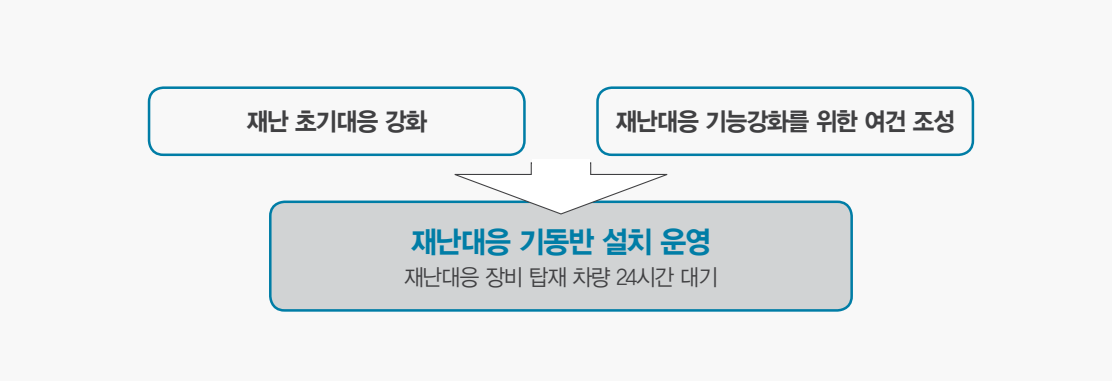
재난대응기동반 운영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와 유사한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처로 ‘골든타임’ 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대응기동반을 운영한다. 재난대응기동반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재난 상황을 파악 및 보고하고 필요한 유관기관에 전파하며 언론 대응을 맡는다. 모든 상황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등을 통해 재난상황실과 연계하도록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난현장 영상을 재난상황실로 송출하여 재난 대응 및 수습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이울러 평상시 재난대응기동반은 편성 직원에 대해 재난대응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긴급 상황 출동·대응에 대비한 반복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기동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 초기 재난정보의 신속한 파악으로 재난 상황실과 연계하여 현장 지휘 및 관련 부서에 상황별 응급복구를 지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소방조직(긴급구조통제단)과의 효율적 협력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휘체계의 일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재난대응기동반은 총 인원 20명을 2팀으로 편성하며 시민안전과장이 총괄지휘를 맡는다. 팀 편성의 경우, 안전도시팀장과 팀원 및 구청 안전건설과 재난민방위팀이 한팀으로 구성되고, 또 다른 팀은 복구지원팀장과 팀원 및 구청 안전건설과 재난민방위팀으로 구성되며 구청 재난민방위팀은 상황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소와 통합하여 운영이 된다.

재난대응기동반				
구분	계	편성인원		비고
		반장	반원	
1팀	10	안전도시팀장	시민안전과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6	사회적 재난
2팀	10	복구지원팀장	시민안전과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6	자연재난



재난대응 현장 매뉴얼 명료화

그 동안 작성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은 300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현장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공무원들 역시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현장대응 매뉴얼을 1~3 페이지 가량 도식화 하여 처음 보는 직원들도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어 재난 현장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우리 고양시청 외 소방서, 경찰서, 가스, 전기관련 기관 등 총 13개 협업기능까지 포함되어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응 매뉴얼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은 물론 각 기관 부서별 전담직원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에 임하고 있다.

고양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 분	초기대응부서		시 장	재난수습 주관국장 (통제관)	공보담 당반
	상황실	재난대응소관부서(담당관)			
재난 발생 단계 (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상황접수·전파·보고】 ●초기상황 파악 및 판단 ●소관부서, 유관기관 전파 ●언론매체 예보 경보 상황 전파	●소관부서 부서장등 정위치 ●초기상황 파악 ●응급대응 지시 ●재난대비 장비, 자재 실태 확인 ●필수요원 보강근무	●【초기상황 확인】 ●초기상황 확인(재난안전상황실장) ●【조치사항 지시】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 ●재난대응기동반을 통한 지휘 및 임시지휘체계 확립 ●2차 피해 확산 방지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초기상황 확인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대응부서 (실·국장에 긴급 조치 지시) ●행정지원	●상황보고 확인 ●홍보대책 위원회 가동
초기 대응	●추가피해상황 파악 ●대처상황, 부서 대응태세 파악 ●피해 및 대처상황 보고·전파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 파악·전파·보고 ●상황판단회의 회의 ●유관기관 ●관련부서등 대응상황 확인, 핫라인유지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긴급구조기 관 비상근무, 대응상황 확인, 협조 유지 ●응급구호, 이재민수용 준비 지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인력, 장비 지원	●【상황판단회의 주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검토 ●인접 취약시설·지역 사전점검 지시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재난상황 지원 필요 사항 판단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필요시)】	●협업기능반에 조치, 지원 필요사항 확인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실시 ●현장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재대본 운영	●추가피해상황 파악 ●대처상황, 부서 대응태세 파악 ●피해 및 대처상황 보고·전파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통제관 - (재난수습주관실·국장)】 ●【담당관 - (재난수습부서의 장)】 ●본부장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재난상황 파악, 전파, 보고, 현장관리 ●공무원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 가동 ●유관기관, 민간단체 지원체계 가동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확인 ●재난방송 실시 및 재난상황 홍보 강화 ●【총괄지원관 - (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	●【市 대책본부 지휘】 ●재난 대비·대응 및 수습·복구 총괄 조정, 본부회의소집 ●재난 예·경보의 발령 및 특별지시 ●재난 응급조치, 신속한 방송(보도)지시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동원명령 ●대규모 피해발생지역 동행제한 명령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	●시장 보좌, 市 재난 대책본부 운영 ●대국민 행동요령 등 인터뷰(필요시) ●행정지원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실시 ●현장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수습 복구	●추가피해상황 파악 ●대처상황, 부서 대응태세 파악 ●피해 및 대처상황 보고·전파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응급복구, 2차 피해우려지역 긴급조치 ●부족지원 파악 및 지원 요청 ●최종 피해현황 파악(이재민등)	●【피해수습 지원】 ●특교세, 재난기금 지원 건의 ●피해 응급복구 추진 지시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조치 지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필요시)】	●응급복구 수습상황 수시점검 ●이재민 구호대책 점검·지원 조치 ●부족지원 등 파악·지원 조치 ●피해 관련 보상 업무 조치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실시 ●현장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고양시 부서별 협업기능

기능	주관부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경기도	주요업무
재난 상황 관리	재난수습 주관부서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 • 상황 파악 · 전파 · 보고 • 회의, 대처계획 수립보고 • 상황관리 및 대응팀 파견 • 재난사태 선포(필요시) • 관계기관 근무자파견요청 • 상시모니터링, 상황근무 • 이재민, 피해가족 법률지원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복지정책과	세정과, 시민안전과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 등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발생 파악 · 관리 • 임시 주거시설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 구호 실시 •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 사망자 장례 등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정보통신과	KT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구조 · 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 민간기업(KT등) 협조
시설 응급 복구	재난수습 주관부서	하수행정, 농업정책, 주택과 도로정책, 수도시설과 KT, 한전, 서울도시가스	재난 수습 주관 부서	피해시설 응급복구 • 소관 공공 · 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장비 · 인력 · 자재 동원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에너지 기능 복구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KT, 한전, 서울도시가스	산업정책과	가스등 에너지 공급 기능회복 지원 • 가스 · 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 인력 · 장비 · 자재 지원
재난 자원 지원	시민안전과	회계과, 예산법무과, 9사단, 30사단	재난 대응과	재난자원 지원 총괄 · 조정 • 민간자원 동원 • 장비 · 인력 부족지역 파악 · 지원 • 군 인력 · 장비 지원 협력체계구축 • 재난현장 물품 수급지원 • 긴급구호물자 구입지원
교통 대책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소통대책 • 상황 파악 관리 • 우회 · 대체 교통 수단 마련 · 투입 • 교통증편,연장 운영

고양시 부서별 협업기능

기능	주관부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경기도	주요업무
의료 및 방역 서비스	보건행정과	3개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중보건 및 방역 지원 등 • 응급구호반 가동 • 방역활동반 가동 • 의료동 물자, 장비동원 • 재난심리지원 • 사상자 병원별 담당자 파견
재난 현장 환경 정비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쓰레기 ·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 오염물질 발생 현황 파악 • 차량 및 장비 동원 • 쓰레기 처리현황관리 • 임시적환경 운영
자원봉사 관리	주민자치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분류 · 배치 • 장비 · 물자 지원 • 투입현황 관리
사회 질서 유지	고양·일산경찰서	9사단, 30사단	경기지방경찰청	교통, 현장, 피해 통제 등 •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 질서유지 • 피해지역 방범활동 • 교통 및 현장통제
수색 구조 구급	고양·일산소방서	덕양,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재난안전본부	인명구조, 응급처치 사망 · 실종자 수색 등 • 가스 · 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 인력 · 장비 · 자재 지원
재난 수습 홍보	공보담당관	언론사	언론담당관	재난관련 언론 · 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SNS등 다채널 전파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 · 배포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시청 홈페이지와 SNS, 스마트 앱을 연계하여 재난 예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난위험요소 및 재난상황 사진 또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재난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기능을 구축하기로 한다. 또한 민간 재난 네트워크 단체 회원과 일반시민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여 생활주변의 재난발생요인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로 민간자율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 개요

- 기 간 : 2015. 3 ~ 2015. 5
- 사 업 비 : 200,000천원
- 구축장소 : 재난종합상황실 내
- 추진일정
 - 2015. 3월 초 :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일상감사)
 - 2015. 3월 말 : 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2015. 4월 : 시스템 설치
 - 2015. 5월 : 사이버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완료 보고(시스템 시연)

재난 정보 수집 · 분석 강화

재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를 통해 재난위험지역과 노후화된 관측 · 홍보 장비를 재정비하여 재난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는 새로 교체하여 정확한 기상자료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릉천, 창릉천변 등 재난발생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측장비를 신규로 설치하여 재난감시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재 하천변 침수우려지역 3개소에 음성경보 및 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하천 내 자전거도로, 하천횡단교량, 운동장 설치로 하천 레저 인구가 증가하였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다.

방법 안전망 확대로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축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과 여성들의 불안에 계속되고 있다. CCTV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촘촘한 그물망식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고양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내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 아울러 철저한 정보관리 체계로 도입하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역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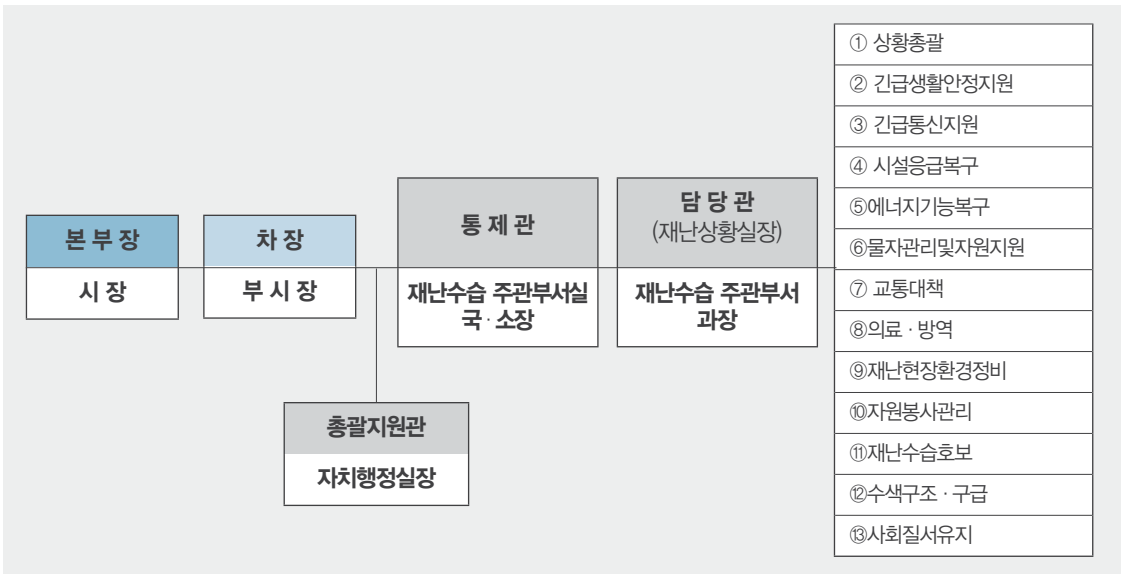
제도 개선 및 유기적 조직 변화

불분명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재난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양시 내부조직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능동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강화한다.

사회재난 초기 수습을 위한 고양시 조례 제·개정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고양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상세화 되고 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재난 초기 수습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급변하는 재난 환경과 이재민 구호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衣·食·住)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양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조례개정)



고양시 공무원 조직 개편

과거 재난재해 관리 대응은 태풍, 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위주의 대응이었다. 재난의 예방보다는 재난발생 후 수습위주의 피해보상과 피해복구 위주로 공무원 조직과 사무를 치수와 하수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 위주의 재해 예방에 치중하였다.

사회재난의 중요성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의 자연 재난 중심의 조직에서 2011년부터는 안전도시과로 조직을 확대하여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과 인적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환한 후, 재난극복에 주력하였다. “100만 시민이 안전한 제일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시정(市政) 방향을 “시민 안전 중심”으로 전환키 위하여 공무원 조직도 그 동안 기피부서로 전락되어 있던 재난관리 부서를 2015년 1월에 3급 체제인 시민안전 교통실내 제1부서인 시민안전과로 조직을 개편 하여 재난 및 안전에 대한 홍보, 예방, 교육은 물론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에 시설물 및 동선 안전점검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만일에 하나 발생할 대형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 대응 기동반”을 운영하여 재난의 신속한 수습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현장에서는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습에 매진하며, 보다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수습하기 위한 현장 지휘소를 운영 중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안전과에 대한 고양시의 예산편성액도 148.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도인 2014년도 7,261,987천원에서 10,800,742천원으로 3,628,755천원이 증가되어 재난 일소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안전에 대한 예산편성도 증액 편성되었다. 공무원 내부 조직의 개편과 예산의 증액은 단순히 부서의 통폐합, 또는 일회성의 변화를 넘어 고양시에서 재난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고양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고양시 조직 개편 현황

년도	명칭	전략	정부조직
1996년 1월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안보 대응전략 ● 개별부서 중심 자연재난 대응	내무부
1998년 2월	—	—	행정자치부
1998년 10월	하수재난관리과	● 자연재난 중심 자연재난 대응 ● 치수관련 부서 별도 운영	—
2004년 6월	—	—	소방방재청
2005년 4월	재난안전관리과	● 민방위와 자연재난 위주 대응 ● 치수관련 부서 별도 운영	—
2010년 7월	—	● 재난상황실 통합 시스템 구축 ● 자연재난 대응전략체계 구축	—
2011년 3월	안전도시과	● 자연·인적재난 대응전략 체계 구축 ● 도심 재난 대응전략 체계 구축	—
2013년 11월	안전총괄과	● 사회·자연재난 대응전략 체계 가동 ● 안전관리 부서 통폐합	—
2014년 11월	—	—	국민안전처
2015년 1월	시민안전과	● 사회·자연재난·안보 대응전략 체계 가동 ● 예방·홍보·교육·안전점검 시스템 가동 ● 사이버상황실·재난기동반 시스템 가동	—

화재사고 이후 재난재해 대응 사례

구산동 용오름 피해 농가 복구 지원반 운영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2014년 6월 10일 구산동 1379번지 일원에 국내 관측사상 8번째 용오름(회오리 바람)이 발생되어 주변 화해농가 10개소(32,340㎡)의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자연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고양시는 즉각 현장을 출동해 화해농가를 격려하고 지난 화재사고를 교훈 삼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복구지원반(5개반)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구 지원반은 피해 시설 철거 및 농지 쓰레기 정리, 현장보건소 운영, 장비지원과 더불어 식사지원을 하는 등 실의에 빠진 피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 농가들도 시의 지원에 힘입어 시설을 복구하고 묘목을 식재하며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2015년 2월에는 사고 이후 첫 장미를 출하하는 등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신속한 복구인력 투입 등 빠른 초기대응은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이는 피해 복구 시 골든 타임의 중요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 9월 19일 피해 농가 주민들은 시의 헌신적인 피해복구 노력에 대해 고양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거듭 감사를 표현했다. 이는 시가 시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대책과 수습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복구 지원반 운영 개요

- **운 영 기 간** : 2014. 06. 12 ~ 2014. 07. 18 (37일간)
- **총 지원인력** : 2,683명(공무원 / 260명, 군인 / 2,221명, 자원봉사등 202명)
- **지 원 내 용**
 - 피해시설 철거 및 농지 쓰레기 제거(청소지원)
 - 식사 및 간식지원
 - 각종 장비 지원



피해사진



복구지원사진

일산 오피스텔 화재 지원

다중이용시설이나 주거시설의 화재는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다. 2014년 11월 30일, 관내 오피스텔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했다. 시는 화재사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일산소방서와 상황을 유지하며 주변 교통정리 등 화재진압을 지원하며 인명대피를 도왔다.

다행히 화재는 빠르게 진화되고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화과정에서 일시대피자(80여명)가 발생되었으며 당일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

현행 규정상 화재 등 발생 시 행정청의 초기 구호 대책은 없는 반면, 시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衣·食·住)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재난 상황 시 부서별 협업과 대응 프로세스에 의거, 복지 1촌 나눔단체와 연결하여 임시 숙소비를 해결하였다. 재난의 극복은 행정청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안전도시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도 이재민 초기 구호가 가능한 지원조례의 제정이 시급함을 한번 더 깨달으며 시에서는 조례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계적인 재난 안전 매뉴얼 도입으로
대형산불 ‘봉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피해는 막고 문화재(최영장군묘)는 사수하라.”

지난해 고양종합터미널 대형 화재사고 후 체계적인 재난안전 매뉴얼을 도입한 고양시가 유관기관과 긴밀한 입체적 대응으로 귀중한 문화재와 시민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5.03.24 경인일보 기사내용 중)

2015년 3월 22일 낮 12시40분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최영장군묘(경기도 기념물 제23호)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 대해 한 신문사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는 우리시가 화재사고 이후 재난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에 대한 평가였다.

산불신고를 받은 즉시 재난상황실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인근 주민의 대피명령과 함께 전 공무원에게 비상발령(SNS)을 보내고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소방서와 산림항공대 등 여러 경로의 지휘본부로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하여, 지원에 나선 민·관·군이 체계적인 산불진화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했다.



산불진화 사진

초속 5미터의 강풍을 타고 3시간에 걸쳐 임야 5ha를 태운 큰 산불이었지만 발빠른 초동대응과 재난안전 매뉴얼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체계, 공무원 동원 등 컨트롤 타워의 적절한 위기대처 상황 판단이 대형 인명피해와 소중한 문화재 소실을 막아낸 것이다. 또한, 산불진화 후에도 잔불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밤샘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자동 산불 개요

- 발 생 일 자 : 2015. 3. 22 (12:39) / 15:40 주불진화
- 발 생 장 소 : 덕양구 대자동 868-3(성령대군묘 인근 야산)
- 산 불 면 적 : 약 20,000㎡
- 투 입 인 원 : 1,609명 (공무원 1,050명 진화대원 89명, 소방서, 경찰 270명, 군인 200명)
- 진 화 장 비 : 산림청소방헬기 8대, 소방차 15대, 진화차 4대, 등짐펌프 등 2,000여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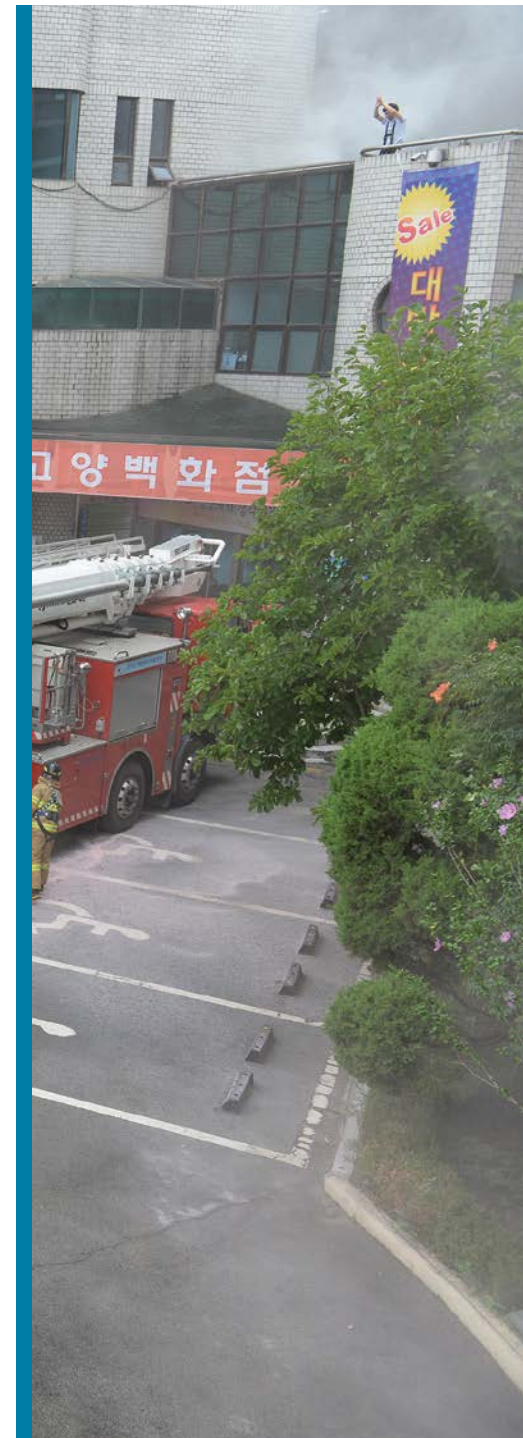
소방서 재난재해 대응 변화 : 일산소방서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 고양시의 재난재해 대응 변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복지 정착
| 재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재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제도 개선 및 유기적 조직 변화
화재사고 이후 재난재해 대응 사례
- 소방서 재난 대응 변화(일산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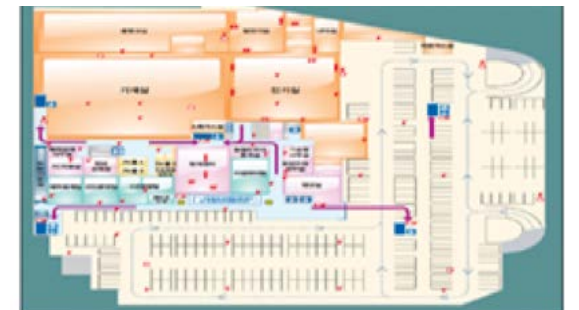
고양시 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3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진압작전도를 제작했다. 이 진압작전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도상훈련, 가상화재훈련, 광역출동훈련, 실물화재훈련, 기능숙달도상훈련 등에 활용된다.



선제적 화재대응을 위한 진압작전도

- 기 간 : 2014. 12. 12. ~ 12. 16.
- 대 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34개소
- 내 용 : 대상별 일반현황 및 화재진압 작전도 (수시 업데이트 예정)
- 활용계획 : 도상훈련, 가상화재훈련, 광역출동훈련, 실물화재훈련, 기능숙달도상훈련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제작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 **일 자** : 2014. 9. 11
- **장 소** : 대회의실
- **대 상** : 고양시청 등 14개 긴급구조지원기관
- **내 용**
 - － 고양시장 안전공약 내용을 토대로 각 지원기관별 안전시책 추진사항
 - － 대형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별 대처방안 및 역할
 - － 각 지원기관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소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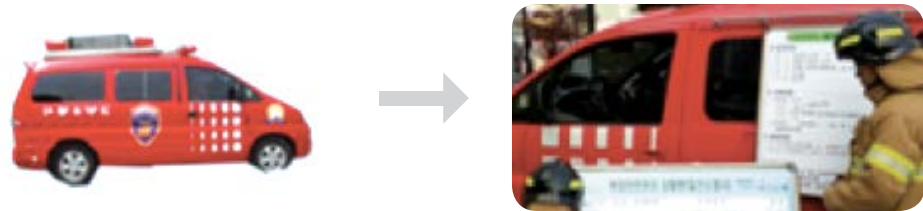
재난현장 약식 통제단 가동 상설화

대형 재난이 아닌 소규모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약식 통제단 가동을 상설화 하였다. 이는 소규모 재난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되는 순간, 대응에 있어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계별로 가동 인원을 조정한다. 약식 통제의 경우 지휘차의 상황판 및 화재조사차의 텐트를 활용하여 통제 및 관리하도록 한다.

소규모 재난(사고) 시 약식 통제단 가동

- 대 상 : 아파트 및 재래시장 등 다수이목 집중 재난사고 현장, 소규모 재난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 시 초기대응 공백 방지
※ 국민안전처 비상단계 준용 : 일상단계~2단계(비상대응 전 단계)
- 가동인원 : 1단계 초기출동대, 2단계 현장대응단, 3단계 통제단
- 내 용 : 지휘차 및 화재조사차에 적재된 텐트 및 상황판 활용

지휘차
재난종합상황판 적재 - 약식통제단 현황관리



화재조사차
현장지휘소텐트 적재 - 약식통제단 가동



재난현장 통제단 상황판단회의



05

고양종합터미널
Goyang Bus Terminal



향후
안전관리 대책

아픈 시련이 남긴 앞으로의 과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라는 뼈 아픈 경험 후

사고의 수습을 넘어 선제적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의 강화 및 시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종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골든타임의 사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3분의 골든타임. 수습을 위한

장비 동원까지의 30분의 골든타임.

3-30의 골든 타임을 사수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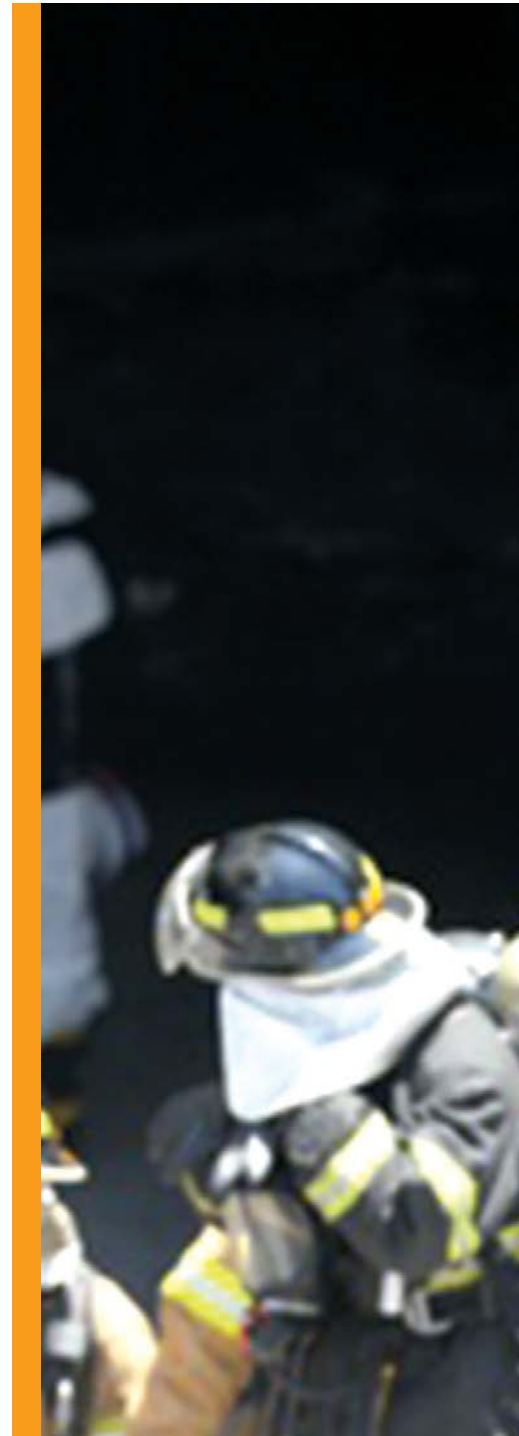
우리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픈 시련이 남긴 앞으로의 과제

-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골든타임 사수
- 지방자치단체 중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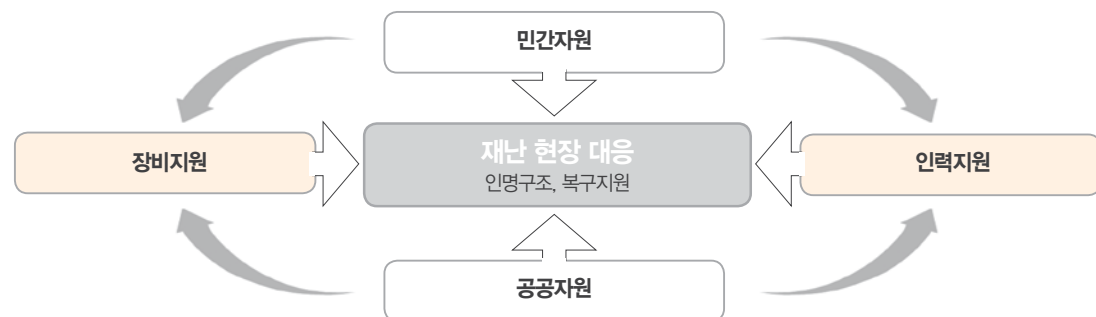


빈라덴 사살작전을 지켜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골든타임 사수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사수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마와 유독가스로 인하여 재난에 노출된 시민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재난현장에 소방관이 도착하는 시간도 신고 후 2~5분 이내로, 대형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대응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장비 동원도 최소한 30분 이내에 도착하여야만 재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소방서 장비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명구조나 재난 확산 방지 등의 인력과 장비지원 등은 그 동안 정부가 독점 하다시피 하는 순수 공공재 공급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구조 작업에 민간 잠수사들의 활약이 주목할 만하였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현장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한 사실 또한 대단한 활약이었다.



재난 현장에서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화재 시 대피 체험교육, 연기 피난교육, 완강기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평상시 훈련을 거듭한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체험교육장은 고양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 외에는 전무한 상태이다. 대형 백화점, 마트, 회사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운영한다면 대형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대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또, 화재발생 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의원의 대응 유도를 통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공사장 등에 운영 되는 안전관리 요원 등도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재난현장의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정부 조직의 인력과 장비보다 민간에 있는 장비, 민간에 있는 우수한 인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에 대응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3분 이내 골든타임과 피해확산을 막는 30분 이내의 골든 타임을 충분히 사수할 수 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일부 민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현장에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치밀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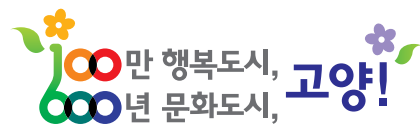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중심, 현장중심의 재난 대응

재난관리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난 관리체계는 아직 재난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다

인력·예산·장비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지휘권한도 대형사고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된다.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방의 현장과 문화를 가장 잘 알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부서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임을 간과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부서의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조직과 예산도 확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 민간자원과도 연계 운영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법 제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를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휘권의 문제 또한 현장 중심의 지휘권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장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점검한 일선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재난 시 위기대응을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계급사회로 구성된 관 조직으로 현장지휘를 광역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휘한다. 9·11 테러 사고 당시에도 뉴욕시장이 아니라 뉴욕의 소방서장의 최고 상관인 현장을 지휘하였고 시장은 소방서장 밑에서 행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전격 지원하였다고 한다. 재난 수습 당시 책임자가 중앙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빠른 시간 내 수습이 어려울 것이고 수습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재난 발생 지역의 전격적인 지원 체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과 제도, 그리고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사례로 보는
안전의식과 안전정책

고양터미널화재와 세월호의 교훈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안긴채

아직도 끝맺음 되지 못한 세월호 사고

그리고 일년만에 다시 반복된 인재 고양터미널화재사고

그 유사성을 들여다 보며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문제점을 반추해 본다.

세월호와 고양터미널 화재,
그 닳은꼴과 다른 점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전 경기도 의원 이 상 성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겪는 재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자연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이다. 2004년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동남아 쓰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였다. 물론 자연재해도 재해의 예방이나 사후 구조 및 처리 과정에서 인간의 실수나 태만 등이 개입되면 인재로 변하기도 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해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재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수 없이 일어나는 인재들 중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인간의 실수와 태만이 개입되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어도 작은 피해에 그쳐야 할 사고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온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너무나 닳았으면서도 또 너무나 다른 사건이다. 사고의 발생이 인재라는 점에서는 꼭 닳은꼴이지만 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었다. 이제 이들의 닳은꼴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II. 세월호와 고양터미널 화재-그 닳은 점

세월호 사건과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은 닳은 점들이 상당히 많다. 세월호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고양터미널 화재에서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서로 닳은꼴이다. 이제 그 닳은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1. 안전불감증 :

두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거론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우리 주변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현관문만 나서면 곳곳에서 목격된다. 아이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어른부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 자신의 자녀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방치하는 부모 등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서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사건을 품에 안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안전불감증이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고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으려면 29번의 중형사고와 300번의 경미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법칙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안전불감증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300번 정도의 사소한 행위가 29번의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중 한 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300번의 신호 위반은 대부분 (270번)은 사고 없이 지나가지만 29번은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사고를 일으키고 한 번은 대형 충돌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세월호도 고양터미널도 평소에 꾸준히 무시한 사소한 안전 규정들을 어기는 데서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2. 안전수칙의 무시 :

안전불감증이라는 심각한 증후군이 가져오는 가장 흔한 증세가 안전수칙의 무시이다.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부역의 가스 안전밸브를 잠그지 않는 것도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에서 오는 행위이다. 먼저 세월호의 안전수칙 무시 사례들을 보자. 가장 심각한 것이 과적이었다. 화물적재한도가 1,077톤인 배에 거의 곱절인 2,142톤을 실었다. 배의 구조 변경으로 인해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도 무게를 줄이기는커녕 과적을 한 것이다. 과적이 되니 배의 흡수선이 수면 밑으로 내려가 출항이 불가해지니까 배의 평형수를 줄였다. 원칙대로는 1,694.8톤을 채워야 배의 균형이 맞는데 933.6톤을 줄여서 761.2톤만 채웠다. 그러지 않아도 구조변경으로 배의 무게중심이 51cm나 위로 올라갔는데 과적과 평형수 감소로 무게중심은 더욱 위로 올라갔음이 자명하다. 배에 실은 컨테이너는 화물실 바닥에서 솟아오른 쇠로 된 돌기에 컨테이너 귀통이와 중간에 있는 구멍을 맞춰서 결합시켜 고정시켜야 하는데(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에 보면 이들 쇠로 된 돌기가 있다. 이 돌기들 때문에 차량이 움직여도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밧줄로 얼기설기 묶어놓기만 했다.

결정적으로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하면 더 늦기 전에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배는 달렸고, 멈췄고,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침몰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은 안중에 없었다. 고양터미널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소방과 가스관 부설은 상극인데 이 두 가지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대보수 공사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CJ푸드빌의 개장 일정을 맞추느라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소방공사를 먼저 하고, 철저한 소방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화재에 취약한 가스관 부설공사를 해야만 했다. 한 손에는 화약을 들고 다른 손에는 핫불을 들고 있는 격이었다. 아차 하는 순간 핫불에서 화약으로 불뚝이 튀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었다. 게다가 가스 밸브도 중간밸브만 잠그고 메인밸브는 잠그지 않는 우를 범했다. 밸브 두 개를 잠그면 화재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밸브가 화재 위험을 만 분의 일로 줄인다면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밸브는 이만분의 일로 확률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 곱하기 만, 즉 일억 분의 일로 그 위험성을 줄여준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잠그도록 권장한다. 밸브를 잠금으로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도 하게 되지만 만약의 가스 누출 사고 가능성이 가스레인지의 화력조절 밸브만 잠겼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낮아진다. 그런데 고양터미널 공사 시에 중간밸브만 차단했고 메인은 열어두었으며 그 결과 작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로 중간밸브를 밟아 가스관을 개방했고 화재로 이어졌다. 결정적 실수였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공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사소한 실수에 경보가 울릴까봐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전환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그리하여 화재가 발생한 후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대피방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1층의 스프링클러 물을 퇴수시키고 1층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 시 방화벽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도 막아놓았다. 이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화재가 일어나게 만들고,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세월 호 사건과 다르지 않은, 안전수칙의 무시였다.

3. 탐욕 :

두 사건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탐욕이었다. 세월호에 배를 불안정하게 만든 원인인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전시실을 만들고 객실을 증축하는 구조변경을 한 것도, 과적을 한 것도 배의 소유주와 회사 운영진의 탐욕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그토록 큰 사고가 나게 만들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안전수칙의 무시도 궁극적으로는 탐욕에서 비롯된다.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공기를 단축하려는 공사 발주사의 탐욕, 공사 시행사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탐욕,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하려는 작업자들의 탐욕이 부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적절한 수준의 탐욕은 인간에게 동기유발을 불러오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파멸을 초래한다. 세월 호와 고양터미널 화재는 이런 점에서 지나친 탐욕이 불러 온 명백하고도 거대한 인재인 셈이다.

4.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세월호가 사고를 당하자 정부는 신속한 구조를 약속하며 사고대책본부를 차렸다. 그런데 사고대책본부가 통일되지 않고 관련 부서가 전부 따로 살림을 차렸다. 해경은 해경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사고대책본부를 차리고 모두가 각자 따로 놀았다. 이들을 총괄해 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며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는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무려 7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국가적 재난에 컨트롤 타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고양터미널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를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 시장의 부재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고양시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선거법이 선거를 앞두고는 출마한 지자체장의 업무를 정지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성 고양시장은 눈앞에 상황을 바라보고서도 아무런 지휘를 할 수 없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하여간 전후사정은 어찌되었건 세월호 사건도 고양터미널 사건도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사고를 해결하고 수습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하나는 자의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말이다.

III. 세월 호와 고양터미널 화재, 그 갈림길

세월호 사고와 고양터미널 사고의 닮은 점은 여기까지였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의 피해가 규모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난 것까지는 둘이 같았지만 그 후 사고를 해결하고 수습해가는 과정은 전혀 다른 과정을 걸어갔다. 이제 그 차이점을 살펴 보겠다.

1. 운명을 가른 초기 대응의 차이 :

세월 호의 탑승객은 전부 476명이었고 그 중 172명만 구조되고 295명 사망에 9명이 현재까지도 실종상태이다. 반면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시에는 정확한 인원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세월호 승객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었다(6~700명 정도로 추산). 심지어 영화 관람객까지 50여 명이 있었다. 그리고 선박 침몰은 의도적인 폭침이 아닌 다음에는 사고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완전 침몰에 이르기까지 화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세월호는 처음 이상이 발견된 것은 당일 8:10경 제주해경이 단원고에 배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그리고 사고가 처음 신고된 것은 단원고 학생이 전남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은 8:52이었다. 그로부터 45분 후인 9:37에도 선장은 배에서 해경과 통신을 하고 있었다.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침몰한 것은 14:37이었다. 최초 신고 후 무려 5시간 53분이 경과한 후였다. 반면 고양터미널 화재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후 터미널 2층까지 연기가 퍼지며 옮겨 붙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불은 그야말로 전광석화로 옮겨간다. 그런데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고양터미널의 희생자 숫자가 세월호에 비할 바가 안 되게 적었다. 그것은 바로 초기 대응의 차이에서 온 결과였다. 세월호는 관제 책임이 있는 진도 관제센터와는 애초에 연락이 되지도 않았고, 배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선원에 의해서 사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승객에 의해서 접수되었으며, 그나마도 신고 접수 후 경비정이 도착하기까지 40여 분이 걸렸다.

반면 고양터미널 화재는 9:02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27분 뒤인 9:29에 화재 진압이 완료되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최초의 소방차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소방서와 터미널은 가까운 거리이고 세월호와 해경 사이는 거리가 훨씬 멀었으며, 소방차는 속도가 빠르고 배는 느리다는 차이점이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경의 즉각 대응도 지나쳤다. 아마도 설마 6,825톤이나 되는 대형 여객선이 그렇게 쉽게 넘어져 침몰하지는 않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이 화를 키운 건 아니었을까? 해상구조를 책임지는 해경특공대는 9:30부터 목포항에서 대기했지만 10:11에야 이동을 시작했다. 무려 41분을 대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선체진입을 시도한 것은 여객선이 전복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11:24이었다. 이처럼 현격한 초기대응의 차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사를 갈라놓았다. 소방차는 신고 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특공대는 집합 후 40분이 지나서야 출동에 나섰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

2. 안이한 대응과 인명 중심의 대응 차이 :

세월호는 즉각 대응에 그 대응조차 참으로 안이했다. 대통령은 전원 구조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7시간 동안 연락 두절 상태였으며, 선장은 배가 기울어져가는 데도 승객들을 대피시킬 생각보다는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다. 선박사고에서는 선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전권을 쥐고 사고에 대응해야만 한다. 그런데 선장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해경의 지시만 기다렸다. 반면 고양터미널에서는 인명 중심의 구조작업이 사고 즉시 개시되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든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아울러 인명구조에도 적극적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자신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을 다한 소방대원들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 덕분에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원들부터 먼저 구하고 승객들은 물에 뛰어들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일만 했을 뿐 선체 진입은 시도도 하지 않았다. 정작 열심히 구조작업을 한 분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위험을 무릅쓴 어민들이었다. 세월 호는 오전 11시 현재에도 선체가 60도로 기울어진 채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그때만이라도 해경과 해군 특공대가 선체에 진입하여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훨씬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러나... :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컨트롤 타워로서 난립한 대책본부들을 통합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오전 10시에 전원 구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오후 5시까지 세월호 구출작전에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그 내막은 알 길이 없지만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이미 많이 늦은데다가 그 역시 여러 대책본부들을 통합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대책본부들이 따로 놀거나 겹들었다.

반면 고양터미널 화재에서는 선출직인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최봉순 부시장의 역할이 이때 진면목을 드러냈다. 시장의 법적 부재로 생긴 공백을 부시장이 매우 잘 메웠다. 평소에 시장과 부시장 사이에 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와 공조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때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업무 파악과 시 행정체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없었다면 부시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왕좌왕하면서 시행착오를 남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능숙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 이는 시장과 부시장의 팀워크가 탁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4. 사고원인의 규명 :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의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원인이 규명되어야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는 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사고가 났는지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다. 과적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험 없는 3등 항해사의 급변침 지시로 조타수가 무리하게 급변침을 했고 그로 인해 배가 기울면서 침몰했다는 정도로 발표는 했지만 아직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3등 항해사는 왜 급변침을 지시로 조타수가 무리하게 급변침을 했고 그로 인해 배가 기울면서 침몰했다는 정도로 발표는 했지만 아직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3등 항해사는 왜 급변침을 지시했는지, 7천 톤에 가까운 큰 배가 넘어갈 정도로 급격한 선회가 가능한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한다. 세월호와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는 인도로 팔려가서 동일한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볼 기회도 상실했다. 왜 P자 형태의 행적을 보였는지, 왜 급변침을 해서 목적지인 제주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해했는지, 왜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고양터미널 화재는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공사 발주자가 대수선공사 허가가 나기도 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 시행하면서 소방공사와 가스 배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방재시설이 작동할 수 없었다. 공사 중이었으니까... 가스 밸브도 중간밸브만 차단함으로써 소방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밸브를 발로 밟아 가스관을 열었고 이로 인해 새어나온 가스가 용접 불꽃에 인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자 그 대책이 마련되었다. 보다 철저한 소방장비 및 시설의 점검 계획이 세워졌고 고양시의 행정체제도 방재를 위해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아직도 지지부진한 중앙정부의 세월호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다.

5. 사후 처리에서의 현저한 차이 :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후 처리가 거의 된 것이 없어서이다.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안 되다보니 아직도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이 사망한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죽었는데 정확하게 누구 책임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 정부는 선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고는 선원들이 일으키고 먼저 도망친 것은 맞지만 사고 후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까지 수 시간 동안 한 명도 추가로 구조를 못하고 모두가 다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도록 방치에 가까운 뒤처리를 한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우리 정부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족들은 한이 맺혀 아직도 절규하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양터미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고양시가 중재를 서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고양시가 그렇게 할 책임도 권리도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역할을 자임했다. 그리하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까지 완료했다. 치료비부터 장례비와 보상금, 심지어 추모비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희생자 가족들의 한이 풀어지도록 노력을 했다. 외국인 희생자의 경우 그의 약혼녀가 입국비자를 받는 것까지 고양시는 챙겼다. 보상금에 초점을 맞춰 유가족의 한이 더욱 쌓이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세월 호 사후처리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대목이다.

6. 책임자 처벌 :

세월호는 지금 선원들과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일뿐 그 밖의 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간신히 통과되어 조사의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고양터미널은 고양시와 일산경찰서, 그리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완료되었다. 심지어 그 동안은 유사사건 발생 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었던 시설관리회사와 임대대행회사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책임자 처벌은 고양시의 확고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V. 맺는 말

큰 틀에서 볼 때 세월호 사고와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상과 규모만 다를 뿐 쌍둥이 사건이다. 그러나 그 원인만 제외하면 많은 측면에서 현저히 다른 사건이기도 하다. 여기서 결론을 대신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글을 맺도록 하겠다. 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를 이점으로 살려 안전과 관련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고양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것을 제안한다.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누구든지 앱을 작동시켜 어떤 종류의 상황인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하급 상황으로 연결되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 주는 앱을 개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앱의 이름을 '안전한 고양이'로 가정할 때 안전한 고양이 앱 아이콘을 누르면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지진, 수해, 일반사고 등의 선택지가 나오고 화재를 택하면 실내, 실외 선택지가, 실내를 선택하면 인화성 물질, 비인화성 물질의 선택지가 나오며 다시 각각의 선택지를 누르면 진화요령과 탈출요령을 알려주고, 여기까지 가면 현재 위치의 GPS정보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해당 응급구조기관으로 전송되고 음성통화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앱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이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동의할 때까지 시뮬레이션과 베타 테스트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면 안전한 고양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상으로 세월호와 고양터미널 화재, 그 닳은꼴과 차이점을 짚어 보았다. 이 글이 두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더 안전한 사회, 특히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세월호 참사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비교표		
구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4.16 세월호 참사
사 고 발 생	• 사고발생 : 2014.05.26 08:50~09:00 • 최초신고 : 2014.05.26 09:02분경	• 사고발생 : 2014.04.16 08:48~14:37 • 최초신고 : 2014.04.16 08:52경
초 동 대 처	• 초동출동 (일산소방서) : 2014.05.26 09:04분 - 긴급통제단 가동 - 고양시 현장 지휘소 설치 운영 • 화재진압 : 2014.05.26 09:29	• 초동출동 (서해지방해경 B-511호) : 2014.04.16 9:30경 - 해양사고 “심각”경보 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운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산시, 진도군) • 사고수습 : 미완 (아직도 9명의 실종자, 선체 인양 추진 중)
사 고 조 사	• 국과수, 검찰 합동 감식 실시 • 정밀점검·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원인자 기소 (7명 구속기소/18명 불구속기소)	• 국과수 또는 검찰 감식 불가 (선체 미인양으로) • 원인자 기소 (154명 구속기소/19명 불구속기소)
피 해 보 상	• 사고발생 45일만에 피해 보상 완료	• 정부 피해 보·배상 근거 마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 모 사 업	• 합동분향소 운영 (동국대병원) • 예산편성후 추모비 건립 (2015.1.30)	• 합동분향소 운영 (안산시 등 대도시 운영) • 추모사업 근거 마련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조언

끝없이 반복되는 대형 사고와 불안한 민심...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을 거울 삼아

인적 재난 없는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9인이 입을 열었다.

01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 하 성

세월호 참사 한 달여만에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고양종합터미널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급격한 산업화로 경제를 일궈 나갈 때 산업화의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안전은 소홀한 면이 있었다. 안전을 뒷전으로 한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이런 '정(情)' 문화,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아닌 이 정도도 위험하다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유사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은 고쳐 나갔으면 한다.

첫째, 소방관련법령을 면밀하게 다듬자.

고양종합터미널 같은 건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안전총괄책임자이다. 평상시에는 소방시설의 관리 상태라던가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는 거주자의 긴급대피를 돕고 초기진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검직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소방관계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대부분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겸직을 하는 경우 평상시의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소방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안전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소방관련법령에 허점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함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개정해야겠다.

둘째,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의 경우 허가 이전에 공사를 개시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안전은 무시한 채 화재초기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물도 배수시켜 놓고 전원까지 차단 하여 화재의 확산을 막아 주는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무슨 일을 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가? 공사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가? 공사기간의 단축에만 급급해서 안전은 소홀히 한 채 작업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셋째, 나의 잘못은 없는지 돌이켜 보자

나는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는가?

화재 발생시에는 초동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화재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화재발신기를 눌러서 건물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119에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바로 진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피 시에는 한 손으로는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면서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안전의식이 확고한 시민이라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니 방독면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다. 대피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고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서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고 발코니나 대피공간으로 이동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서점에 들렀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란 책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정부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도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02 재난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 다시 찾아온다

일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김 정 희

2014년 5월 26일 100만 고양시의 중심부에서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가 일어나 전국민이 슬픔에 빠졌었다. 필자는 일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소방관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충격과 참담함이 큰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그 동안 안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고, 무감각하고, 비정상적 불안전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었나 다시금 생각해 보며 이런 엄청난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설마의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 자성을 해 보아야 하겠다.

안전이 기본인 사회를 만들어 후대에 이런 후진국적 사고를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안전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때늦은 후회를 해야만 하는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번 고양터미널 화재사고는 많은 복합적 원인이 혼재된 사고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하인리히법칙처럼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악습이 계속 쌓이고 또 그 사이에 부조리가 결합되어 일어난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대형 인재라는데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매사에 기본인 사회만들기에 동참하여야 하겠으며 더 이상“안전”이 모든 일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참사들처럼 후진적 사고를 서로서로 감시자가 되어 우리 모두 용납해선 안 된다.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져 있는 검은 적폐(積弊)를 일소(一掃)하는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03 안전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김 필 례

긴 겨울을 떨치고 어느덧 신록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고양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품위 있는 시민들과 아름다운 꽃의 여유가 넘치는 편안한 곳입니다.

2015년의 봄은 그 어느 해의 봄보다 더욱 찬란하고 생명의 맥동 또한 선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고양시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행복도시로 실로 역동적인 변화와 번영을 이룩해 왔습니다. 고양시가 가진 선진적인 도시 형태와 시민들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는 항상 고양시민의 긍지였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잠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도시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2014년 5월 26일 9시 2분 경 고양종합터미널에서 9명의 사망자와 115명의 부상자를 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지척에서 울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자욱한 검은 연기로 큰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저는 선거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열하는 유가족과 검은 연기가 굴뚝처럼 솟구쳐 나오는 건물 속에서 남은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사가 벌어진 지역구 의원으로써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사고현장에서 실종된 부모를 애타게 찾는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병원들을 수소문 한 끝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를 찾았지만, 3일 만에 부모가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왜 발생되었는지 반문하고 또 반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후진적 재난대책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해 시민들은 국가 지도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아직도 말끔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삼풍백화점, 위도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벌어지는 이유는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높고 멋진 대형건물들과 반짝이는 상품들로 가득한 쇼핑몰들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는 경쟁하듯 외연을 확장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나날이 성장합니다. 먹고 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화려해졌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불러온 대형 참사에서 우리는 이면의 허약한 속사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인재와 천재가 뒤섞이며 사회문화와 제도 전반의 빈곤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전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일어난 재난에는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안전하다고 믿는 안전불감증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지난 수십 년간 관행화되고 굳어진 만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안전은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원인이 될 만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불감증보다 무서운 적은 망각입니다.”

이제 백서로 발간되는 “화재진압에서 사고 수습까지 7개월간의 기록”은 때론 가슴 저린, 때론 아픈 반성의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양분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이 책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앞으로 100만 고양시의 구조와 체계를 기초부터 다시 만드는 것을 고양시 건설교통의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사후 유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원화될 수 있는 건설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에 부여된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역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4 오늘의 남의 일이 내일의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CPR교육단 [단장]

박 성 무

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응급처치 중 하나인 CPR (심폐 소생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CPR 교육단 단장 박성무입니다. 생명이란 때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며는 것, 또 내 가족이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이웃과 내 지역의 구조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남의 일이 내일의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 -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일본의 쓰나미 등) 내일의 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최선인 것입니다. 백석터미널 화재도 인적 재난의 하나로 우리는 이미 예고된 사회적 재난 중의 하나라고 생각들 합니다. 택지 개발 및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수년 전부터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예방의 4원칙 중 하나인 예방가능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은 사고발생 후 조치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고 책임자들의 책임과 형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예방을 못한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 사고는 예방(대비)이 최우선의 방패라 여기고 재난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백석터미널 화재로 사망자와 인명피해의 수가 많은 것도 우리는 이미 예고된 사고로 전초적 징후를 알면서 지역 사회의 우리 전체가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비 그리고 사전의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회피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는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차 강조합니다만 재난안전에 관한 지식과 상황 별 대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재난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대비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사회는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천을 통해 시와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일상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안전문화를 형성, 정착시켜 나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05 재난의 발생과 피해를 확대하는 비정상의 관행화를 방지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

안 태 훈

우리는 수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다 안전한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를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人災)로 사회 모든 분야에 만연된 전체 시스템 문제에 의해 발생한 것들로 밝혀졌다. 이러한 시스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급감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3월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5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재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수준에 맞춰 재난 예방 수준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예 집중함에 따라, 재난 예방 수준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는 2014년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이 OECD 국가 34개국 중 25위라고 발표하며, 현재까지 정부는 발생한 일을 수습하고 보상하는데 집중하였을 뿐,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난예방을 위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재난은 감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나는 사고는 사회가 고도화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재난들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도 기술하고 있듯이, '부적절한 안전관리 규제 및 처벌규정 미흡',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및 '사고원인조사-환류 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 초래'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로 재난의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확산되었는데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기관사가 있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때는 배가 침몰하는데 승객을 보호하지 않은 선장과 부실 구조한 해경이 있었다.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되고, 전원이 차단되어 방화셔터가 작동되지 못 하였다. 비상식적이고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으로 재난의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를 분야별 안전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야 한다. 결국 모든 인재의 책임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이 재난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저자의 개인 의견임.

06 도시의 안전

(주)건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유 윤 옥

들어가기

2014년 5월 26일 9시. 백석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마두역의 나의 사무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여 하루의 업무가 시작 되는 시간. 갑자기 정적을 깨는 다급한 소방차 소리와 구급차 소리, 그리고 경찰차 소리가 사람들을 긴장시키더니 이내 술렁이게 만들었다. 멀리서 연기가 치솟고 곧이어 방송에서 준공되지 얼마안된 백석동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나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하철은 백석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 이런 사고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가장 살기좋은 신도시”, “600년 문화의 도시”, “100만 행복도시”인 나의 도시, 우리의 도시, 고양시에서도 일어 났다는 사실이 나를 멍하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고 도시의 안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도시

“도시”란 사전적 의미로 위키백과사전에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집중으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기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로, 일산 신도시는 가능성이 강한 격자형의 도시형태이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물리적요소(hard ware)인 건축물, 도로 등 구조물과 유기적요소(soft ware)인 사람, 동선, 행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결합으로 도시는 “일하고, 휴식하고, 즐기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사고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이며, 사고란 “뜻밖에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이라고 정의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가 1970년 주장한 인간 욕구5단계 이론에 의하면 의,식,주를 요구하는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이며, 2단계가 신체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안전욕구”이며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다. 도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범죄와 사고가 있으며, 사고는 도시의 요소인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의 기능과 사람의 동선이나 본능적 행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호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고양 터미널 사고도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 마감재료의 취약성과 용접공의 안전의식 부족, 피난동선, 사람의 본능적 행동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상호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시킨 것이다.

사고대책

도시 내에서의 사고예방과 대책은 크게 도시의 물리적 요소인 건축물 분야와 유기적 요소인 사람의 행동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은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사고예방을 고려하여 사고 시에는 소방 및 피난시설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의 표현이므로 시민들이 안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여 무의식 속에 안전수칙이 각인되어 평소에는 사고예방이 습관화 되고 사고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고양 터미널 사고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안전불감 요소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안전사고 였다. “안전은 그냥 무료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의 기본욕구이자 권리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가기

도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두가지를 제안해 본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법 제35조)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를 강화하고 고양시의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소방관련 단체들과 유대관계를 정립하여 평상시 또는 유사시에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사고나 천재지변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내일을 위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용기에 말없이 격려를 보낸다.

07 화재안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실천합시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용재

최근에도 전국에서 매년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2천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건수와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4월) 이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2014년 5월),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2014년 10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2015년 1월)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피해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의 고조를 뛰어 넘어 국가의 경제적 침체에 까지 그 사고의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대형사고 후에 버릇처럼 되어버린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포퓰리즘(populism)과 경제논리 중심의 지나치게 융감한 정부의 결정에 있다.

최근 일련의 대형 화재와 사고의 원인이 고도성장의 달콤함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도 있으나 상당부분 경제 논리와 편익성 위주의 사고(思考)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며, 국가차원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화재 시 상층연소확대방지 및 피난의 중요 수단이 되는 발코니 확장을 “대피공간” 설치를 조건으로 합법화 하였다. 아파트의 특성상 대피공간은 100% 수납공간으로 전용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융감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수많은 화재안전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도심지의 좁은 이면도로에 접하여 별도의 어떠한 안전대책도 없이 고밀 · 고층화된 “도시형 생활형주택”의 건설을 가능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도하게 융감한 조치들은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안전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어려운 자체점검 제도의 맹점에 있다.

건축물의 화재대책으로 침단의 뛰어난 소방시설의 설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설치 후 유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지 ·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는 대부분 건물 소유주가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시설 특별조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차원에 무게를 두고 저가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업체는 기피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은 자칫 형식적인 외관점검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고 자체점검 후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자체점검 업체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건강검진을 통해 암 덩어리가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의사가 발견을 하고도 환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 이는 오로지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다.

셋째, 국민의 불안감을 극대화 시켜 광분하게 하고 국민을 우울감에 빠져들게 하는 언론에 있다.

많은 언론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으로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조성 국민을 광분하게하고 지나친 국민적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세월호 침몰사고 등에서 언론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듯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불확실한 정보를 앞 다투어 보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극적이고 최고조의 격한 용어(참사, 아비귀한, 생지옥, 뒤엉킨 시신들, 참혹, 불을 키운 소방헬기 등등)를 선택하여 사고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아간 측면이 강하다. 또한 대형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소방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차분하게 사고를 수습하기 불가능 할 정도로 몰아세우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가능한 확인된 객관적 사실 중심의 보도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특별히 언론에서 과격한 용어의 사용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이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한 보도 자세를 취할 때 관련 기관이 침착한 가운데서 합리적인 사고의 수습과 대처가 가능해 질수 있다.

넷째, 대형사고 후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이상한 대책에 문제가 있다.

의정부 아파트화재 후 좁은 이면도로의 주차가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되자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 버리겠다는 대책을 내세우면 어찌자는 건지?, 특히 좁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 버리면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가요? 자동차를 하늘에 주차시키라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국민을 불법주차의 범인으로 만들자는 건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더욱 놀라운 대책은 세월호 사고 후 대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전교생이 함께하는 수학여행 등 교외활동을 제한하고 소그룹으로 교외활동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여러 학교의 학생이 모여 하나의 배에 타면 안전하단 말인가? 오죽 했으면 그런 교육지책(苦肉之策)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교육당국의 어려움도 일정부분 이해는 간다.

다섯째, 화재와 사고는 대부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의 원인도 굳이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 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을 거론하지 않아도 내부공사 중에 용접작업의 불티가 화재 원인이 된 사고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자와 작업자라면 용접작업의 화재 위험성은 충분히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작업, 페인트 도색작업 중에 끈이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생각과 작업장소 인근에 소화기 비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수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08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장 호 면

이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를 진정한 교훈 삼아 우리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위험 요인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화재 등 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새롭고 그럴듯해 보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화재안전 대책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 실천에서 해답을 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의 불행한 사고에 무임승차해서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상한 집단에 이용당하는 일을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그전에 유사한 29회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회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실제 사례에서 유래한 법칙이다. 이 하인리히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할 개연성이 있었던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명해진다. 주먹구구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도출된 하인리히법칙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5년 6월에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보자. 이 건물은 지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옥상에 76톤가량 되는 설비장치를 설치하여 원래 설계하중의 4배를 초과했고, 마땅히 들어가야 할 철근이 무더기로 빠져 있었다. 이러한 부실시공과 더불어 허술한 관리가 추가 되어 천장에 금이 가거나 옥상 바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술한 작은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그 결과 붕괴 사고가 있기 전부터 에어컨의 진동 소리에 관한 고객 신고가 들어오고 벽의 곳곳에 균열이 크게 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부직원 신고와 전문가 진단을 술하게 받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잠재적 요소에 대한 무시는 결국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근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그동안 건설정책이 개발성장 위주로 추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부족, 건설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높은 안전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재래형 단순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미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숙련 및 초심자 근로자의 안전사고 증가와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초심자 경우 재해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3억~120억 원 중 · 소규모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하다. 따라서 공사규모와 금액이 적을수록 안전관리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 안전사고 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현장인력의 안전의식 결여를 들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이나 장비기사 등 현장인력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결여가 대형 사고를 유발한 경우로 사례로는 기능공이 380V 전압에 100V 전구를 사용한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와 1995년 굴착기 기사가 작업 중 가스관을 파손한 대구지하철 붕괴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사망자 9명, 부상자 115명을 발생시킨 고양시 터미널 화재의 원인도 다름 아닌 공사현장 용접 작업 중 튜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하였다. 둘째로는,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미흡이다. 가시설물 설계 미흡이나 검토 부족 등으로 가시설공사 사고율이 높은 경우이다. 예로는 2007년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 부실과 감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붕괴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에는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가 붕괴하거나, 공사 중 주변 절개지가 붕괴 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2009년 절개지 토석붕괴가 원인인 화성시 남양뉴타운 매몰사고와 터파기 공사지 지반이 붕괴된 수원시 임광 그대가 아파트 공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신기술 등에 대한 이해 및 검토 부족인데, 신기술과 외국기술이 적용될 경우, 신기술 등에 대한 이해 및 검토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로는 2007년 국내 업체가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시방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감리감독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목포 광양 고속도로 교동교 구간 강재지지대 전도 사고를 꼽을 수 있겠다.

넷째로는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을 들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80% 이하로 낙찰된 사업은 안전과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격위주 입, 낙찰 방식을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공사에 요구되는 기술과 입찰자의 경험 등을 중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이 낮은 사업은 감리와 안전을 강화토록 하였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일률적인 설계비용 지불 체계와 유사 공사임에도 낙찰률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 추진체계 등이 각종 건설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문제이다. 국내 건설시설물 중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와 예산 당국은 물론 일반 시민 들도 시설물 안전은 먼 미래의 일이므로 투자를 꺼리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설물은 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 되어 향후 20년 이내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유지관리나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긴요한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유지관리나 철거 시등의 단계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종합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발주 시부터 준공 시까지 종합적인 책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가 빈번한 가설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술자인 건설안전기술사의 가시설에 대한 설계 사전 승인 또한 필수적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자, 설계자, 감리, 시공사 모두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 해야 한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설계 · 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전안전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사 시 유발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 단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 · 강화하여야 한다. 취약공종에 대해서는 취약공종 사전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점 안전관리사항과 신기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설계자전문위원회에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안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성 검토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가시설물 설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시설물에 대한설계 표준도면, 시공상세도 예시도면도 마련하여야 한다. 가시설공사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가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유도하여 가시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 단계에서는 현재 위험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히 공사규모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 이외에 위험도, 사용자수 등이 반영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조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권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며 대형공사나 복합공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검토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 단계에서 총공사비 500억 원 책임 감리 대상 공종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은 계획의 적정성,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의 특성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강화이다. 현재 공사금액 1500억 이상 시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경력 10년 이상 1명을 2014.12까지 한시적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안전기술사 인원이 1,300여명이 확보되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력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배치를 기술사로 대체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다음은 안전 감리제 도입과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이다. 현장에 감리가 선정되어 있으나 안전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아닌 품질 위주로 감리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문인력인 안전기술자가 배치되어 관리 · 감독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검측 감리원은 등급을 신설하여, 검측업무의 전문성 제고하고 배치되는 감리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감리원을 지정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기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카드 (Green Card)에 의한 기업단위의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와 안전도 착용, 위험물 확인 등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시 일부업체에만 유리하도록 한 PQ제도 개선과 공공시설물 외에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시설물도 PQ 실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는 감리원, 현장 안전관리자 등 현장인력만을 통해 제한적이고 비상시적인 안전관리 수행공사현장에 CC-TV, 웹캠 등을 활용하여 본사 및 현장에서 안전 · 품질관리를 지원, 모니터링 하는 원격안전점검시스템 구축과 건설 안전부분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IT기술 등을 통한 안전관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건축물 철거시 중소형 및 대형 건축물 철거시 장비, 추락, 발파 등의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규모별로 건설안전기술 사 또는 건설안전기사등의 안전관리전문가를 상주 배치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철거 시에 현재 안전감리가 없고, 시공사의 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아 불안정한 작업이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철거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 작업토록 해야 하고 현재 서울시 강남구청에서만 실시 중인 건설안전전문가를 확대하여 배치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안전시설을 미비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시에 작업 중단과 안전관리비 부당 사용시 가중처벌, 안전관리비를 예산절감의 대상에서 배제,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만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위촉 시 건설안전기술사 참여 여부나 기술인력 중 건설안전기술사 몇 명이나 되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국내의 건설공사 안전제도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 관리라 규정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안전사고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시공자 중심의 안전 관리는 안전관리 사이클을 단절시켰으며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안전관리계획의 결함을 심화시켰다. 또한 부적절한 기획 및 설계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이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시공자에게 미룰 일이 아니며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등의 단계별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도의 개선만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09 화재발생 환경의 변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조 원 철

시민들의 생활문제로 생명과 재산의 문제인 화재는 현대사회에서 원치 않게, 그러나 일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굳이 재난이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이다. 많은 인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주거시설과 각종 산업시설, 그리고 연관된 수많은 재료들과 제품들, 그리고 시설물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또한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재는 발열로 인한 문제에 못지않게 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재의 발생 원인을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시설물의 고밀도화 및 고층화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다양한 시설물들이 고도로 밀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화재의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층화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시설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예방시설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고층화를 소방차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예방시설에 대한 사용의 숙련을 위해서는 주거자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자기안전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발화위험물질의 대량생산과 이동량 증가, 이동관리의 불확실성 증가

석유화학물질들을 포함한 고에너지 물질들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사용량의 증가는 이동량의 증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특히 “이동”의 역학적 메커니즘에는 “불안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용직전의 이동과 보관에 그러한 불안정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불안정을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그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구의 고밀도화

인구의 증가는, 특히 도시밀집화 현상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계획으로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서 화재에 대비할 능력을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산업시설의 공간적 배분도 화재의 예방은 물론 전체적인 화재 대응관리에도 크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4) 발화성 합성재료의 대량 생산과 사용

시민들의 일상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합성재료들의 대량 생산과 사용은 발화위험을 매우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생산과 사용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의 확립이 매우 절실하다. 생산과 사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관리규정은 또 다른 “관재”를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 역동적인 관리 규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전기와 가스의 사용 증가

현대생활의 필수품인 전기에너지와 가스에너지의 사용은 인류문명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모든 기기들이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특히 지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편리성의 지나친 추구로 생활환경까지도 전기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기의 편리성에 못지않은 문제점이 바로 고에너지의 발현이다. 순간적인 고에너지의 방출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화재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산업시설에서는 물론 가정에서의 전기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전기용품의 안전장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의 전기 사용을 염두에 둔 안전사용 용품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스 사용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스에너지의 사용은 물론 각종 가스들의 산업용 사용과 의학용 사용에서 발생하는 누출, 확산, 중독 사고도 매우 심각하기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다.

(6)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대피능력 저하

상하수도의 공급과 적절한 식품의 공급,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고, 따라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역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화재의 경우 초를 다투는 상황인지라 노령인구의 역동성 부족은 바로 생명과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시설과 화재안전 대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7) 지하공간 개발의 증대와 심도화

대심도 지하공간의 개발에 따른 공간특성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공간의 특성은 자연조명이 매우 불량 내지는 불가능한 것과 환기불량 문제이다. 따라서 인공적인 조명과 환기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른 화재문제와 크고 작은 스파크(스위치 포함)로 인한 공기질의 악화문제와 전기 시설자체는 물론, 때로는 환기불량으로 인한 습기와 가스와 전기의 상호작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문제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공간에 사용할 전기용품들에 대한 안전규정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의 조명을 위한 집광(集光)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조명 뿐만 아니라 지하 공기질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8) 사회적 불만의 표출방안 다양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의 표출방법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이 “방화”이다. 산불이 그러하고 자동차 방화가 그러하고 골목길 방화도, 쓰레기 더미 방화도, 지하철 방화도 그러하다. 갈등해소 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회적 병폐를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과로 나타나는 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들을 크게 정리하여 보았다. 단순한 화재 메카니즘에서만 보던 시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화재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화재나 가스누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만일의 경우 코와 입을 막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기로 비상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 지혜도 필요하다.

| 부록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주요상황일지

: 2014. 05. 26. ~ 06. 10

• 사망자 명단

• 사건 수사결과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자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주요상황일지 2014.05.26~06.10

05.26(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일차
주요내용	○ 09:02 : 소방서 신고접수 ○ 09:05 : 재난상황실 화재 접수되어 현장출동 (부시장, 시 안전총괄과 직원, 구청 건설과 직원) ○ 09:15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안전총괄과 등 8명) 및 현장지휘통제소 구성·운영 1. 현장지휘통제소 구성 _ 부시장, 교통안전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 건설과장, 안전도시팀장 등 2. 소방서의 긴급구조 작업 지원 ○ 09:29 : 화재진압 완료 ○ 09:40 : 지하2, 3층 지상2, 3층 인명수색 광역1호 발령 ↳ 관할소방서 인력 장비 총 출동 ○ 09:47 : 광역2호 발령 ↳ 관할소방소와 인접소방서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 장비가 총 출동 ○ 10:40 : 일산소방서장 사고관련 현장 브리핑 실시 ↳ 기자, 공무원, 주민대상 ○ 11:20 : 사고수습대책반 중식 긴급지원(300인분) ↳ 일산소방서 요청에 의거 ⇒ 시청에서 보급지원 ○ 16:30 : 긴급상황 재난사고대책 회의개최(부시장주재) 1. 재난상황실 가동지시 (안전총괄과) 2. 병원별 담당지정제 운영 _ 사망자 및 환자별 2인1조 24시간 배치 (6급, 7급 경력직원배치) ⇒ (행정지원과 인력편성 및 배치관리)	
문제점	○ 금일 긴급조치사항 (미비점) 1. 안내체계 : 일원화된 안내체계 부족(사안의 집중관리와 일원화필요) ▷ 유가족과 만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전달하여야 하나 소극적 대처로 문제발생 2. 지원체계 : 교통시설재난시 상황총괄반장 교통정책과 역할 부족 3. 사고수습 전달체계 : 안전총괄과 주도적 통제 및 지원기능 부족 4. 사고발생시 초기에 유가족을 만나 뵈고 거취장소 확보가 준비 필요하고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부족으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였음.	
05.27(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2일차
주요내용	<유족 5대 요구사항> 1. 합동분향소 마련 2. 사망자 부검 6. 1.까지 요청 (유족간 협의시) 3. 장례비용에 대한 고양시 지급보증 4. 보상추진에 대한 의견 표명 5. 사고사 100%인정 및 확인서 발급 ※ 유족 5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일 16시:30까지 답변요구 <지시사항> 합동분향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 보건소장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마련지시 (동국대 협의추진) ○ 10:30 : 15시30분 유족과의 재 면담요청(5대요구사항 답변) (일산병원 회의실과 동구청 회의실 준비하였으나 유족들이 명지병원 야외공원에서 일방적 면담요청) ○ 15:30 : 유족과 야외 면담실시(명지병원) -2차 - 면 담 : 부시장, 정책기획담당관, 보건소장과 유가족 면담 - 합의사항 : 합동분향소 동국대 장례식장으로 합의 즉시 이전 요구에 따라 합의 (5명 : 명지병원2, 일산병원2 (명지병원 김○○, 아산병원 이○○ 제외)) ○ 16:00 : 동국대 장례호실 유족간 협의 후 빈소추진 <문제점> 안치병원에서의 기 부검 지시된 사체에 대해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부분 인지 미비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경기부지사와 일산경찰서의 검찰 부검지시 동국대병원으로 변경협조로 이송 <부시장 지시사항> 중환자에 대한 6급이상 1명씩 배치 지시 ○ 16:30 : 유족들이 5.28(수) 15시 일산경찰서, 일산소방서, 고양시의 사고수습 추진사항에 대한 브리핑요청 <지시사항> 안전총괄과에 브리핑 협의추진 및 준비지시(오후4시 30) <문제점> 21시경 안전총괄과에서 경찰서 및 소방서 브리핑 불가입장 통보 ⇒ 이후 행정지원국장의 노력으로 브리핑 계획대로 추진함의 ○ 17:00 : 분향소 근무자 국장 / 호실별 과장 배치 ○ 17:00 : 신○○ 중환자사망 (백병원 → 금촌경기의료원 이송후)	

05.27(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2일차
주요내용	<유족 5대 요구사항> 1. 합동분향소 마련 2. 사망자 부검 6. 1.까지 요청 (유족간 협의시) 3. 장례비용에 대한 고양시 지급보증 4. 보상추진에 대한 의견 표명 5. 사고사 100%인정 및 확인서 발급 ※ 유족 5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일 16시:30까지 답변요구 <지시사항> 합동분향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 보건소장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마련지시 (동국대 협의추진) ○ 10:30 : 15시30분 유족과의 재 면담요청(5대요구사항 답변) (일산병원 회의실과 동구청 회의실 준비하였으나 유족들이 명지병원 야외공원에서 일방적 면담요청) ○ 15:30 : 유족과 야외 면담실시(명지병원) -2차 - 면 담 : 부시장, 정책기획담당관, 보건소장과 유가족 면담 - 합의사항 : 합동분향소 동국대 장례식장으로 합의 즉시 이전 요구에 따라 합의 (5명 : 명지병원2, 일산병원2 (명지병원 김○○, 아산병원 이○○ 제외)) ○ 16:00 : 동국대 장례호실 유족간 협의 후 빈소추진 <문제점> 안치병원에서의 기 부검 지시된 사체에 대해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부분 인지 미비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경기부지사와 일산경찰서의 검찰 부검지시 동국대병원으로 변경협조로 이송 <부시장 지시사항> 중환자에 대한 6급이상 1명씩 배치 지시 ○ 16:30 : 유족들이 5.28(수) 15시 일산경찰서, 일산소방서, 고양시의 사고수습 추진사항에 대한 브리핑요청 <지시사항> 안전총괄과에 브리핑 협의추진 및 준비지시(오후4시 30) <문제점> 21시경 안전총괄과에서 경찰서 및 소방서 브리핑 불가입장 통보 ⇒ 이후 행정지원국장의 노력으로 브리핑 계획대로 추진함의 ○ 17:00 : 분향소 근무자 국장 / 호실별 과장 배치 ○ 17:00 : 신○○ 중환자사망 (백병원 → 금촌경기의료원 이송후)	
05.28(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3일차
주요내용	○ 07:30 ~ 11:30 : 사망자 부검실시(일괄이송 후 실시) → 동국대 5명, 명지병원 1명, 일산병원 1명 ○ 11:30 : 일산병원 고 이○○씨 아산장례식장으로 이송 ○ 15:00 : 유족요청에 따른 브리핑 실시 - 브리핑 일시 : 2014. 5. 28(수) (15:00) - 장 소 : 동국대병원 본관 지하층 3세미나실 - 참 석 자 : 유족, 공무원, 기자 (약 60여명)	

05.28(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3일차
주요내용	순서	보고자	
	브리핑 안내	안전도시팀장	
	화재 진화과정 및 결과보고	일산소방서재난안전과장	
	사고원인 조사경위 및 향후일정	일산경찰서형사과장	
	사고수습대책 및 향후계획	고양시 부시장	
	질문 및 답변	참 석 자	
	※ 유족 시청 요구사항 : 익일 09시까지 장례비용 등 결과요청 ○ 21:00 : 유족면담실시 (장례비용 2천만원 합의제시하였으나 부결 － 면담 : 유족대표와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덕양보건소장, 정책기획담당관 ⇒ 유족측의 불가통보로 익일 09시까지 합의액 제시요청		
문제점	○ 사망자와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재정리 지시 : 병원측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비협조사항을 경찰서와 연계하여 해결		
05.29(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4일차
주요내용	○ 09:00 : 유족측과 장례비 협의를 위한 면담 － 장 소 : 동국대 장례예식장 사무실 － 참석자 : 도시주택국장, 정책담당관 / 유족대표5명 ※ 부시장님은 관산동 납골당 집단민원 면담으로 불참 － 유족측 장례비 제시액 : 25백만원요구 ↳ 시청 : CJ측과 협의후 통보해 주겠음.		
	○ 09:30 : 유족과의 장례비 합의 － 합의 장례비용 : 25백만원 － 발인일정 확정		

05.29(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4일차	
주요내용	연번	병 원(빈 소)		환자(사망자)		장례발인	장지
				성명	주소		
	1	동국대 병원	VIP실	정○○ (여.50)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29(목) 10:30	안산 하늘마을
	2		2호실	이○○ (남.65)	울산시 북구 염포동	6/1(일) 04:00	전북고창 선영
	3		3호실	김○○ (여.57)	황성군 둔내면 현궁로	5/29(목) 05:30	춘천 안식원
	4		6호실	김○ (남.37)	울산시 북구 매곡1로	5/30(금) 09:00	국제 공원묘지
	5		12호실	신○○ (남.56)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5/30(금) 12:30	파주 서현공원
	6	아산병원	1호실	이○○ (남.50)	서울시 (일산병원→아산병원 이송)	5/30(금) 04:20	강릉완산리 납골당
	7	명지병원	5호실	김○○ (여.48)	덕양구 창릉동	5/29(목) 11:40	벽제하늘문 납골당
	8	경기의료원	1호실	신○○ (여.71)	파주시 (백병원→파주 경기의료원 이송)	5/31(토) 07:00	파주 낙원묘지
○ 09:40 ~ 14:30 : 담당자별 장례비용 지급확인서 징구 (사망자 8명 모두합의 확인서 받음) ○ 10:30 ~ 18:00 : 중환자 방문 (부시장 · 정책기획담당관)							
상태	병 원		성명	면담내용			
중상	일산병원(중환자실)		정○○(44)	중환자실 면회(가족 면회시간만 방문)			
	일산병원(중환자실)		이○○(53)	중국동포인 이○○ 여동생 위로			
	한강성심(중환자실)		박○○(39)	대안학교 교사로 가족 위로 (심리치료사 요청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상담사 연계)			
	한강성심(2308호)		김○○(17)	수술비 등 문의사항 수용/심리치료사 배치			
	백병원(중환자실)		김○○(39)	방문위로와 심리치료사 배치(배우자 직장 알선 검토 필요)			
수범사례	1. 고 김○씨의 어려운 여건을 부시장(복지과장)의 노력으로 난관해소 • 국제공원묘원 현지사업자와 직접 협의(장례비용의 잔여금과 부족분 5백만원은 부시장 알선으로 해결), • 왕복항공료지급에 대한 협의로 비용지급결정, 운구운반 개인지원 – 불이학교 상담치료사의 지속적 상담요청에 따라 운영반 편성 상담지원 (일산동구보건소 상담사-전문상담의 좋은 평가)						

05.31(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6일차																
주요내용	○ 15:00 : 사망자 김○의 모 김○○ 동향 - 파주시 운정지구에 내임대주택에 거주, 6개월째 임대료(250만여원) 체납됨 ⇒ 중국에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있어 2개월 내에 처분하여 납부할 계획으로 나에서 퇴거를 유예.																		
	○ 18:00 : 고양시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상황근무부서 조정 - 공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대중교통과 제외(담당자 비상연락망 유지) - 시민소통담당관, 주택과, 보건소는 상황근무 유지																		
	○ 병원 지원근무 현황 - 5. 31. 12:00현재 지원인력 누계 235명(장례 123명, 부상자 112명)																		
06.01(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7일차																
	○ 04:40 : 사망자 이○○(동국대병원) 발인(전북 고창 선영 안장).																		
	○ 17:30 : 경상 1명 추가 발생(허○○, 남, 45세) 27일 속초 보광병원 치료후 귀가																		
	○ 2014. 5. 31.(토)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고양시에서 요구한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원 요청”건에 대하여 보고서외 과외건으로 내부논의 하였고, 6. 2(월) 2차 논의한다는 고양시에서 파견된 직원의 동향 보고임.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관련 “사고수습대책반 구성현황” 관련부서 통보 (6개반 8과 21명으로 구성)																		
	○ 사고수습 지원반 구성 현황																		
	<table><tr><td>총괄상황지원반</td><td>환자지원반</td><td>시설정상지원반</td><td>협의체구성반</td><td>보상지원반</td></tr><tr><td>안전총괄과</td><td>보건소</td><td>대중교통과 지역경제과</td><td>안전총괄과</td><td>시민소통담당관실</td></tr><tr><td>－반별 상황관리 －운영조 편성</td><td>－부상자 심리치료 －병원 및 환자관리</td><td>－터미널 운영지원 －상가 정상운영지원</td><td>－관련 업체소집 협의체 구성</td><td>－보상협의 지원 －법률자문 －피해보상 중재</td></tr></table>				총괄상황지원반	환자지원반	시설정상지원반	협의체구성반	보상지원반	안전총괄과	보건소	대중교통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시민소통담당관실	－반별 상황관리 －운영조 편성	－부상자 심리치료 －병원 및 환자관리	－터미널 운영지원 －상가 정상운영지원	－관련 업체소집 협의체 구성	－보상협의 지원 －법률자문 －피해보상 중재
총괄상황지원반	환자지원반	시설정상지원반	협의체구성반	보상지원반															
안전총괄과	보건소	대중교통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시민소통담당관실															
－반별 상황관리 －운영조 편성	－부상자 심리치료 －병원 및 환자관리	－터미널 운영지원 －상가 정상운영지원	－관련 업체소집 협의체 구성	－보상협의 지원 －법률자문 －피해보상 중재															
	※ 기타 지원반 : 공보담당관(언론홍보)																		

06.02(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8일차
주요내용	○ 10:10 : 사망자 김○○ 유가족(남편)이 사망자에 대한 의사자지정 또는 시민상 상신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 요구와 사고당시 녹취록 제공 요청 － 일산소방서 신고녹취록 확인 공문요청 회신결과 ① 녹취록을 확인하였으나 다수의 신고로 인해 故김○○님의 목소리는 판별 불가함 ② 본인의 목소리 판별 불가로 신청자가 직접 소방서 내방하여 정보공개 요청 후 녹취록 청취 요망 (사전 방문일시 유선통보) － 6. 2. 22:20 남편 김○○ 본인에게 전화 통보 － 시민상 상신 여부 추후 검토하여 결정 ○ 16:00 : 경상자 2명 추가 발생 접수 ○ 18:00 : 보상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특별지원요청 서한문 발송(고양시 시장권한대행 최봉순) ○ 18:10 : 사고수습지원반원 18명 교육 － 안전총괄과장 주재로 피해자 전화응대 요령, 부서별 역할 확인, 입원자 진료상태 확인 및 보호자 의견 청취 등 교육	
06.03(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9일차
주요내용	○ 15:00 : 사고수습 보상협의체 구성 관련 회의 － 장 소 : 일산동구청 소회의실(15:00~16:40) － 참석인원 • 시 :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정책담당관 • 관련업체 : CJ푸드빌, 쿠시먼, 삼구INC, 맥쿼리(건물자산운용사) 등 － 회의결과 • CJ푸드빌 측 : 시공사(동양공무), 하도급회사(명인ENC)는 대변할 수 있으나 건물관리업체도 책임이 있으므로, ⇒ 시공사측1개사, 건물관리측1개사를 대표로 구성 요구 • 쿠시먼(건물관리), 삼구INC(건물시설 안전관리) 거부 • 맥쿼리(건물자산운용사) 동참 의향 있음 ※ CJ푸드빌 의견 : 내일(6/4)부터 각 회사와 개별 접촉예정임시에서도 쿠시먼과 삼구 INC에 동참 독려요구 ○ 16:00 : 김○○(여, 53세) 일산병원 6월 3일 16:00 퇴원	
06.04(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0일차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06.05(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1일차
주요내용	○ 10:00 : 경상 입원자 1명 퇴원(파주병원) : 이○○(남,77세, 사망자 신복자 남편) ○ 14:00 : 경상 입원자 1명 퇴원(일산병원) : 신○○(여,22세) ○ 17:00 : 국과수 감식 종료(발화지점은 계속 감식) ○ 2014.6.5. 협의체 구성을 위한 촉구 공문 발송(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 ○ 2014.6.5. 건물관리업체 중 맥쿼리를 협의체 대표로 지정예정 통보 － 건물관련업체 3개 업체(맥쿼리자산운용,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 삼구INC) 중 2014. 6. 9(월)까지 협의체 대표 결정 통보가 없는 때에는 고양시에서 맥쿼리를 건물관리 부분의 협의체 대표로 지정함을 통보. ○ CJ푸드빌 직원 시청 방문 : 2014. 6. 5. 20:30 － 방 문 자 : CJ푸드빌 서○○ 이사 외 1명 － 면 담 자 : 교통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 CJ푸드빌 요청사항 ㉠ 신속한 보상 진행을 위하여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유가족 또는 보호자와 보상업무가 협의되도록 하겠음. → 먼저 업체에서 유가족 및 보호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도록 요청 ㉢ 고양시에서 선정한 손해사정인이 보상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6개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주기를 요청함 → CJ푸드빌에서 관련 업체의 위임장을 받아 대표권을 행사하는게 맞다고 봄	
06.06(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2일차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06.07(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3일차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06.08(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4일차
주요내용	○ 15:00 : 피해자대책위 합동, 고양시장 면담 － 장 소 : 시민컨퍼런스룸 － 참석자 : 고양시장 외 8명 피해자측 : 11명 (사망자 정○○ 가족, 중상자 정○○, 김○○ 3명 미참석) － 내용 : 고양시 요구사항 9가지 등 1. 사고 수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 일정 픽스 2.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있었던 공식 중간 브리핑 이후, 고양시청에서 해온 사고 관련 수습 내용 보고 3. 사고 수사 종결까지 유가족 및 부상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 시청 내 마련 여부 4. 고양시청이 사고와 관련한 모든 대응의 주체가 되겠다는 말에 따른 향후 대처 내용 5. 고양종합터미널과 관련하여 보험을 든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보험사를 통해 들었는지. 보험 관련한 내용	

06.08(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4일차
주요내용	6. 고양종합터미널 등기부등본 내역 준비 7. 피해자 가족 및 직접적인 피해자의 심리/정신과 치료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 8. 만약 수사가 피해자합동위원회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피해자합동위원회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 고양시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협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논의	
06.09(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5일차
주요내용	○ 쿠시먼앤웨이크필드코리아 직원 시청 방문 : 2014. 6. 9. 10:00 - 방문자 : 쿠시먼 신○○ 부장 외 1명 - 면담자 :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 내 용 : 쿠시먼이 가입한 보험증권 제출 요청, 건물관리관련 4개사의 역할 차트 설명자료 요청 ○ 화재사고 부상자 등 치료요청 공문발송 (고양시 → CJ푸드빌) ○ 피해자합동위원회 협조요청 공문요청 (고양시 → 일산경찰서) ○ 보험가입현황 제출, 공문요청 (고양시 → 한국증권금융 외 6개사) ○ 보험가입사실확인요청, 공문요청 (고양시 → 새마을금고중앙회) ○ 사고수습 지원 건의서에 대한 소방방재청 화신 공문 접수 (지원거부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양시 자체적으로 해결 바람)	
06.10(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6일차
주요내용	○ 11:00 : 맥쿼리, 한국터미널운영 관계자 시청방문 면담 - 일 시 : 2014. 6. 10. 11:10~ - 장 소 : 교통안전국장실(국장, 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팀장) - 방문자 : 맥쿼리자산운용(주) 전무 박○○, 한국터미널운영(유) 대표 이○○, - 면담내용 •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사고수습 노력에 감사드림 • 관련 업체중 건물소유, 관리부분의 맥쿼리, 쿠시먼, 삼구, 한국증권금융 역할설명 • 「화재로 인한 저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 한국터미널운영(유), 각 임차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체결한 보험증권 사본 제출 • CJ푸드빌이 대표권을 가지고 고양시 및 피해자와 보상협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4개사 위임장을 각각 또는 1장에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고양터미널 지배구조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를 제출 ○ 18:00 : 6. 8. 피해자합동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 외 6명에게 e-mail 발송 완료(요구사항, 보험가입 증권)	

06.11(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7일차
주요내용	○ 경상자 추가 발생 : 2014. 6. 9. 공문으로 병원에 조회결과 경상자 4명 추가 확인 ○ 보상협의체 선정 동향 - 원인자측 • CJ푸드빌이 주관사가 되어 피해자측과 협의하는 보상방법을 건물소유, 관리 관련 업체 (맥쿼리 외 3개 업체)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각사 내부 검토중. → 6월 12일 중 원인자측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피해자측 • 유가족 대표 선정 : 미정(2014. 6. 14.(토) 선정예정) • 중, 경상자 대표 : 김○○(화상환자 김○○의 부) ○ 피해자합동위원회 동향 - 변호사 선임을 위한 피해자합동위원회 투표(2014. 6. 11. 저녁) - 일산경찰서의 수사상황 청취 후 선임변호사 방문 예정(2014. 6. 14.) - 피해자 대표 일산경찰서 방문 예정(2014. 6. 14.(토) 시간미정) - 사장님 추가 면담 등은 6. 16.(월) 이후 요청한다는 피해자합동위원회 의견 ○ 기타사항 - 일산경찰서 화신 공문 접수(피해자합동위원회 수사상황 브리핑 요구건) - 화신내용 : 피해자 대표가 일산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사상황을 설명 하겠음	
06.12(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8일차
주요내용	○ 보상협의체 선정 동향 - 원인자측 • 2014.6.12 13:00경 원인자측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 및 CJ푸드빌이 주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서면 통보(CJ푸드빌 ↔ 고양시) ※쿠시먼을 제외한 6개 업체가 CJ푸드빌을 주간사로 하는데 동의함. • 손해사정인 계약 : CJ푸드빌 ↔ 세종손해사정(주) - 피해자측 • 유가족 대표 선정 : 미정(2014.6.14(토) 선정예정) • 중상자 대표 : 김○○(화상환자 김○○의 부) ○ 피해자합동위원회 동향 - 변호사 선임 결정(법무법인 대륙 아주-2014.06.11) → 정식계약 : 2014. 6. 14. 예정 - 일산경찰서 방문 • 방문일시 : 2014. 6. 14.(토) 10:00 ~ • 방 문 자 : 합동위원회 13명(합동위원회에서 경찰서에 사전 고지) ※유은혜 국회의원 경찰서 방문시 동행을 합동위원회에 제의 했으나 합동위원회만 방문하기로 결정	

06.12(목)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8일차
주요내용	- 이○○(중상자) 가족 시정 방문 - 방문자 : 이○○(여동생), 이○○(딸) - 일시/장소 : 2014. 6. 12. 11:00 /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 면담자 : 안전도시팀장, 부팀장 - 면담내용 :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5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CJ측에 요청하여 주기를 희망함. - 검토(해결방안) 1안> 피해자 합동위원회 대표(중상자 보호자 김○○)에게 변호사와 계약되면 착수금을 후불로 처리되도록 요청(6. 14. 변호사 계약 예정) 2안> CJ푸드빌과 협의하여 착수금 지불 ※보호자에게 1안>으로 안내함.	
06.13(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19일차
주요내용	- 보상협의체 진행사항 - 손해사정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 - 손해사정사 : 세종손해사정(주) - 법률대리인 : 법률사무소 호크마 (대표 변호사 김○○, 02-532-6804) ※선정 내용을 피해자합동위원회 7명에게 e-mail 안내	
06.14(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20일차
주요내용	- 피해자합동위원회 일산경찰서 방문 동향 - 일시 : 2014. 6. 14.(토) 10:00~11:20 - 방문인원 : 16명 - 답변자 : 형사과장(답변내용 전달자 : 일산경찰서 정보관 이○○) - 질문내용: 1.화재원인이 무엇인지? → 용접공사중 가스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추정 2.수사는 언제 끝나고 수사발표는 언제 할 것인지? → 6월말이나 7월초에 1차 수사발표 하겠음 3.사망자의 사망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 인명구조한 소방서에 의하면 2층 터미널 매표소 입구와 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되었음 4. 피해자의 분실품이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찾을 수는 있는건지? → 10개를 보관중에 있으며 보호자가 찾아오면 신분확인 후 전달하겠음	

06.14(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처리일지	사고 20일차
주요내용	5. 손해사정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건지? → 확인해 보겠음 6. 고양터미널에 대한 신축과정부터 수사해 달라 → 전 과정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음 7.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건물관리자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8. 우레탄이 탔다고 했는데 내장재 사용은 적법하게 됐는지? → 건축시 우레탄을 사용했는데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9. 대수선 허가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조사했으나 위법사항 발견하지 못함 10. 방화셔터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음 11. 화재 비상벨은 울렸는지? → 비상벨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층별로 울렸다고 함 12. CCTV는 작동되었는지? → 화재발생 즉시 정지됨을 확인함 13. 소방설비는 제대로 가동되었는지? → 국화수의 감정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음 ○기타동향 -11:30~16:50 : 피해자 가족이 일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합동위원회 자체 회의 후 해산 -회의내용 • 변호사 선임 및 합동위원회 대표 선임건 • 6.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피해자 모임을 다시 갖기는 어려우니 카톡으로 변호사와 대표 선임건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함	

사망자 명단

일련번호	성명	발인병원	발인일시	비고
1	김○○	동국대병원	05. 29. 05 : 30 발인	춘천안식원
2	정○○	동국대병원	05. 29. 10 : 30 발인	벽제승화원 → 안산 하늘공원
3	김○○	명지병원	05. 29. 11 : 40 발인	벽제승화원 → 벽제 하늘문 납골당
4	이○○	현대아산병원	05. 30. 05 : 00 발인	성남연화장 → 강릉 완산리 선영
5	김○	동국대병원	05. 30. 09 : 40 발인	성석동 국제 공원묘지
6	신○○	동국대병원	05. 30. 12 : 00 발인	벽제승화원 → 파주 서현공원
7	신○○	파주금촌의료원	05. 31. 07 : 20 발인	파주 낙안공원 예정
8	이○○	동국대병원	06. 01. 04 : 40 발인	전북 고창 선영 예정
9	김○○	백병원	10. 06. 11 : 00 발인	하늘문(벽제동) 납골당

사건 수사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자료)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주책임자 :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오○○
(전화 031-908-7152)

보도자료 2014. 11. 6.

자료문의 : 형사제2부장실
전화번호 : 031-908-7590
팩 스 : 031-909-4600
부책임자 : 형사2부장 심○○

제 목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관련 고양시청 공무원 직무유기혐의 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 고양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점을 계속 수사하여, 고양시 ㄱ과에서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최초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2. 1.부터 2014. 5. 26.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일산소방서 관내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냄
- 그에 따라 검찰은 합동점검 담당자로서 약 1년 6개월 간 14회에 걸쳐 합동점검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혐의로 고양시청 ㄱ과 공무원 피의자 A○○(50세, 7급)를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함과 아울러,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양시청 前·現 ㄱ과장 2명, 팀장 3명, 담당자 1명 등 ㄱ과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가 개선되도록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경기도에 수사결과를 통보함

1. 피고인

- A○○(50세, 7급 주무관)
- 2011. 9. 1.부터 2013. 6. 10.까지 고양시청 ㄱ과 ㄱ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임

2. 공소사실

-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2010. 10. 1.발생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층건축물의 임의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상존함에도 피난·방화시설 등 건축물 안전 관리에 관한 권원이 소방서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 9. 1. 소방·건축이 일원화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례적으로 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을 마련함
- 위 정례화 지침 제6조 제1항에는 소방 관련 점검사항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 확인사항을 규정하면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 점검, 피난시설, 방화구획, 계단,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의 기준 적합성 점검 등 건축부서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건축부서에서도 정례적으로 소방서와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의무화함

-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위 정례화 지침을 마련한 후 경기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 정례화 지침의 마련사실과 지침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하면서 합동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함

- 이에 경기도는 매년 1월 재난안전과를 통해 각 소방서에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 건축 담당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주택정책과를 통해 각 시군 건축 담당 부서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와의 합동점검에 적극 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소방서를 통해 일괄적으로 합동 점검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 위 공문 내용에 따라 일산소방서와 고양시 ㄱ과는 매년 2월경 합동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3월경 일산소방서에서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고양시 ㄱ과로 발송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문을 모두 수령하고 일산소방서 담당자와 합동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며,또한 합동점검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건축·소방 합동정례점검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일산소방서와 합동점검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소방서의 경우 고양시청과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일산소방서의 경우 고양시청과 먼 거리에 있어 이동상의 문제 등으로 합동점검에 임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위 정례화 지침에 따른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에 단 한차례도 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14회에 걸쳐 직무유기

3. 수사 경과

- 2014. 9. 16.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 관련 피의자 7명 구속 기소,18명 불구속 기소,피의자 A○○ 분리결정
- 2014. 9. 17.-10. 17. : 고양시청 공무원, 일산소방서 소방관 등 참고인 20명 조사 및 일산소방서 합동점검 관련 자료 일체 확보
- 2014. 11. 6. : 피고인 A○○ 불구속 구공판

4. 비위사실 통보

- 비위사실통보 대상자
 - －B○○(55세, 전 ㄱ과장, 5급, 2012. 1. 1.부터 2012. 9. 3.까지 근무)
 - －C○○(57세, 현 ㄱ과장, 5급, 2012. 9. 4.부터 2014.현재까지 근무)
 - －D○○(53세, 전 ㄱ관리팀장, 6급, 2011. 4. 4.부터 2013. 8. 11.까지 근무)
 - －E○○(55세, 전 ㄱ관리팀장, 5급, 2013. 8. 12.부터 2014. 1. 21.까지 근무)
 - －F○○(47세, 전 ㄱ2팀장, 6급, 2011. 4. 4.부터 2014. 2. 10.까지 근무)
 - －G○○(39세, 전 ㄱ관리팀, 8급, 2013. 6. 1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

- 비위사실 요지
 - － 고양시청 ㄱ과는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
 - － 이에 대해 ㄱ과장과 팀장들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후임자인 G○○(8급)도 약 9회에 걸쳐 일산소방서와의 합동 점검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불구속 구공판한 A○○(7급)과 달리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함

5. 수사의 의의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도 결국 그 조치사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하여 2012년부터 전국에서 정례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고층건축물 등 합동정례점검]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남

-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 국토 교통부, 소방방재청, 경기도에 통보함으로써 소방·건축 합동 점검이 공문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6. 참고 사항

- 지난 9.16.기소된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의 공판은 2014. 10. 6.부터 집중심리를 통해 매주 2회(월요일, 수요일) 진행되고, 현재 까지 공판준비기일 2회, 공판기일 4회를 통해 증인 9명을 신문하는 등 앞으로 약 50여명의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사검사 3명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증거조사를 직관함

-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하여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17. 11: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주책임자 :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오○○
(전화 031-908-7152)

보 도 자 료 2014. 9. 17.
자료문의 : 형 사 제 2 부 장 실
전화번호 : 031-908-7590
팩 스 : 031-909-4600
부책임자 : 형사2부장 심○○

제 목 : ‘고양종합터미널’화재 사건 수사결과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2014. 5. 26.09:00경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터미널 직원 및 이용객 등 8명이 사망하고,6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수사하여, 9.16.용접 작업자, 하도급업체, 시설관리업체 담당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및 관련업체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작업자,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하수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수급업체,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무리한 공사를 발주하고 지시한 발주업체, 공사의 안전성 검토 및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자산관리업체 및 시설관리업체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낳은 또 하나의 인재임
-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경찰, 소방서,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공사발주자와 중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 의견도 건의하였음

I.수사 경과

- 2014. 5. 26.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발생 및 수사대책본부 가동
- 2014. 5. 27. 화재현장 감식, 변사체검시 및 부검 지휘
- 2014. 5. 28. 노동청 및 경찰서 면담, 피해자지원 대책회의
- 2014. 5. 30. 관련업체 및 관련자 휴대전화, 노트북 등 압수수색
- 2014. 6. 05. 고양종합터미널 현장 검증
- 2014. 6. 25. 화재 전문수사위원 자문회의 개최
- 2014. 7. 24. 고양종합터미널 실태조사 지휘
- 2014. 8. 14. 증거보전 실시
- 2014. 8. 21. 피의자 7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 2014. 9. 16. 피의자 7명 구속 기소, 18명 불구속 기소

II.수사 결과

1. 피해 현황

- 인적 피해 : 화염 · 유독가스로 인해 사상자 69명(사망 8명, 중상 5명, 경상 56명)발생
- 물적 피해 : 현재까지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486억 원 상당의 영업 손실 발생

2. 화재 발생 원인

-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누출된 가스가 작업 중인 배관 사이로 새어나와 용접불꽃에 붙어 발화된 후 가스배관으로부터 77cm 위쪽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함
- 가스 누출 원인은 가스 중간밸브 위쪽에서 제연경계벽 설치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발로 밟아 개방시킨 것으로 확인
- 필요서류 제출 미비로 대수선 착공신고와 수리통보가 늦어졌음에도, 2014. 7. 1.지하 1층 푸드코트 영업 개시일을 맞추기 위하여 허가 이전 공사를 개시하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가스공사 및 소방공사 등 각종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를 야기, 대형 참사로 이어짐

3. 화재 확산 원인

- 발화된 불이 천장 우레탄에 옮겨 붙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지하 및 지상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발화지점인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불과 58초 만에 확산
-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 초기 진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환으로 인하여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루어져 지상 2층 화장실, 매표소 등 밀폐공간에 있던 피해자들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면서 다수의 사망 피해자 발생

III.주요 과실 내용

1. 화재 발생과 관련된 직접 과실

- ① 배관연결방법에 대해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과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
- ②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가스 누출방지 조치(캡막음 등)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과실 (동규칙 제240조)
- ③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 하지 아니하고, 비산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동규칙 제241조)

2. 화재 발생 위험을 가중시킨 과실

- ① 용접기능사 등 자격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② 근로자들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동규칙 제241조)
- ③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수선공사, 가스배관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발주한 과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2항)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업체	성명 (직책)	처분결과	죄명	공소사실 요지
ㄱ	A○○ (41세, 시설팀 차장)	불구속 기소 ※ 법원, 구속영장 기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인프라공사 총괄 담당자 로, (1) 공사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2) 공사기간 단축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위험한 공사를 야기, (3) 종합적인 공사계획 없이 소방 시설이 차단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 진행, (4)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전 소방감리자·소방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공사 진행, (5) 공기를 맞추기 위해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 (6) 가스시설공사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공사 발주
	B○○ (35세, 인테리어팀 과장)	불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인테리어공사 총괄 담당자 로, (1) 공사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2) 공사기간 단축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위험한 공사를 야기, (3) 종합적인 공사계획 없이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에서 가스배관공사 진행, (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 소방감리자·소방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공사 진행, (5) 공기를 맞추기 위해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 (6)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공사 발주
	ㄱ (법인)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의자의 종업원인 B○○이 업무상 소방시설 공사업법위반 행위를 함
ㄴ	C○○ (46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설비공사 수급업체 대표이사 로, (1) 공기단축을 위해 스프링클러 전체를 퇴수한 상태로 공사 진행, (2)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 소방기술자 미배치 상태에 소방공사 진행, (3) 하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미이행, (4) 자격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소방공사와 가스배관공사를 총괄하는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
	D○○ (57세, 현장소장)	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설비공사 수급업체 현장소장 으로, (1) 공기단축을 위해 스프링클러 전체를 퇴수한 상태로 공사 진행, (2)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 소방기술자 미배치 상태에 소방공사 진행, (3) 하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미이행
	ㄴ (법인)	불구속 기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자의 종업원인 D○○이 업무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함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업체	성명 (직책)	처분결과	죄명	공소사실 요지
ㄷ	E○○ (61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하수급업체 대표이사 로, (1) 가스누출방지조치 미실시, (2) 소화용구 미비치 및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3)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4) 안전교육 미실시
	F○○ (37세, 현장소장)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하수급업체 현장소장 으로, (1) 가스누출방지조치 미실시, (2) 소화용구 미비치 및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3)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4) 안전교육 미실시
가스 배관 작업 자	G○○ (54세, 작업반장)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으로, (1) 가스누출방지조치 미실시, (2) 소화용구 미비치 및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3)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4) 자격 없는 인부 고용, (5) 안전교육 미실시
	H○○ (51세, 용접공)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용접공 으로, (1) 가스누출방지조치 미실시, (2) 소화용구 미비치 및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3)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I○○ (46세, 배관공)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배관공 으로, (1) 가스누출방지조치 미실시, (2) 소화용구 미비치 및 비산방지조치 미실시, (3)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J○○ (48세, 관리소장)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시설법위반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이자 총괄재난관리자 로, (1) 스프링클러 퇴수, (2) 방화셔터 전원 차단, (3) 화재자동연동장치 차단
ㄹ	K○○ (45세, 방재주임)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시설법위반	시설관리업체 방재주임이자 소방안전관리자 로, (1) 스프링클러 퇴수, (2) 방화셔터 전원 차단, (3) 화재자동연동장치 차단
	ㄹ (법인)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법위반	피의자의 종업원인 J○○, K○○이 업무상 소방시설법위반 행위를 함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업체	성명(직책)	처분결과	죄명	공소사실 요지
□	L○○ (51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소방시설공사인 방화셔터공사를 하도급,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대수선공사
	□ (법인)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자의 대표이사 L○○이 업무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함
ㄴ	M○○ (51세, 실 운영자)	불구속 기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종합건설업면허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고,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림
	N○○ (54세, 건설기술자)	불구속 기소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ㄴ (법인)	불구속 기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의자의 운영자 M○○이 업무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행위를 함
ㄸ	O○○ (45세,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소방시설공사 시행, 건설업면허 없이 대수선공사 진행
	ㄸ (법인)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자의 대표이사 O○○이 업무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함
○	P○○ (49세, 현장소장)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법위반	공사현장의 스프링클러 차단
	○ (법인)	불구속 기소	소방시설법위반	피의자의 종업원인 P○○이 업무상 소방시설법위반 행위를 함
ㅈ	Q○○ (55세, PM파트 부장)	불구속 기소 ※법원, 구속영장 기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자산관리업체 부장 으로, (1)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 승인 (2) 소방시설 수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방시설차단 상태 방치
	R○○ (29세, PM파트 사원)	불구속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자산관리업체 사원 으로, (1)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 승인 (2) 소방시설 수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방시설차단 상태 방치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기소부분**은 위 별지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피고인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2014. 5. 26. 09:00경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의 푸드코드 영업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누출된 가스가 연소되며 화재가 발생하고 화염 및 유독가스가 확산되며 사망 8명, 중경상 6명이 발생한 것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 '소방시설법'으로 기재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고양 종합 터미널]

화재사고 백서

발 행 처 | 고양시 시민안전교통실 시민안전과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대 표 전 화 | 031) 8075-2119
www.goyang.go.kr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본 제작물은 고양시 내부용입니다.